

최종보고서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Food
Inspectio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Food
Inspection

정기혜 윤시몬

김영래 김정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제 출 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이 보고서를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11.

과 제 명: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정기혜

참여연구자: 윤시몬, 김영래, 김정선

요약

I. 제목: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배경

1.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날로 확대되는 여러 종류의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식품안전 검사제도를 효율화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이며, 지난 3년간 부적합 처분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품목과 검사항목을 조정함이 이 연구의 세부목적임.

2. 연구배경

- 1995년 WTO 출범 이후 각국의 식품안전은 전 세계적인 공통과제가 되고 있으며, 자국의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 도입 및 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가 바로 식품검사제도로 검사제도는 다른 제도와는 달리 시기적으로 검사품목, 검사항목에 관한 시의성 있는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
- 2000년 이후 변화된 식생활 등에 기인하여 지난 3년간 수검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품목, 검사항목을 대상으로 기존의 검사품목,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실시한다면 식품검사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하여 일본의 검사명령제도 등 선진화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향후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식품분야 개선을 위하여 현재 중복된 법령, 조직에 관한 효율화를 위한 심도 있는 제도 및 관련 법령의 검토가 요망됨.

Ⅲ. 연구개발의 내용

1. 식품검사제도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첫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식품의 검사제도 현황 파악
- 둘째, 검사제도 관련 규정 검토
- 셋째,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2.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실시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첫째, 일본, 미국, EU 등의 식품검사제도 현황 파악
- 둘째, 국내 식품검사제도 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부적합 처분 품목 및 위해중심 검사항목으로의 개정

- 첫째, 최근 3년간 식품검사결과 분석 및 부적합 항목, 식품 등 분석
- 둘째, 식품검사제도 항목, 품목 개정안 도출

4.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 첫째, 검사관련 항목, 품목 조정
- 둘째, 외국의 제도 중 도입가능 제도 검토
- 셋째, 항목조정 등에 필요한 관련 법 제·개정 방안 모색

IV. 연구방법

1. 기존자료, 문헌 고찰 및 분석

- 우리 나라 식품위생법 및 일본 등 외국의 관련 법을 검토하여 bench marking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식품검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기존 관련 연구 보고서 검토하며, 부적합 처분결과 분석을 위하여 부적합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외국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 및 외국제도에 관한 기존 보고서를 수집, 정리함.
- 분석한 자료는 최근 3년간(2000년 7월부터~2003년 6월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806,389건(미생물권장규격, 수입 식품검사 제외)의 식품 등을 검사한 실적임.

2. 관련 회의 개최

-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Brain Storming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및 연구진, 식약청 담당자들, 외부연구진과 연구추진 과정상 현안에 관한 수시 간담회의를 개최함.

3. 외부 전문가 원고 청탁

-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관리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외국의 최신 현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4. 선진 외국의 검사제도 운영 자료 수집 및 현장 견학

- 일본의 검사제도 현황과 최근 관련법의 개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의 동경도, 식품위생협회, 국가식품안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식품검사제도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음.

V. 연구 결과

1. 식품위생법 관련 내용

- 식품검사제도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음.
- 출입, 검사, 수거 와 식품위생검사기관, 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있음.
- 식품의 수거검사업무의 집행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실시하고, 지방식약청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정부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정기, 비정기적인 수거검사와 더불어 민간 검사기관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등의 검사방법에 의해 식품검사가 수행되고 있음.

<표 1> 식품검사관련 식품위생법체계

구분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	제18조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지정	제20조 식품위생감시원
			제20조 2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입검사 등	제16조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지정	-
	제13조 수거량·검사의뢰등		
	별표7 식품 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별표7의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관한규정		
	제14조 검사방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2 출입·검사·수거 등	-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4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6조의2 명예식품위생감시 원의 위촉방법 등
기타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

2. 부적합 처분 결과 분석

○ 부적합 처분 대상 품목 순위

- 2003년 6월까지 3개년도 수거검사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부적합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제품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식용유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의 순으로 분석됨.
- 다빈도 섭취식품에 분류되는 어육제품, 김치절임제품, 면류, 유제품류, 두부류 및 묵류는 비교적 부적합처분 실적이 하위인 것으로 분석됨.
- 일본에서는 부적합 처분 실적이 높은 제품으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류와 식육제품에 관한 국내 부적합 실적은 중위권으로 나타나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표 2> 부적합 처분 대상품목 순위

순위	품목	순위	품목
1	식용유지	14	식품별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
2	건강보조식품	15	식품첨가물
3	특수영양식품	16	다류
4	얼음	17	과자류
5	주류	18	김치절임식품, 기타
6	아이스크림류	19	당류, 수산물
7	인삼제품류	20	면류
8	건포류	21	유가공품
9	기구·용기포장	22	어육제품
10	음료류	23	두부류와 묵류
11	조미식품		
12	농산물		
13	식육제품		

○ 식품별 부적합 검사항목 순위

- 품목별 부적합 처분비율이 높게 나타난 검사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면 식품의 안전 수준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화될 수 있을 것임.
- 각 품목별 우선 검사항목에 관한 결과는 본문 <표 3-4>에 제시되어 있음.

3. 중복 법령 및 업무 내용

- 우리나라는 현재 광범위하고,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 식품관리를 식품위생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주세법, 학교급식법 등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수의과학검역원),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국세청 등이 관련되어 있음.
- 심지어 교도소의 단체급식은 법무부, 군인의 단체급식은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민이 섭취하는 농수축산물을 포함한 식품은 수많은 법령과 조직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식품검사제도와 관련한 기관으로는 지방식약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진흥원 등이 있음(표 3 참조).

<표 3> 출입·수거검사 중복 현황

부처	근거법령	내용
식약청	식품위생법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검사 및 기획단속: 지방청 및 본청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검사: 시·도 및 시·군·구
농림부	축산물 가공처리법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다만, 작업장(도축, 집유, 축산물가공업 및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판매업을 제외한 판매·유통단계의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약청
	양곡관리법	○ 시·도 및 시·군·구
	인삼산업법	○ 연근표시·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 채집, 수입 : 자체검사기관 또는 인삼류검사기관
해수부	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정해역: 국립수산물과학원 ○ 생산·가공시설: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수산물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품질검사원 및 수산물과학원 • 해역서식패류: 국립수산물과학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시·도
국세청	주세법	○ 세무서
산자부	염관리법	○ 염업조합, 산업자원부 지정기관의 품질검사

4. 해외 현황

○ 일본

- 일본의 식품검사 조직체계는 후생노동성과 검역소,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이 국내 생산식품, 수입식품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수거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관련 중앙 및 지방조직체계는 본문에 제시된 바와 같음.
- 일본은 식품검사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의 수거검사결과 주요 부적합 처분 대상 식품은 아이스크림류, 식육제품 등으로 분석되고 있음.

○ 미국

- 미국은 FDA와 FSIS 등 다원화된 검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내 유통되는 모든 식품류의 검사기준 규격 설정 및 집행을 사실상 FDA가 주도하고 있음.
- 현장의 식품감시업무를 중요시하며, 수거검사 결과로 리콜, 압류, 폐기, 경고, 기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VI. 식품검사제도 합리화 방안

1. 검사품목 조정

- 현재 시도에서 1월에 1회 정도로 수거반복검사를 실시하는 특별검사대상품목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시킬 수 있을 것임.
- 부적합 처분 비율이 높아 우선 검사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식용유지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얼음, 주류 등의 순서임.

<표 4> 특별검사대상 품목 조정(안)

현행		조정	
① 빵류	⑪ 건강보조식품	① 식용유지	⑪ 식육제품
② 건과류	⑫ 식용얼음	② 건강보조식품	⑫ 다류
③ 우유(시유)	⑬ 벌꿀	③ 특수영양식품	⑬ 과자류
④ 식육제품	⑭ 인삼제품류	④ 얼음	⑭ 김치절임식품
⑤ 어육제품	⑮ 김치절임식품	⑤ 주류	⑮ 당류
⑥ 두부류	⑯ 도시락류	⑥ 아이스크림류	⑯ 면류
⑦ 식용유지	⑰ 햄버거류	⑦ 인삼제품류	⑰ 유가공품
⑧ 면류	⑱ 냉동식품	⑧ 건포류	⑱ 어육제품
⑨ 다류	⑲ 건포류	⑨ 음료류	⑲ 두부류와 묵류
⑩ 특수영양식품	⑳ 콩나물류	⑩ 조미식품	⑳ 콩나물류

2. 검사항목 조정

- 3년간의 검사실적에 근거하여 각 품목별 우선 검사대상 항목을 <표 5>에 제시하였음.
- 1주, 품목별로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검사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면 각 제품의 안전 수준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식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임.
- 모든 제품에서 비교적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검사항목은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이고, 일부 제품은 식중독균, 산가, 과산화물가, 보존료 등도 높은 지적을 받았으며, 일부 제품은 특성에 따라 성분함량미달, 내용량, 수분, 표시량 미달 등과 같이 식품안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검사항목이 지적되었음.

〈표 5〉 품목별 우선검사 대상 항목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과자류	산가	과산화물가	세균수	보존료	대장균군
당 류	산도	이산화황	내용량	성분함량미달	
아이스크림류	대장균군	세균수	성분함량미달	성상	표시량미달
유가공품	대장균군	세균수	성상	고형량	성분함량미달
식육제품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보존료	기준초과성분
어육제품	대장균군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성상
두부류	보존료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산가
식용유지	산가	요오드가	과산화물가	성상	굴절률
면 류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수분	타르색소
다 류	세균수	수분	대장균군	내용량	사용이외원료
청량음료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보존료	성분함량미달
특수영양식품	성분함량미달	대장균군	붕해시험	표시량미달	기준초과성분
건강보조식품	성분함량미달	대장균군	붕해시험	세균수	식중독균
조미식품	수분	대장균군	성분함량미달	보존료	타르색소
얼음	세균수	대장균군	pH	성상	산가
인삼제품류	세균수	내용량	성분함량미달	수분	대장균군
김치·절임식품	보존료	성분함량미달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주 류	인공감미료	성분함량미달	기준초과성분	허용외첨가물	성상
건포류	대장균군	수분	대장균	성상	이산화황
기타식품류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수분	대장균군
일반가공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표시량미달
농산물	농약	표백제	회분	이산화황	보존료
수산물	식중독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수분
축산물	식중독균	기타	대장균		

3. 법령 개정

- 현행 식품검사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식품위생법을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 즉, 일본의 검사명령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함으로 식품위생법 제17조(출입, 검사, 수거 등)를 개정하여 제3항을 신설키로 함.
- 신설된 내용처럼 식품안전수준 제고 및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검사명령권을 부여토록 하는 것임.

〈표 6〉 식품위생법 개정 신구대조문(안)

개정전	개정후
<p>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p> <p>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p>	<p>제17조 (출입·검사·<u>검사명령</u>·수거등)</p> <p>① 종전유지</p> <p>② 종전유지</p> <p>③<u>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 또는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u></p>

4. 중복 법령 개정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 삭제 필요함.
- 법 제19조(출입·수거·검사) 제1항의 단서 규정 삭제, 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 제1항 중 3~8호 삭제,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1항 중 축산물가공법, 축산물보관법, 법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전문 삭제, 기타 축산물 가공처리법 중 축산물가공업, 보관법, 운반법, 판매법과 관련한 제반규정 삭제가 필요함.

SUMMARY

I.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Food Inspection

II. The Purpose and Need for the Research

○ The Purpose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establish the optimal efficiency of food inspection system, which requires a large budget and a vast workforce, so as to ensure the safety of an ever-increasing variety of good products.

This study aims also at coordinating inspection method and inspection list by analysing the outcomes of food monitoring during the past three years. Detailed objectives are to:

Understand existing inspection system and its problems;

- Review the status of food inspection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 Collect the opinions of related business and professionals in order to improve current inspection system
- Analyze inspection outcomes and identify areas for improvement
- Draft a master plan for an efficient inspection system

○ Needs for the Research

- Ensuring food safety is an global issue after the launching of WTO
- Current inspection method and inspection list are in need of reform and revision
- Review of advanced foreign systems is required to optimize the Korean inspection system
- In-depth review of relevant and institutions is required to avoid duplications, regain efficiency, and improve food safety.

III. The Contents and Findings of the Research

- Understanding of existing inspection system and its problems
 - Survey of inspection system for imported and exported foods
 - Review of regulations on food inspection
 - Survey of problems in the current food inspection system
- Review of the status of food inspection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and draw policy implications
 - Survey of food inspection system in Japan, USA and EU.
 -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
- A shift of attention to hazardous food items
 - Survey of inspected foods
 - Drafting a revised plan for inspection items and categories
- A Plan for efficient inspection system
 - Revision of inspection items and categories
 - Review of applicable foreign systems
 - Survey of ways to revis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V. Action Plans are to:

- Revise inspection categories
- Revise inspection items
- Shift of food safety laws to food inspection laws
- Revise overlapping laws

목차

요약	3
Summary	1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1. 연구 필요성	21
2. 연구목적	2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3
1. 연구내용	23
2. 연구방법	23
제3절 선행연구	24
제2장 국내 식품검사체계 현황 및 문제점	25
제1절 조직 및 법령체계	25
1. 국내식품	25
2. 수입식품	27
제2절 중복 조직 및 법령 체계	35
1. 식품검사 조직체계	35
2. 법령체계	40
제3절 운영 체계	43
제3장 국내 식품검사실적 분석	47
제1절 식품 수거·검사	47
1. 수거검사 항목	47
2. 연도별 유통 식품 수거·검사실적	47
제2절 수입식품 검사실적	51
1. 연도별 검사 실적	51
2. 검사종류별 검사실적	52
3. 검사종류별 부적합 실적	53
4. 국가별 부적합 실적	54
5. 품목군별 부적합 실적	54

제3절 부적합 처분 현황 및 결과 분석	56
1. 총괄현황	56
2. 검사기관별 현황	56
제4장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운영현황	71
제1절 일본	71
1. 일본의 식품위생체계	71
2.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73
3. 동경도의 식품위생 조직체계	74
4. 동경도 지도감시 계획	76
5. 검사명령제도	76
6. 일본의 식품위생감시 실적	78
7. 동경도의 식품위생감시 실적	80
8. 동경도의 수입식품 감시 현황	92
제2절 미국	94
1. 감시업무 관련 기관	94
2. FDA의 검사업무(Inspection)	96
3. 검사 종류	99
4. 회수(Recall)	102
제3절 독일 등 EU	108
1. 유럽연합의 식품검사제도의 변화	108
2. 독일의 식품검사제도	122
3. 향후 동향	127
4. 정책적 시사점	127
제5장 결론 및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129
제1절 결론	129
제2절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129
1. 특별검사대상품목 조정	130
2. 품목별 검사대상 항목 조정	130
3. 관련 법 개정	132
참고문헌	142
부록	145

표 목 차

〈표 2- 1〉	식품감시 업무 분장(Classificational task of food Inspection)	26
〈표 2- 2〉	식품검사관련 식품위생법체계(Systematic laws of Food Inspection)	27
〈표 2- 3〉	검사관련 식품위생법 내용(Food Inspection on law's)	28
〈표 2- 4〉	수입식품 검사종류(Method of imported food inspection)	29
〈표 2- 5〉	수입식품검사 업무분장(Classified task of imported food inspection)	35
〈표 2- 6〉	출입·수거검사 중복 현황(Overlapped laws of food inspection)	36
〈표 2- 7〉	수입식품관리 중복 현황(Overlapped laws of imported food regulation)	37
〈표 2- 8〉	위생검사기관 중복 현황(Overlapped facilities of food regulation)	38
〈표 2- 9〉	위생감시원 중복 현황(Overlapped inspectors of food regulation)	40
〈표 2-10〉	검사관련 법령 현황(Laws about food inspection)	41
〈표 2-11〉	수거검사 대상품목 (Subject items for collection and examination)	45
〈표 2-12〉	현 검사관련 정부조직(Governmental system of food inspection)	46
〈표 3- 1〉	국내식품 검사실적(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domestic)	47
〈표 3- 2〉	수거검사 대상식품별 검사항목 (Test items for subject food type)	48
〈표 3- 3〉	유형별 유통식품 검사실적(1998~2002년)	
	(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domestic by food type, 1998~2002)	50
〈표 3- 4〉	연도별 부적합식품 순위(Results of failed inspection for food by years)	51
〈표 3- 5〉	수입식품 검사실적	
	(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imported food,1998~2002)	51
〈표 3- 6〉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Inspection of imported food by classification)	53
〈표 3- 7〉	검사종류별 부적합 실적(1998~2002년)	
	(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foreign, 1998~2002)	53
〈표 3- 8〉	국가별 부적합 현황(1998~2002년)	
	(Status of failed imported foods- top ten Countries, 1998~2002)	54
〈표 3- 9〉	품목군별 부적합 현황(Results of failed inspection for food category)	55
〈표 3-10〉	품목별 부적합 현황(Results of failed inspection for food)	55
〈표 3-11〉	국내 식품검사실적 총괄(Overview of domestic inspection for food)	56
〈표 3-12〉	검사기관별 국내 식품검사실적 총괄	
	(Overview of domestic inspection for food by inspectional facilities)	56
〈표 3-13〉	부적합 순위별 품목 현황(Failed status of food inspection)	57
〈표 3-14〉	품목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58
〈표 3-15〉	식품종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ood type)	59
〈표 3-16〉	지방식약청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regional KFDA)	64
〈표 3-17〉	식품군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ood category)	65
〈표 3-18〉	기관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acilities)	66
〈표 3-19〉	식품군별 검사실적(Results of inspection for domestic food category)	67

〈표 3-20〉	기관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Non-Gov. facilities)	68
〈표 3-21〉	식품군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ood category)	69
〈표 3-22〉	기관별 부적합 처분 식품 (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acilities-Gov. and Non-Gov.)	70
〈표 4- 1〉	식품위생 일제 감시지도 일람(동경도, 2002) (Synopsis of food inspection and guidance of Tokyo Province: 2002)	77
〈표 4- 2〉	식품영업시설의 감시지도 현황 (Inspection and guidance for food service establishments)	78
〈표 4- 3〉	수거검사 (Inspection and examination in 2002, Japan)	78
〈표 4- 4〉	연도별 축·수산식품 검사현황 (Inspection of produced foods in domestic, Japan)	79
〈표 4- 5〉	식품분류별 수입식품 신고·검사·위반현황 (Enforcements of imported foods by classified foods)	79
〈표 4- 6〉	연간계획사업내 월별검사(동경도, 2002) (Monthly inspection in annual master plan of Tokyo Province : 2002)	80
〈표 4- 7〉	연도별 수거검사 결과 (Annual collected food inspection)	81
〈표 4- 8〉	검사종류별 감시결과 총괄현황 (Overall results of enforcement: 1997-2003)	82
〈표 4- 9〉	연도별 화학검사 결과 (Synopsis of chemical examination results)	83
〈표 4-10〉	연도별 세균검사 결과 (Synopsis of bacterial microbiological examination results)	84
〈표 4-11〉	검사항목에 따른 식품별 부적합 순위(동경도-하계: 1999~2003) (The rank of failure by food type and test items-Tokyo province, Japan in summer) ..	85
〈표 4-12〉	출입·감시지도 현황(Status of food inspection in Japan)	86
〈표 4-13〉	표시검사 현황(Status of food inspection on food labeling)	87
〈표 4-14〉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식품과 관련되는 출입검사 현황 (Status of food inspection including allergy material)	88
〈표 4-15〉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한 출입검사 현황 (Status of food inspection on GM food)	89
〈표 4-16〉	현장 간이검사 대상 업종 (Status of simple inspection test in field by establishments)	89
〈표 4-17〉	현장 간이검사 현황(검체대상별) (Status of simple inspection test in field by target)	90
〈표 4-18〉	이물질 혼입방지대책 일제 감시지도 (Synopsis of food inspection and guidance protecting from the alien-material)	90
〈표 4-19〉	주요 법위반 식품조치 현황(2003년 6월 기준)(Enforcement report, 2003)	91
〈표 4-20〉	수입식품 검사결과 현황(동경도 2003년) (Synopsis of imported food inspection results in 2003, Tokyo)	92
〈표 4-21〉	2003년 9월 수입식품 적발 사례(Inspection of imported food, 2003. 9)	93
〈표 4-22〉	FDA와 FSIS의 검사대상 품목 (Status of inspected products between FDA and FSIS)	94

〈표 4-23〉	FDA와 EPA의물관리영역 (Area of water regulatory between FDA and EPA)	95
〈표 4-24〉	FDA와 주정부간의 검사계약 업무 현황 (Status of inspection between FDA and State)	95
〈표 4-25〉	식품 검사 현황(Status of food inspection)	97
〈표 4-26〉	5년간 FDA의 감시 실적(Five year inspection totals by FDA centers)	99
〈표 4-27〉	유형별 식품 감시 실적(Status of inspection)	100
〈표 4-28〉	FDA가 주정부에게 지원하는 식품보조금 (Supporting to food subsidy for state)	100
〈표 4-29〉	연도별 식품검사 실적(Status of Inspection about domestic food)	101
〈표 4-30〉	연도별 수입 및 해외검사 실적 (Status of inspection about foreign food)	101
〈표 4-31〉	2002년 FDA 센터 회수 현황(Recalls by FDA center, FY 2002)	105
〈표 4-32〉	2003년 FDA Enforcement Report 현황(리콜) (Contents of FDA Enforcement Report, Recall)	107
〈표 4-33〉	유럽연합내 국가별 RASFF 담당관리기관 (RASFF managemental facilities by country in EU)	112
〈표 4-34〉	경보통보와 정보통보(Alert Notifications and Information Notifications)	113
〈표 4-35〉	착향료목록 예시(Samples of additional food Collars)	119
〈표 5- 1〉	특별검사대상 품목 조정(안) (Food category of special inspection-alternative proposal)	130
〈표 5- 2〉	품목별 우선 검사대상 항목 (Former examination methods by food products)	131
〈표 5- 3〉	식품위생법 개정 신구대조문(안)(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133
〈표 5- 4〉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신구대조문(안)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135
〈표 5- 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대조문(안)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136
〈표 5- 6〉	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별표 7, 제13조관련]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139
〈표 5- 7〉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별표7의2, 제17조의4관련]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140
〈표 5- 8〉	검사명령에 관한 공문[별표 7-4 신설, 제17조 4 관련]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141

그림목차

[그림 2- 1]	식품수거검사 관리체계 (Management system for Food collection and examination)	25
[그림 2- 2]	수입식품 등 신고처리 흐름도(Flows of process imported food)	32
[그림 3- 1]	식품 수거검사·실적(1997~2002년)(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	49
[그림 3- 2]	수입식품 검사 실적(1997~2002년)(Inspection of imported food)	52
[그림 4- 1]	식품위생행정 개요 (Outline of regulative food administration)	72
[그림 4- 2]	수입식품 등의 검사 조직체계 (Inspected system for imported foods in Japan)	73
[그림 4- 3]	동경도의 식품 위생감시 조직체계 (Inspected system for imported foods in Tokyo Province)	74
[그림 4- 4]	동경도의 건강국 조직도 (Structure of Tokyo Health Care Division)	75
[그림 4- 5]	2001년 유럽연합의 주요 농산물수입국 (Exporting country for EU, Agriculture)	109
[그림 4- 6]	2001년 주요 수입농산물품목(Imported food category in EU)	110
[그림 4- 7]	유기농 농작물의 인증표시(Certification labelling for organic farm products)	115
[그림 4- 8]	European Reference Laboratory Network	116
[그림 4- 9]	유럽연합 내의 품질인증표시 및 그 예시 (Certification labelling of food Quality)	120
[그림 4-10]	독일연방의 주정부 및 특별시(County and Metropolitan City in Germany)	122

부표목차

<부표 1- 1>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제22조(Overlapped laws of food inspection, Act)	147
<부표 1-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 (Overlapped laws of lomeestic animal products inspection, Act)	149
<부표 1- 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제26조 (Overlapped laws of marine products inspection, Act)	150
<부표 1- 4>	인삼산업법 제12조 및 제15조 (Overlapped laws of Ginseng products inspection, Act)	151
<부표 1- 5>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제27조 (Overlapped laws of rice products inspection, Act)	152
<부표 1- 6>	먹는물관리법 제18조 및 제34조 (Overlapped laws of drinking water inspection, Act)	153
<부표 1- 7>	주세법 제6조 및 제51조 (Overlapped laws of Alcoholic beverage products inspection, Act)	154
<부표 1- 8>	염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 (Overlapped laws of salt products inspection, Act)	155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한 국가의 식품검사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검증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유통중인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도하아젠다(DDA) 등 2000년 뉴라운드의 시작 등으로 세계 교역은 완전 자유화, 개방화되었고, 이로 인한 자국 유통식품의 안전성제고는 국가 경영상 절대절명의 명제가 되고 있다. 특히 증가하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국의 노력은 치열하여 제품의 생산방식까지 한정하는 추세이다.

국제 교역의 환경 변화에 의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수입품이 급증하고 있고, 식품 가공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식품의 질적 향상과 양적 급증으로 이에 따른 검사업무도 증가하고 있으나 검사항목기준의 불합리, 관련 인력의 감축 및 예산지원 미흡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검사업무의 본래 목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특히 검사관련 조직체계 및 법령의 다원화는 비효율과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라 중앙정부는 점차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개혁』이라는 기치하에 적극 추진되었고 이런 기조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는 중앙이나 지자체 모두 주로 하위직, 별정직, 그리고 검사직 담당자의 인원 감축의 행태로 나타나 날로 급증하는 식품의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인력 구조를 양산하여 이의 시정이 적극 요구되는 시점이다.

검사제도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의 개정뿐만 아니라 1995년 WTO출범에 따라 국내산 식품과 수입식품의 검사항목에 차등을 둘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국제규격에 적합한 검사항목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성분위주의 검사항목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검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저하되고 검사결과에 의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한 상태로 향후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위해성분위주의 검사항목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처럼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의해 현행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이 필요한 국가적 사안이 되고 있다.

또한 식품산업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식품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일본의 최근 개정방안과 마찬가지로 현행 검사제도 중 일부 항목의 검사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함을 검토해 볼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장은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방법 등 서론적 제시이며, 제2장은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현황과 문제점으로 조직, 법, 운영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제3장은 최근 3년간 식품검사실적을 분석하고, 제4장은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선진외국의 식품검사제도를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 연구의 결론과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및 향후 추진과제를 개진한다.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날로 확대되는 여러 종류의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식품안전 검사제도를 효율화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이며,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식품검사제도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첫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식품의 검사제도 현황 파악

둘째, 검사제도 관련 규정 검토

셋째,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나.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실시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첫째, 일본, 미국, EU 등의 식품검사제도 현황 파악

둘째,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다. 부적합 처분 품목 및 위해중심 검사항목으로의 개정

첫째, 최근 3년간 식품검사결과 분석 및 부적합 항목, 식품 등 분석

둘째, 식품검사제도 항목, 품목 개정안 도출

라.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첫째, 검사관련 항목, 품목 조정

둘째, 외국의 제도 중 도입가능 제도 검토

셋째, 항목조정 등에 필요한 관련 법 제개정 방안 모색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가. 검사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의 일반적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한다. 특히 조직체계, 법령체계, 운영체제로 나누어 국내 생산식품과 수입식품별로 파악한다.

나. 검사결과 부적합 내용 분석

1995년 이후 식품군별, 식품검사기관별, 검사항목별 검사 건수 및 부적합 결과를 분석하고, 특히 향후 검사대상 품목 및 항목 개선을 위하여 2000년 이후 최근 3년간 검사실적을 분석한다.

다. 외국의 검사제도 실시 및 관리 현황 파악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및 EU의 식품검사제도 운영 현황 및 법체계, 책임기관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적용가능한 제도 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 검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제시

현행 위해중심 검사항목의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안과 일본의 긴급명령제도 등과 같은 외국의 선진제도 도입 방안 및 조직 등 기타 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2. 연구방법

가. 기존자료, 문헌 고찰 및 분석

우리 나라 식품위생법 및 일본 등 외국의 관련 법을 검토하여 Bench Marking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식품검사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기존 관련 연구 보고서 검토하며, 부적합 처분결과 분석을 위하여 부적합 실적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한다.

그리고 외국의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 및 외국제도에 관한 기존 보고서를 수집, 정리한다.

나. 관련 회의 개최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Brain Storming을 위한 정책간담회의 및 연구진, 식약청 담당자들, 외부연구진과 연구추진 과정상 현안에 관한 수시 간담회의를 개최한다.

다. 외부 전문가 원고 청탁

독일 및 EU 등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관리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들에게 원고를 청탁하여 외국의 최신 현황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라. 선진 외국의 검사제도 운영 자료 수집 및 현장 견학

일본의 검사제도 현황과 최근 관련법의 개정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본의 동경도, 식품위생협회, 국가식품안전위원회 등을 방문하여 식품검사제도에 관한 의견 개진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 3 절 선행연구

식품검사제도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연구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즉, 2001년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봉성중)에서 발간한 유통식품의 검사제도에 관한 연구가 가장 최근 실적으로 이 연구와 더불어 제도적 측면에서의 고찰은 유일한 연구라 하겠다. 대학에서는 주로 기준, 규격에 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식약청 평가부에서는 식품공전을 개정하기 위한 식품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품검사제도의 법령, 제도적인 개정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및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운영을 파악하는 연구는 이 연구가 거의 유일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제 2장 국내 식품검사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 1 절 조직 및 법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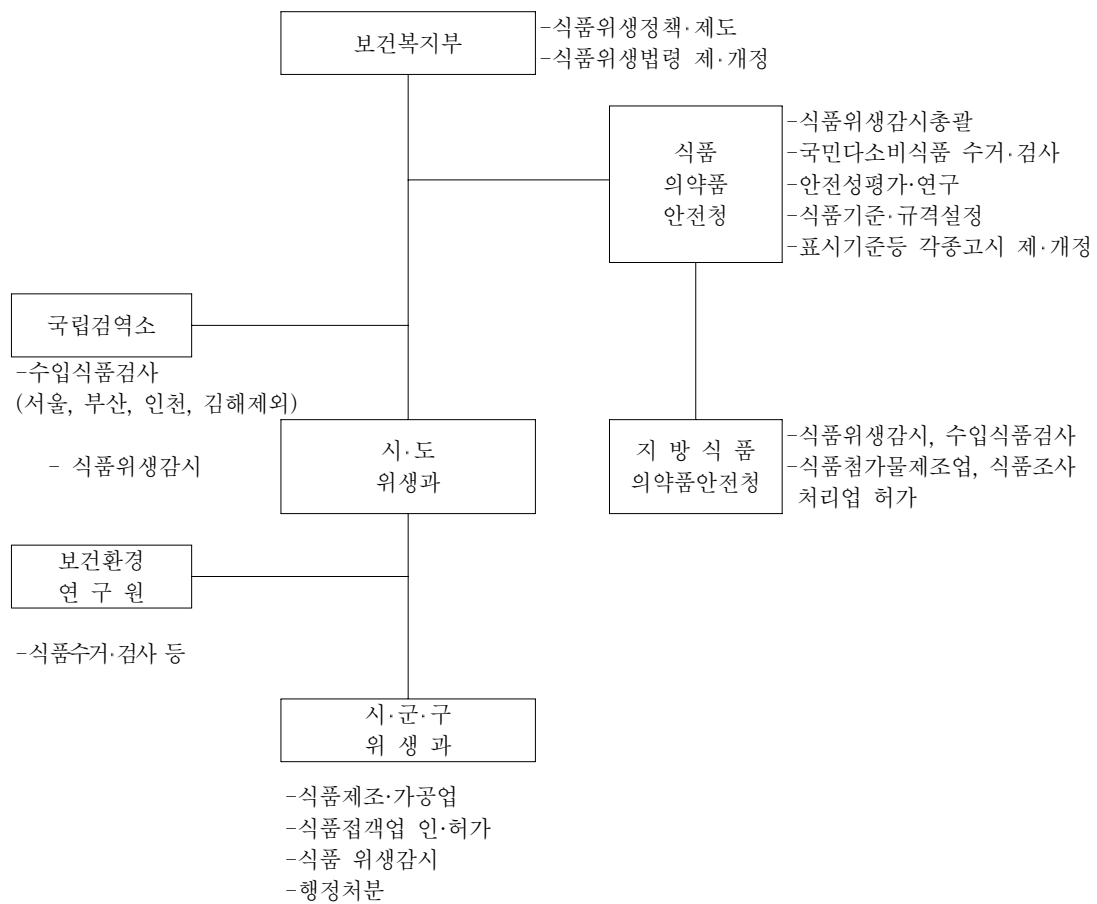
1. 국내식품

가. 식품검사 조직 체계

[그림 2-1]에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식품검사에 관여하는 조직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 국립검역소,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등이 연결되어 있다.

[그림 2-1] 식품수거검사 관리체계

(Management system for Food collection and examination)



국내 식품의 감시기관은 시·도, 시·군·구의 위생관리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하고 있다. 감시대상은 크게 업종과 식품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즉, 축산물가공처리법대상 식품은 농림부 소관업무이며 그외 일반식품은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청(보건복지부)이 소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감시업무는 근거법령에 따라 영업허가(신고)권을 위임받은 일선 시·군·구의 식품 또는 축산위생관련부서가 많은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업종별 감시는 식품공장감시, 식품접객업(음식점, 단란주점 등), 식품판매업(대형할인점 등)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업종별 주요 허가기관은 법령에 따라 위임이 되어 시·군·구는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보존업(방사선조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다 허가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군·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공장감시가 아닌 유통제품의 감시는 시·군·구, 시·도의 식품위생관련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할 수 있으나 농림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시중 유통제품을 감시할 권한이 없다(단, 정육점, 우유대리점 등 제외).

〈표 2-1〉 식품감시 업무 분장(Classificational task of food inspection)

구분	식약청	시·도	시·군·구	비고
식품첨가물 방사선 조사업	○	-	-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상기외 업종 (축산물관련 포함)	-	-	○	식품위생, 축산위생 관련부서로 이원화 운영

나. 법령 체계

국내 식품검사와 관련된 모법은 식품위생법이고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이 있다.

<표 2-2>에는 국내 식품검사제도와 관련 있는 법령 체계를 제시하였다. 식품위생법은 제 17조에 식품검사제도에 관한 근거가 명시되어있는데 출입, 검사, 수거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다.

제18조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제20조에는 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관한 내용이 각각 명시되어있다. 관련 하위법령이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관련 조항의 세부사항이 명시되어있다.

식품검사제도의 법적인 근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개정을 담당하는 식품공전과 식품첨가물공전이 있고, 2003년 8월에는 건강기능성식품과 관련한 법령 제정과 더불어 건강기능식품공전도 기초안이 제정되었다.

〈표 2-2〉 식품검사관련 식품위생법체계(Systematic laws of Food Inspection)

구분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식품위생법	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	제18조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지정	제20조 식품위생감시원 제20조 2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2조 출입검사 등	제16조 식품위생검사 기관의 지정	-
	제13조 수거량·검사의뢰등		
	별표7 식품 등의 수거 대상 및 수거량		
	별표7의2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관한규정		
	제14조 검사방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2 출입·검사·수거 등	-	제5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4조 식품등의 재검사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직무 제6조의2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의 위촉방법 등
기타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	-

주: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업무 체계현황임.

2. 수입식품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1조)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수입식품 등검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다.

가. 신고 제외 식품

-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
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 2)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등
-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당해 국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국내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 6) 식품첨가물중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 다만, 혼합체제의 성분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등

- 8)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으로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사용하는 식품 등
- 9) 의화획득용 식품 등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하는 기구의 원재료
- 10)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11)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표 2-3>은 검사와 관련한 식품위생법 세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표 2-3> 검사관련 식품위생법 내용(Food Inspection on law's)

구분	출입·검사·수거 등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식품위생감시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근거법령	법 제17조	법 제18조	법 제20조, 제20조 2
내용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 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p>【식품위생감시원】</p> <p>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명예식품위생감시원】</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현행법령.

나. 검사의 종류

<표 2-4>에는 수입식품 검사종류와 그 내용이 설명되어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수입식품의 검사종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그리고 무작위표본검사 등 4종류로 분류되어 실시된다.

<표 2-4> 수입식품 검사종류(Method of imported food inspection)

구분	처리기한	주요내용
서류검사	2일	- 신고서류등을 검토하여 적·부를 판단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재수입신고한 동일사동일식품등
관능검사	3일	- 제품의 성상, 맛, 냄새, 표시, 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등을 종합하여 적·부를 판단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원료성 농·임·수산물
정밀검사	10일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의 성분규격, 시험방법등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검사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단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 ·국내외 유해물질 함유 문제제기 식품등
무작위표본검사	5일	- 정밀검사 대상이 아닌 식품중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체로 선정된 식품 등을 물리적, 화학적,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검사 ·동일사동일식품 등 ·자사제품제조용원료 ·외화획득용식품 등

주: 다만 통·병조립 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 가온보존시험대상 식품은 14일이며, 동 기간은 경과하여야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 기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임.

다. 검사대상

1) 서류검사 및 그 대상

서류검사라 함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
- (2)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또는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 또는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자

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이하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라 한다)로 수입하는 식품 등

(3) 삭 제

(4)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식품 등

(5)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이 경우 국내외 공인검사 기관 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에 한한다)

(6)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를 포함한다)

(7)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스테인레스·나무·돌 또는 착색되지 아니한 유리제로 된 기구 및 용기·포장

(8) 다목의 정밀검사를 받았던 것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재수입하는 식품 등(이 하 "동일사 동일식품등"이라 한다)

(가) 식품·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생산국·제조업소·제품명 및 제조방법이 같은 것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관련 [별지서식 제4호] 2쪽에 주원료의 성분배합비율 및 제조 공정이 같은 것을 동일사 동일식품 등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규정도 충족하여 야 하며, 제조방법과 제조공정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에는 제조국·제조업소 및 재질이 같은 것

(다) 농·임·수산물물의 경우에는 생산국·품명·수출업자 및 포장장소가 같은 것

(9)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식품 등

(10)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가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12)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료

(13)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의 원료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2) 관능검사 및 그 대상

관능검사로 함은 제품의 성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처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

(2) 가목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관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 (3)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별표7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식품 등

3) 정밀검사 및 그 대상

정밀검사라 함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다음의 식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 (1)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
- (2)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식품 등
- (3) 수입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재수입하는 동일사 동일식품 등
- (4) 삭제
- (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등
- (6)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등
-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 수입된 사실이 있는 식품
- (8)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구입신고인이 수입하는 식품 등

4) 무작위표본검사 및 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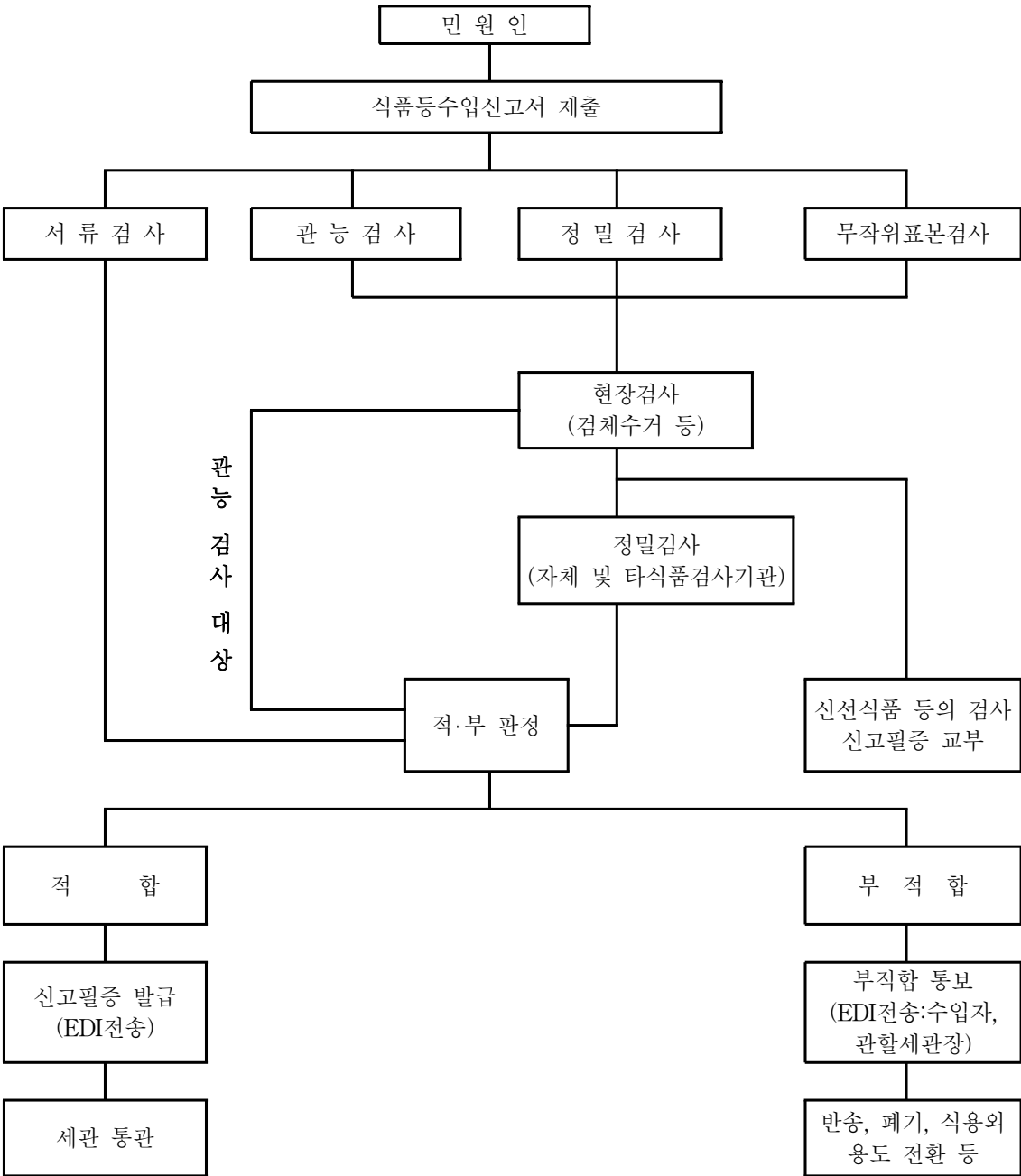
무작위표본검사라 함은 정밀검사를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이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한 다음의 식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 (1)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 등
- (2) 자사 제조용 원료. 다만,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 (3)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으로서 개별품목당 수입신고한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식품 등

라. 수입식품 등의 신고처리

[그림 2-2]에는 수입식품 등의 신고처리 흐름도가 제시되어있다. 즉, 민원인(수입업자)이 식품을 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단계별로 설명되어있다.

[그림 2-2] 수입식품 등 신고처리 흐름도(Flows of process imported food)



주: 근거법령-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처리기간-서류검사(2일), 관능검사(3일), 정밀검사(10일)

마. 식품 등의 검사방법

1) 검사기관 및 동 기관의 유의사항

- (1)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행한다.
- (2) 수입신고인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외의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를 검사를 행한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 (3) 보세구역 등에서 수입식품 등의 검사를 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그 검사결과 확인 전에 동 식품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에 미달되는 식품 등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 (6)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한 식품 등이 (5)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검사한 동일사 동일식품 등이라 하더라도 그 수입신고량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수입최소량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입자로 하여금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 (1)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의한다.
- (2) 검체의 채취 및 취급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식품 위생감시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수입신고인 또는 수입물품의 관리자의 참여 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용 검체를 채취하는 때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3) 검체채취량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7] 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에 의한다. 다만, 검체의 최소포장 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의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3) 검체의 정밀검사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

- (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이 수입식품 등의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
- (2) 수입되는 식품 등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는 이전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검출빈도가 높거나 인체의 위해도가 높은 잔류농약·중금속·병원미생물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 (3) 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을 받았거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정밀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수입신고인의 검사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정밀검사결과 확인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정밀검사 결과를 수입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인정등

수입신고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식품 등에 대한 정밀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5) 표시기준 허위표시 등의 확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과대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입식품 등의 전산관리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식품 등의 신고사항 등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입식품 등의 신고필증은 전산기기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기기 또는 통신망의 장애로 전산기기에 의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기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바. 수입식품검사 업무분장

수입식품 등은 관련 부서의 검사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등의 위생에 관련된 문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 일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호협력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관리가 되고 있으며 그 업무분장은 아래 <표 2-5>와 같다.

<표 2-5> 수입식품검사 업무분장(Classified task of imported food inspection)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청	문제발생 식품 등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제품에 한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검역소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서류, 관능, 정밀, 무작위표본검사
국립수산물검사소	식품위생법령에서 위탁한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검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연구소	수입최소량(100Kg)이하 및 수입자의 요구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검역소에서 지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청 및 검역소에서 지정하는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

주: 수입식품을 검사하는 관은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국립검역소가 있으며 서울, 부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외의 국립검역소는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의뢰하고 있음.

제 2 절 중복 조직 및 법령 체계

1. 식품검사 조직체계

가. 국내 유통식품

우리나라 식품검사체계가 중복, 다원화되어있는 양상은 다른 분야보다 더욱 심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조직중복과 더불어 근거 법령의 다원화로 각 법령에 의거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6>에는 출입수거검사 중복 현황에 관련된 부처와 근거법령이 제시되어있다.

<표 2-6>에 제시된 관련 부처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도 마찬가지로 다원화되어있어 국가적인 자원 낭비와 업체의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식약청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이 전국 조직을 갖고 있다.

〈표 2-6〉 출입·수거검사 중복 현황(Overlapped laws of food inspection)

부처	근거법령	내용
식약청	식품위생법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검사 및 기획단속: 지방청 및 본청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검사: 시·도 및 시·군·구
농림부	축산물 가공처리법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다만, 작업장(도축, 집유, 축산물가공업 및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판매업을 제외한 판매·유통단계의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약청
	양곡관리법	○ 시·도 및 시·군·구
	인삼산업법	○ 연근표시·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 채집, 수입 : 자체검사기관 또는 인삼류검사기관
해수부	수산물 품질관리법	○ 지정해역: 국립수산물과학원 ○ 생산·가공시설: 국립수산물품질 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수산물안전성 조사 • 생산단계: 품질검사원 및 수산물과학원 • 해역서식패류: 국립수산물과학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시·도
국세청	주세법	○ 세무서
산자부	염관리법	○ 염업조합, 산업자원부 지정기관의 품질검사

나. 수입식품

수입식품의 검사체계, 법령이 다원화되어있는 상황에서 기관간 사전·사후정보(현지 및 검사결과 등 안전정보, 현지동향 등)의 공유미흡으로 정책·검사 등 총체적 수입식품 안전 관리기능이 취약하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문제 발생시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능동적인 대처가 불가능하여 업무수행의 신속성·일관성 결여되기 쉬우며 수입검사에 대한 책임과 유통과정 중의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운영됨으로서 책임 한계에 대한 논란만 가중되어 업무처리의 신속성이 결여되고 소비자 혼란과 신뢰 저하를 유발할 소지가 크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업무분산으로 자원의 집중화 곤란하고 개별기관마다 검사장비를 구비함으로써 고가 장비 이용률 저하로 국가 자원이 낭비되며 국제 통상문제 발생시 능동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신고기관의 다원화로 국내수입자·국외수출자의 민원을 초래할 수 있다.

〈표 2-7〉 수입식품관리 중복 현황(Overlapped laws of imported food regulation)

부처	근거법령	신고절차	대상품목
복지부	식품위생법	○ 식품 등 수입자 → 관할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서울, 부산, 경인) 또는 국립검역소장 → 검사(서류, 관능, 정밀) → 신고수리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국립수의 과학검역원 및 국립수산물검사소 검사대상 제외)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수입자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원)에 신고 → 검사(서류, 관능, 정밀검사) → 신고수리	모든 수입축산물(식육, 원유, 아이스크림제품류 중 아이스크림류·아이스크림분말류·아이스크림믹스류,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조제유류, 식육추출가공품, 우지·돈지)
	인삼산업법	○ 수입자(수삼, 홍삼, 백삼) → 국립식물검역소 및 식약청 개별신고 → 검사(식물검역소 : 병충해, 식약청 : 농약등) → 신고수리 → 수입자가 인삼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등급등 신청) → 증지부착 → 판매	인삼류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 수산물수입자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지원에 신고(12개 지원에서 검사시설 구비) → 검사(서류, 관능, 정밀) → 신고수리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처리한 수산물(활어패류, 신선·냉장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먹는샘물수입자(수입판매업자) →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신고 → 정밀검사 → 신고수리	먹는물
국세청	주세법	○ 주류수입자(식품판매업, 주류판매업) → 지방청신고 → 신고수리	주류
산자부	염관리법	○ 염수입자 → 염업조합신고 → 검토 → 신고수리	식용 및 공업용(사료용 포함) 소금

다. 검사기관

<표 2-8>에는 다원화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각 정부부처가 설치하고 있는 검사기관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식약청의 경우는 본청과 6개 지방청에 각각의 시험분석실을 설치하였고,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5개 지원 중 서울, 부산지원에 각각 검사기관을 갖고 있고, 그 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를 제외한 8개 지원이 역시 각각의 시험분석실을 소유하고 있다.

<표 2-8> 위생검사기관 중복 현황(Overlapped facilities of food regulation)

부처	근거법령	내용
식약청	식품위생법	○본청(식품평가부, 식품첨가물평가부) 및 6개 지방청의 시험분석실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국립수의과학검역원(5개 지원 중 서울, 부산)
	농산물품질관리법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제주를 제외한 8개 지원)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국립수산물과학원(8개 연구소 중 남해·양식환경연구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12개 지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국립환경연구원 지정 ○4개 지방환경관서
국세청	주세법	○국세청기술연구소
산자부	염관리법	○산자부 품질검사기관 지정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 식약청, 2003.

이처럼 식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는 산하에 필요한 검사기관을 갖고 있어 이들의 업무분장과 경영 효율 등을 진단하여 통폐합 방안을 마련함이 국가적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 사료되며 각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기능을 갖고 있어, 수거검사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 특별관리 대상 식품 및 일상식품에 대한 특별관리 방안 강구, 인체에 유해한 항목의 부적합 판정제품에 대한 철저한 원인 조사, 농산물의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와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 등의 수거·검사 및 특별기동단속에 따른 선별적인 수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기준·규격 설정,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 재·개정, 수입식품검사, 식품첨가물 제조업 및 식품조사처리업의 허가관리를 맡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는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인·허가와 관리, 음식점 영업의 관리 및 수거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세부계획의 수립 기능을 갖고 있다. 수거검사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립 수의과학검역원과 같이 수거검사 업무를 맡고 있다.

월별, 정기 또는 수시 수거검사 실시에 있어 가능한 품목별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수거대상 품목을 적절히 배분하고 부적합식품은 시정될 때까지 반복수거·검사 등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한편 수거검사 등의 이화학적 분석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HACCP 적용품목은 수거검사를 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으로서, 수거검사 제품 등의 이화학적 분석·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의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4)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내산 및 수출·입 수산물을 관리하고 있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 사항으로는 중금속, 식중독균 및 항생물질 모니터링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부산 등 12개 지원을 두고 있으며, 2002년 말 현재 총 19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원과 1 연구소를 두고 있다.

5) 국립 수산과학원

수산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 사항으로는 패류 독소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역관리인 적조 등 정보관리를 하고 있다. 2002년 말 현재 668명이 근무하고 있다.

6)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농림부 산하 조직인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및 5개지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근거하여 식육,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능을 갖고 있어 축산식품의 수거검사 및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축산식품의 수거검사는 지역별·계절별 성수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집중수거검사와 재래시장·영세판매업소 등 유통관리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라. 감시원

<표 2-9>에는 각 검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위생감시원에 관한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각 검사기관별로 감시원이 근무하는데 식약청, 지자체 등 일부 부처에서는 소비자단체 회원을 주축으로 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각각 활용하고 있어 감시원간의 갈등도 더러 표출되고 있다.

<표 2-9> 위생감시원 중복 현황(Overlapped inspectors of food regulation)

부처	근거법령	내용
식약청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감시원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	○ 검사관과 자체 검사원
	농산물품질관리법	○ 검사원
해수부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 명예감시원
환경부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수질감시원
교육부	학교급식법	○ 전담직원(영양사 등)
산자부	염관리법	○ 조합에서 지도관리
지자체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감시원 ○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 식약청, 2003.

2. 법령체계

가. 법령 현황

<표 2-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사전·사후관리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의 사전·사후관리를 각기 다른 법률에 의해 각각의 부처에서 관리함으로써 인력·예산 등 국가자원의 낭비요인 발생하고 있다. 즉, 동일제조업소에서 식품위생법과 축산물가공처리법의 대상인 식품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 각 개별법에 따라 허가·신고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력 및 예산 등 국가자원이 중복/분산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한 105품목 이외의 품목은 식품위생법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생산자 측면에서는 중복규제에 따른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표 2-10〉 검사관련 법령 현황(Laws about food inspection)

소관법률	인·허가 등 사전관리	출입·검사 등 사후관리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첨가물 및 조사처리업 허가 : 지방청 ○ 식품위생법 대상 기타 업종 허가/신고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검사 및 기획단속 : 지방청 및 본청 ○ 관리대상업종에 대한 출입·검사 : 시·도 및 시·군·구
축산물 가공처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업, 집유업, 축산물가공업 허가 : 시·도 ○ 축산물보관업 허가 및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신고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부(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 ※ 다만, 작업장(도축, 집유, 축산물가공업 및 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및 판매업을 제외한 판매·유통단계의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약청
양곡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곡가공업(제분업, 제조업) 등록 : 시·군·구 ○ 도정업 신고 - 시·군·구청장 	○ 시·도 및 시·군·구
	※ 원료곡을 원료로 하여 분말제조(제분), 옥수수를 원료로 한 전분 및 전분당, 대두를 원료로한 식용유지(제조), 양곡가공업자가 주세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 등록한 것으로 간주	
수산물 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유(간유)가공업, 냉동·냉장업 등록 : 부산시장, 시·군·구 ○ 선상수산물가공업 등록 : 해수부장관(원양), 부산시장, 시·군·구 ○ 수산피혁가공업, 해조류가공업(비식용)신고 :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해역 : 국립수산물과학원 ○ 생산·가공시설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방해양수산청, 시·도 ○ 수산물안전성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 품질검사원 및 수산과학원 • 해역서식패류: 국립수산물과학원
먹는물 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 시·도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록 : 시·도 	○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시·도
주세법	○ 주류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 제조면허, 주류판매업 면허 : 세무서	○ 세무서
염관리법	○ 염제조, 결정체염의 제조 허가 : 산자부 → 시·도	○ 염업조합, 산업자원부 지정기관의 품질검사
인삼산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류제조업 신고 : 시·군 ※ 부산물을 원료로 농축 인삼류 등의 제조·가공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표시·제조기준 준수여부 확인 :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삼류 검사기관(농업협동조합중앙회) ○ 판매 또는 수출의 목적으로 제조, 채집, 수입 : 자체검사기관 또는 인삼류검사기관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 식약청, 2003.

즉, 동일원료·동일제조시설 및 공정을 사용하여 「분쇄가공육제품」을 생산할 경우 육함량 50% 이상은 축산물가공처리법, 50% 미만은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각

기 다른 2개 기관으로부터 허가(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신고(식품위생법)를 득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시설 및 공정으로 아이스크림과 빙과류를 제조할 경우에 아이스크림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의 대상으로 구분되고, HACCP의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각각 지정 받음으로써 중복규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나. 중복 법령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 일관성, 신속성 제고 가능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gap) 해소하고, 국가자원의 낭비요인 제거, 통합관리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편의 제고, 그리고 통합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품검사제도와 관련된 중복 법령의 통합이 필요하다.

즉, 관리의 효율화, 생산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최소화하고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 사전관리업무를 통합하고 이에 따른 지도·단속 등 사후관리업무도 통합함이 바람직하다. 통합이 필요한 관련 법령의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

가)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관련 업무 및 제17조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업무

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업무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다)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어유(간유)가공업)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라) 인삼산업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신고(인삼류제조업) 및 제15조 규정의 출입·검사

마) 양곡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등록(양곡가공업)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바) 먹는물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먹는샘물제조업, 수입판매업) 및 제34조 규정에 의한 출입·수거·검사 등

사) 주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주류제조면허),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아) 염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허가(염제조업등의 허가)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

2) 각 법령 세부내용

각 법령의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제 3 절 운영 체계

우리 나라의 식품 등의 수거·검사의 운영 체계를 살펴보면, 건수위주의 획일적인 수거·검사를 지양하고 정보 등의 가공분석을 통한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 및 문제식품 등을 중점 수거·검사하고 있으며, 다년간 반복 위반되고 있는 식품과 유통점유율이 높은 다소비 식품 등 20개 품목은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선정하여 매월 시·도에서 반복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등 기초식품은 지역 및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열경채류 등 신선(단기유통)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 신속수거·검사는 지방청 및 시·도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청은 부적합 가능성이 높거나 위해항목 중심으로 시험·검사를 하고, 제품수거는 재래시장, 슈퍼마켓·연쇄점 및 소형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식품과 초등학교주변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류를 중점 수거·검사하고 있다.

1. 수거검사 대상품목

수거검사 대상품목은 <표 2-11>과 같이 특별관리대상, 일상식품 및 특별단속에 따른 선별품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검사기관 구분은 원칙적인 사항이며 부정·불량식품 등의 지도·단속시에 부적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시 및 해당 기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 이외에도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 수거검사 결과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은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발생시 해당 시·도(시·군·구)에 조치 및 사후관리를 요청하며, 수거·검사 대상 품목중 특별관리 대상식품 20개 품목은 시·도에서 집중 수거 검사하되, 시·군·구청에서도 필요에 따라 관련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다.

또한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는 지방청 및 시·도에서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및 전통식품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시·도(시·군·구)에서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농·축·수산물 등은 특성과 계절적 영향, 부적합이력 등을 감안,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수거검사 실시하고 있다.

수거검사 결과보고(통보)는 정기 수거·검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기 종료 익월 10일까지 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관리과)에 보고하며, 특별관리대상식품 및 농산물 신속 수거·검사결과는 별도로 우선하여 매월 10일까지 보고(지방청은 매월 종료일 현재 특별관리 대상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검사가 종료된 것은 수거검사 결과 성적서로 통보하며 검사진행중인 것은 익월에 보고한다.

결과보고체계는 시·군·구는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수거검사실적을 보고토록 되어있다.

3. 수거검사 기관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발족 당시 식품안전 관리 업무전반에 걸친 종합적 검토에 따른 조직·기능·자원의 보강 없이 단순히 보건복지부의 정책기능을 제외한 집행기능만 이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가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로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중복되는 기관과 기능이 <표 2-12>에 제시된 바처럼 산재해 있어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표 2-11〉 수거검사 대상품목 (Subject items for collection and examination)

구 분	대 상 품 목	수거검사기관
1. 특별관리대상 (20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20개 식품 <div> <div>①빵류</div> <div>②건과류</div> <div>③우유(시유)</div> <div>④식육제품</div> <div>⑤어육제품</div> <div>⑥두부류</div> <div>⑦식용유지</div> </div> <div> <div>⑧면류</div> <div>⑨다류</div> <div>⑩특수영양식품</div> <div>⑪건강보조식품</div> <div>⑫식용얼음</div> <div>⑬벌꿀</div> <div>⑭인삼제품류</div> </div> <div> <div>⑮김치절임식품</div> <div>⑯도시락류</div> <div>⑰햄버거류</div> <div>⑱냉동식품</div> <div>⑲건포류</div> <div>⑳콩나물류</div> </div>	시·도에서 매월 반복 수거·검사
2. 일상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엽경채류 등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추, 무, 시금치, 상추, 근대, 양배추, 쑥갓, 깻잎 등 엽경채류 국민들이 일상 많이 소비하는 농·수·축·임산물 등 <div> <div>①농산물 : 곡류, 과일류, 채소류</div> <div>②수산물 : 어류, 패류, 해조류, 담수어 등</div> <div>③축산물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div> <div>④지역특산물 : 시·군·구별 특산농·수·축·임산물류 등</div> </div>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하는 식품 (특별관리대상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별 위생지도·점검 책임관리업종의 대상식품군을 원칙으로 해당 기관별 수거·검사 유통 축산가공식품 및 수입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햄·소시지 등 식육제품, 유가공품, 아이스크림 등 유통 축산가공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및 지역별·기관별 선정한 문제우려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시·도에서 매월 반복수거·검사 시·도, 시·군·구에서 중점 관리 시·도, 시·군·구별 전담관리 지방청에서 중점관리 시·도, 시·군·구별 전담관리
3. 특별단속에 따른 선별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 등의 특별 수거·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 및 특별지시에 의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 등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표 2-12〉 현 검사관련 정부조직(Governmental system of food inspection)

기 관	직 무	조 직	인 력	비 고
○ 식품의약품 안전청	○ 식품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마약 등에 관한 사무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종합정책 수립 기준 및 규격, 지도, 단속, 시험·조사·연구 및 독성연구 등	○ 1청 - 6지방청	○ 총 817 -1청 : 373 -1원 : 115 -6지방청: 329	식 품 : 300명
○ 농림부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농산물의 안전성, 품질인증, 규격 출하, 검사·가공·저장·통계 및 관련 시험·조사·연구 등	○ 1원 - 9개 지원 및 84 출장소	○ 총 2,144명 -1원 : 153명 -지원 등: 1991명	
-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 수입 농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 검사, 가축의 질병연구 및 방역, 동물의약품 등 검사 등	○ 1원 - 5개 지원 및 12 출장소	○ 총 480명 -1원 : 232명 -지원 등: 244명	
- 국립식물 검역소	○ 수출입, 국내 식물의 검역·검사 및 관련시험 조사·연구	○ 1원 - 5지소 등	○ 총 395명 -1원 : 85명 -지원 등: 310명	
- 국립축산 기술연구소	○ 가축의 육종, 영양상태, 사양축산물 의 품질, 가금 및 안전성 연구, 축산 환경, 시설연구 등	○ 1소 - 2지소	○ 총 334명 -1원 : 286명 -지원 등: 48명	농진청
- 농업과학 기술원	○ 농업·환경, 토양 및 생물자원, 농약·병리·농촌생활·환경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	○ 1원	○ 총 387명	농진청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 과학원	○ 수산에 관한 조사·시험·연구 및 관련 공무원·조사자의 교육 등	○ 1원 - 8연구소	○ 총 668명 -1원 : 284명 -연구소: 384명	
- 국 립 수 산 물 품질검사원	○ 수산물의 인증, 안전성 조사, 수출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및 검사· 조사·연구 등	○ 1원 - 12지원	○ 총 197명 -1원 : 39명 -연구소: 158명	

자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3(2002년 말 기준).

제 3 장 국내 식품검사실적 분석

제 1 절 식품 수거·검사

1. 수거검사 항목

수거검사 대상 식품별 검사항목을 분석한 결과는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특별기동단속 및 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을 고려하여 검사목적에 맞게 검사항목을 선정하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공전의 기준규격에 의하고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특성에 따라 해당검사항목을 정한다.

농산물에 있어서는 농약은 검출빈도, 사용여부 및 독성정도에 의하여 검사대상 농약을 정하고 수산물은 수은·납 및 식중독균, 항생물질 등을 검사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외에 보존료(방부제)를 과다 사용할 우려가 큰 제품을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검사의뢰기관(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 의뢰시 일괄적인 기준·규격검사 의뢰를 지양하고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검사항목을 선정하여 반드시 필요한 검사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도별 유통 식품 수거·검사실적

<표 3-1>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연도별 국내에서 유통중인 식품의 수거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유통식품에는 국내 생산식품과 수입식품이 모두 포함된다.

검사결과를 보면 해마다 수거검사건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부적합률은 1998년 5.2%에서 2002년 1.2%로 낮아지고 있는데 부정불량식품이 감소하여 부적합률이 낮아진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온정주의에 기인한 것인지는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

<표 3-1> 국내식품 검사실적(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domestic)

(단위: 건, %)

구분	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1998	71,450	67,769	3,681	5.2
1999	91,569	87,691	3,878	4.2
2000	94,400	91,341	3,059	3.2
2001	100,490	99,118	1,372	1.4
2002	104,417	103,116	1,301	1.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3년 제5호.

〈표 3-2〉 수거검사 대상식품별 검사항목 (Test items for subject food type)

식품별	수거검사대상 식품별 검사항목
특별기동단속 및 합동단속에 따른 품목 등	인체위해성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목적에 맞게 검사항목 선정
식품 및 식품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공전의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의함(검체특성에 따라 일반기준 규격 추가) - 검체의뢰기관(식품위생감시원)은 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등을 고려하여 식품공전의 성분 및 규격중 아래와 같은 중요항목만을 검사의뢰할 수 있음. ·검체의 특성을 가려주는 항목 ·중금속<예: 납, 수은, 카드뮴, 동, 주석, 중금속 등> ·식품첨가물의 사용량<예: 보존료, 산화방지제, 타알색소, 인공감미료, 이산화황 등> ·미생물오염 <예:대장균, 살모넬라, 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크로스트리디움균, 리스테리아균 등 식중독균> ·불량지표항목<예: 산가, 과산화물가, 메탄올, 포스파타제 등> ·당해 식품의 중요성분으로 검사의뢰 기관이 선정하는 항목 <예: 아이스크림의 유지지방분, 주류의 알콜함량 등> ·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항목 등
농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사용, 검출빈도, 독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자체검사계획을 수립하여 수거·검사 - 신선엽경채류 등 농산물의 잔류농약 신속수거·검사의 지속적인 확대
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은, 납, 항생물질 등 - 장염비브리오등 식중독균 오염여부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 대장균 O-157 : H7, 리스테리아균, 살모넬라균 등 검출여부
기구·용기·포장류 등	- 재질 및 용출시험 항목
보존료(방부제) 과다 사용 우려식품	- 일상식품 및 특별관리 대상식품중 보존료과다사용 우려식품에 대하여 중점검사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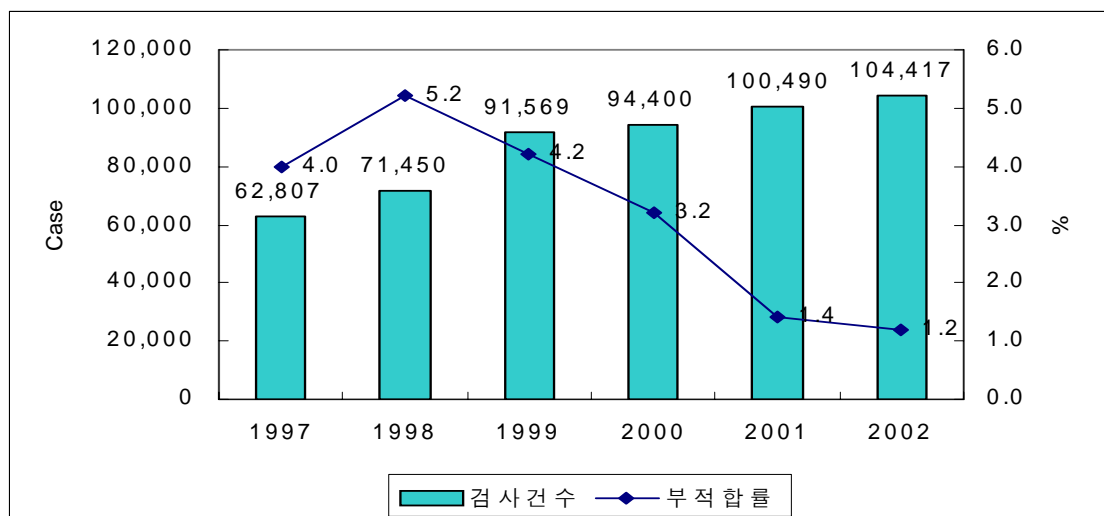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그림 3-1]에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식품의 수거검사실적이 도표로 제시되어있다.

〈표 3-1〉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해마다 검사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합 건수는 1998년 한차례 증가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1] 식품 수거검사·실적(1997~2002년)(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단위: 건, %)



가. 유형별 식품 수거검사 현황

<표 3-3>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유통식품의 유형별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식품 유형 분류는 식품공전에 근거하였으며, 『식품의약품통계연보』의 분류에 따라 총 26형으로 분류되었다.

1998년의 경우 기구·용기 포장류의 35.1%, 식품접객업조리품의 17.1%, 얼음의 7.0%가 부적합처분을 받아 연평균 부적합률인 5.2%보다 높게 나타난 유형인 반면에 2002년에는 주류의 4.9%, 건강보조식품의 4.8%, 얼음의 4.6%, 그리고 인삼제품의 4.0%가 부적합 처분을 받아 부적합률이 높은 제품유형으로 나타나 시대적인 변화상을 보여주고 있다¹⁾.

이처럼 부적합 처분률이 높은 제품유형이 바뀔에 따라 검사품목별 검사 방법도 전환되어야 우리나라 식품안전수준을 전체적으로 제고될 것이다.

<표 3-3> 유형별 유통식품 검사실적(1998~2002년)

1) 보고서에는 식품군별 부적합 처분사례 분석결과만 제시하였음. 식품별로는 대상이 너무 많아 제표화하지 않았음.

(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domestic by food type, 1998~2002)

(단위: 건,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총 계	71,450	5.2	91,569	4.2	94,400	3.2	100,490	1.4	104,417	1.2
과자류	6,682	2.7	8,576	2.8	9,071	2.8	10,033	2.5	9,522	1.8
당 류	313	-	341	0.6	381	0.3	483	0.6	400	0.5
아이스크림류	1,252	4.0	1,035	1.9	808	1.0	972	1.1	717	0.7
유가공품	1,841	0.5	1,528	0.2	1,361	0.1	1,377	0.1	1,365	0.2
식육제품	2,653	0.6	3,366	0.6	2,504	0.3	3,550	0.2	2,410	0.3
어육제품	1,219	2.0	1,506	1.3	1,358	1.3	1,528	0.8	1,283	0.5
두부류	2,048	0.6	2,181	1.2	2,273	1.6	1,330	1.1	1,418	1.2
식용유지	2,016	0.4	1,439	0.6	2,055	1.6	1,600	0.8	1,887	2.2
면 류	2,584	1.9	2,378	1.2	2,452	0.7	2,150	0.5	2,272	0.6
다 류	1,160	1.1	1,399	1.4	1,858	0.9	2,002	0.5	1,961	0.7
청량음료	2,183	1.3	2,186	0.5	1,639	1.2	1,954	2.3	2,098	0.5
특수영양식품	471	1.5	433	5.1	583	1.7	635	1.9	809	4.2
건강보조식품	293	1.4	156	3.8	242	1.7	263	2.7	207	4.8
조미식품	5,458	0.6	4,455	1.1	4,303	0.8	3,981	0.6	4,953	0.6
얼음	142	7.0	104	5.8	106	14.2	97	2.1	130	4.6
인삼제품류	174	1.1	218	1.8	337	3.0	381	3.1	454	4.0
김치·절임식품	2,631	0.4	2,958	1.5	2,068	2.7	1,916	2.4	2,144	1.7
주 류	239	0.4	342	1.2	381	0.5	432	1.2	1,324	4.9
건포류	382	0.8	1,192	3.9	3,069	1.2	3,166	2.7	4046	1.8
기타식품류	8,215	3.0	7,787	3.1	7,365	2.1	8,494	1.9	9,882	1.5
식품접객조리판매품	11,590	17.6	15,526	15.7	16,284	11.3	18,370	1.6	19,834	1.0
기구·용기포장류	1,297	35.1	982	15.5	900	9.0	1409	1.8	1,016	1.3
농산물	11,442	3.1	20,315	2.0	24,902	1.4	24,639	1.1	25,813	1.2
축산물	803	0.1	1,294	0.5	1,021	0.4	668	0.0	756	0.3
수산물	3,995	2.6	9,554	0.6	6,784	0.8	8709	0.6	7,427	0.6
식품첨가물	367	2.7	318	1.6	295	3.1	351	0.0	289	3.1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0~2003.

<표 3-4>에는 연도별로 부적합 처분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품목을 연도별로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1998년에는 기구·용기포장류, 식품접객조리판매품, 얼음, 아이스크림류의 순이었으나 1999년에는 식품접객조리판매품과 기구·용기포장류가 순위가 바뀌었으며, 특수영양식품이 4순위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얼음이 1순위로 올라섰고, 식품첨가물과 인삼제품류가 새롭게 순위안에 등장하였고 2001년을 보면 인삼제품류의 부적합비율이 1순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건포류, 과자류, 김치절임식품류의 순위가 상승하였다. 2002년을 보면 주류가 1순위, 건강보조식품, 얼음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식용유지류가 처음 부적합비율이 높은 제품안에 등장하였다.

<표 3-4> 연도별 부적합식품 순위(Results of failed inspection for food by years)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1	기구·용기포장류	35.1	식품접객조리판매품	15.7	얼음	14.2	인삼제품류	3.1	주 류	4.9
2	식품접객조리판매품	17.6	기구·용기포장류	15.5	식품접객조리판매품	11.3	건강보조식품	2.7	건강보조식품	4.8
3	얼음	7.0	얼음	5.8	기구·용기포장류	9.0	건포류	2.7	얼음	4.6
4	아이스크림류	4.0	특수영양식품	5.1	식품첨가물	3.1	과자류	2.5	특수영양식품	4.2
5	농산물	3.1	건포류	3.9	인삼제품류	3.0	김치·절임식품	2.4	인삼제품류	4.0
6	기타식품류	3.0	건강보조식품	3.8	과자류	2.8	청량음료	2.3	식품첨가물	3.1
7	식품첨가물	2.7	기타식품류	3.1	김치·절임식품	2.7	얼음	2.1	식용유지	2.2
8	과자류	2.7	과자류	2.8	기타식품류	2.1	기타식품류	1.9	과자류	1.8
9	수산물	2.6	농산물	2.0	건강보조식품	1.7	특수영양식품	1.9	건포류	1.8
10	어육제품	2.0	아이스크림류	1.9	특수영양식품	1.7	기구·용기포장류	1.8	김치·절임식품	1.7

주: 수치는 부적합률(%)이며, 순위는 부적합률 기준임.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1999~2003. 자료 재구성.

제 2 절 수입식품 검사실적

1. 연도별 검사 실적

<표 3-5>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수입식품 검사건수, 중량, 금액, 부적합률 등이 연도별로 제시되어있다.

검사건수, 중량, 금액, 부적합 건수 등 모든 면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부적합률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02년에 0.44%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5> 수입식품 검사실적

(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imported food, 1998~2002)

(단위: 건, 천톤, 백만달러, %)

구분	검사건수	중량	금액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1998	68,550	8,224	3,152	308	0.45
1999	108,280	9,780	3,574	629	0.58
2000	133,761	10,351	4,036	794	0.59
2001	147,742	10,514	4,283	879	0.59
2002	166,723	10,487	4,621	726	0.44

자료: 2002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03(2002년 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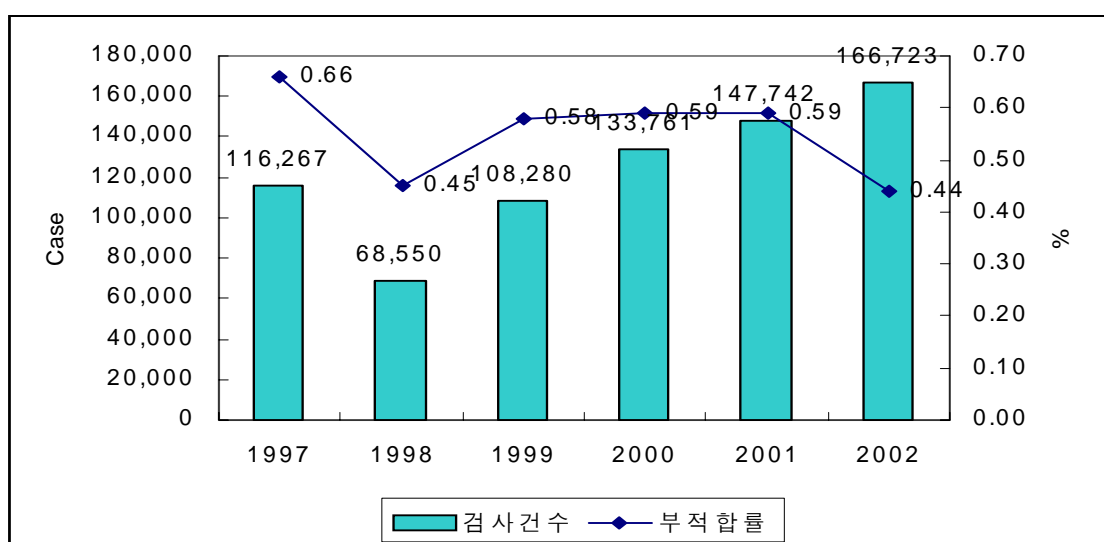
1995년 WTO 출범이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수입품의 연도별 검사실적이 [그림 3-2]에

제시되어있다.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수입식품 검사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식품검사실적과 마찬가지로 부적합률은 1997년 0.66%에서 2002년 0.44%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적합률은 일본의 0.1%~0.3% 수준과는 비슷한 경향이나 미국의 3% 내외와 비교해 보면 단연 낮게 나타나고 있어 검사건수는 감소하더라도 부적합률은 높아져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겠다.

[그림 3-2] 수입식품 검사 실적(1997~2002년)(Inspection of imported food)

(단위: 건, %)



2. 검사종류별 검사실적

<표 3-6>에는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수입식품 검사종류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 등 4종류가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서류검사가 전체 검사실적의 약 80%내외로 가장 점유율이 높고, 관능검사가 1~2%내외, 그리고 무작위표본검사를 포함한 정밀검사 비율이 전체의 15%내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검사 표본추출비율을 최고 30%까지 상향조정하여 비록 정밀검사가 면제된 제품에 대해서도 높은 강도의 검사를 무작위로 실시하고 있다.

〈표 3-6〉 검사종류별 수입식품 검사실적(Inspection of imported food by classification)

(단위: 건, %)

구분	계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검사포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8	68,550	100.0	56,844	82.9	760	1.1	10,946	16.0
1999	108,280	100.0	88,671	81.9	1,090	1.0	18,519	17.1
2000	133,761	100.0	108,656	81.2	3,874	2.9	21,231	15.9
2001	147,742	100.0	121,629	82.3	3,831	2.6	22,282	15.1
2002	166,723	100.0	138,968	83.4	1,915	1.1	25,840	15.5

자료: 2002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2003(2002년 말 기준임).

3. 검사종류별 부적합 실적

〈표 3-7〉에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각 수입식품 검사종류별 부적합 실적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서류검사의 부적합률은 매해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관능검사의 부적합률은 서류검사에 비해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며, 정밀검사의 부적합률은 평균치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검사유형별로 보았을 때 부적합률이 가장 높은 검사유형은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관능검사, 그리고 서류검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통상문제로 정밀검사 비율을 무조건 상향조정할 수 없으므로 무작위표본검사 비율을 품목별로 조정하여 적용함이 요망된다.

〈표 3-7〉 검사종류별 부적합 실적(1998~2002년)

(Inspection of collected food samples in foreign, 1998~2002)

(단위: 건, %)

구분	1998 ¹⁾		1999		2000		2001		2002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검사 건수	부적합률
합계	68,550	0.45	108,280	0.58	133,761	0.59	147,742	0.59	166,723	0.43
서류검사	56,845	0.06	88,671	0.14	108,656	0.14	121,629	0.09	138,968	0.03
관능검사	760	2.63	1,090	3.03	3,874	0.85	3,831	0.65	1,915	1.78
정밀검사	9,567	2.54	16,687	2.56	18,954	2.89	18,927	3.33	22,490	2.80
무작위표본검사	1,378	1.02	1,832	2.35	2,278	2.94	3,355	3.52	3,350	1.91

주: 1) 1998년부터 축산물관련검사는 농림부 이관됨.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0~2003. 자료 재구성.

4. 국가별 부적합 실적

<표 3-8>에는 연도별로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실적이 높은 10대 국가를 순위별로 정리한 결과가 제시되어있다.

<표 3-8> 국가별 부적합 현황(1998~2002년)

(Status of failed imported foods-top ten Countries, 1998~2002)

국가별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1	인디아	미국	중국	중국	중국
2	중국	중국	미국	미국	미국
3	미국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캐나다
4	뉴질랜드	일본	일본	일본	일본
5	이탈리아	인디아	호주	대만	호주
6	일본	말레이시아	프랑스	호주	대만
7	프랑스	멕시코	태국	캐나다	태국
8	태국	태국	독일	태국	뉴질랜드
9	베트남	캐나다	이탈리아	북한	베트남
10	호주	덴마크	대만	벨기에	독일

주: 부적합건수 기준임.

자료: 식약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2000~2003.

1998년에는 인도, 중국, 미국 순이었고, 2002년에는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순으로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간 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 베트남 등 비교적 위생취약국가와 미국, 일본, 호주 등 위생선진국이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국가로 순위를 차지하였는데 위생취약국은 말 그대로 위생수준이 취약하고, 위생선진국은 수입물량이 많다보니 부적합률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5. 품목군별 부적합 실적

<표 3-9>는 연도별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품목군이 순위별로 제시되어있다.

매해 가공식품의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의 매년 순위만 변동이 있을 뿐 가공식품이외에 농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이 부적합 건수가 많은 품목군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9〉 품목군별 부적합 현황(Results of failed inspection for food category)

품목군별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1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2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농·임산물	농·임산물	농·임산물
3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4	농·임산물	농·임산물	기구 및 용기·포장	기구 및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주: 부적합 건수 기준임.

자료: 식약청, 『수입식품 등검사연보』, 1999~2003 자료 재구성.

〈표 3-10〉에는 품목별 부적합 현황이 연도별로 제시되어있다. 각 연도별로 부적합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10대 품목이 분석되어있는데 2000년에 2위로 분석되었던 영양보충용식품이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간 연속 1순위로 나타나 수입식품의 수입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국내도 건강보조식품이 유행하면서 수입품도 영양이나 건강과 관련한 제품이 많이 수입되고 따라서 부적합률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표 3-10〉 품목별 부적합 현황(Results of failed inspection for food)

순위	1998	1999	2000	2001	2002
1	화분가공식품	연육	조미건어포	영양보충용식품	영양보충용식품
2	연육	혼합제제	영양보충용식품	조미건어포류	식용변데기 가공품 등
3	기타 빵 및 떡류	기타 가공품	식용변데기 가공품 등	식용변데기 가공품 등	당류가공품
4	기타 가공품	천연향신료단순품	카스테라, 크림빵 이외의 빵	옥수수알곡	과실류채소류가공품
5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기계·기구 중 폴리에틸렌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과실음료	프로폴리스추출물 가공식품
6	기계기구류 중 합성수지	식용 변 데 기 가 공 품 등	곡류가공품	소스류	수산물가공식품
7	식용변데기 가공품 등	소스류	황기(단너삼) 뿌리/건조	당류가공품	소스류
8	엑사페이스트 영·유아식	기타 조미가공식품	전복이외의 건어포류	오이초절임 등	사탕류
9	소스류	비스킷류	고추냉이가공품, 겨자가공품이외의 향신료조제품	구기자/건조	화분가공식품
10	혼합침출차	건조당절임, 가공초컬릿	초컬릿 및 가공품	기타빵 및 떡류	건조당절임이외의 당절임

주: 부적합 건수 기준임.

자료: 식약청, 『수입식품 등검사연보』, 1999~2003.자료 재구성.

제 3 절 부적합 처분 현황 및 결과 분석

1. 총괄현황

최근 3년간(2000년 7월부터~2003년 6월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806,389건(미생물권장규격, 수입식품검사 제외)의 식품등을 검사한 실적이 <표 3-11>에 제시되어있다.

3년간 검사된 전체 검사 시료 806,389건 중 부적합이 12,081건으로 부적합률은 평균 1.50%로 나타났다.

<표 3-11> 국내 식품검사실적 총괄(Overview of domestic inspection for food)

(단위: 건, %)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806,389	794,308	12,081	1.5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2. 검사기관별 현황

<표 3-12>에는 검사기관별 식품검사실적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지방식약청의 순으로 검사실적이 많았으나 부적합률은 지방청이 3.00%로 다른 두 기관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1995년 지자체 출범이후 줄곧 지적되어온 민선 지자체장의 온정주의 결과가 이 자료에도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표 3-12> 검사기관별 국내 식품검사실적 총괄

(Overview of domestic inspection for food by inspectional facilities)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총계	806,389	794,308	12,081	1.50
지방청	19,587	19,000	587	3.00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80,054	374,740	5,314	1.40
식품위생검사기관	406,748	400,568	6,180	1.5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표 3-13>은 부적합률이 높은 순위별로 품목을 제시한 자료이다. 지난 3년간 분석된 자료에 의하면 부적합 검수 및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식품군은 식용유지류였고, 그 다음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얼음(식용), 주류, 아이스크림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류와 식육류가 높은 부적합률을 나타내는 일본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검사품목을 이 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함이 필요하다.

<표 3-13> 부적합 순위별 품목 현황(Failed status of food inspection)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합계	806,389	794,308	12,081	1.50
식용유지류	39,830	37,391	2,439	6.12
건강보조식품	4,368	4,106	262	6.00
특수영양식품	5,207	4,934	273	5.24
얼음	1,795	1,702	93	5.18
주류	3,078	2,951	127	4.13
아이스크림제품류	4,673	4,494	179	3.83
인삼제품류	9,075	8,734	341	3.76
건포류	19,305	18,715	590	3.06
기구용기포장	22,558	22,192	366	1.62
기타식품류	90,753	89,311	1,442	1.59
음료류	21,853	21,506	347	1.59
조미식품	50,169	49,448	721	1.44
농산물	99,214	97,923	1,291	1.30
식육제품	28,748	28,395	353	1.23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	44,694	44,158	536	1.20
식품첨가물	8,024	7,928	96	1.20
다류	22,475	22,233	242	1.08
과자류	116,860	115,685	1,175	1.01
김치절임식품	41,933	41,578	355	0.85
기타	38,318	38,030	288	0.75
당류	2,294	2,279	15	0.65
수산물	30,240	30,060	180	0.60
면류	18,123	18,019	104	0.57
유가공품	4,303	4,282	21	0.49
축산물	1,473	1,466	7	0.48
어육제품	31,207	31,084	123	0.39
두부류 또는 묵류	45,819	45,704	115	0.25

주: 기타는 상기 품목이외의 품목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가. 품목별 검사실적

<표 3-14>에는 식품공전에 분류된 품목별 검사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2002년까지 분석자료에 의하면 건강보조식품의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03년 품목별 검사실적을 종합해 보면 식용유지류가 가장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으로 분석되었다.

<표 3-14> 품목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합계	806,389	794,308	12,081	1.50
과자류	116,860	115,685	1,175	1.01
당류	2,294	2,279	15	0.65
아이스크림제품류	4,673	4,494	179	3.83
유가공품	4,303	4,282	21	0.49
식육제품	28,748	28,395	353	1.23
어육제품	31,207	31,084	123	0.39
두부류또는묵류	45,819	45,704	115	0.25
식용유지류	39,830	37,391	2,439	6.12
면류	18,123	18,019	104	0.57
다류	22,475	22,233	242	1.08
음료류	21,853	21,506	347	1.59
특수영양식품	5,207	4,934	273	5.24
건강보조식품	4,368	4,106	262	6.00
조미식품	50,169	49,448	721	1.44
얼음	1,795	1,702	93	5.18
인삼제품류	9,075	8,734	341	3.76
김치절임식품	41,933	41,578	355	0.85
주류	3,078	2,951	127	4.13
건포류	19,305	18,715	590	3.06
기타식품류	90,753	89,311	1,442	1.59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	44,694	44,158	536	1.20
농산물	99,214	97,923	1,291	1.30
수산물	30,240	30,060	180	0.60
축산물	1,473	1,466	7	0.48
기타	38,318	38,030	288	0.75
식품첨가물	8,024	7,928	96	1.20
기구용기포장	22,558	22,192	366	1.62

주: 기타는 상기 품목이외의 품목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나. 식품종별 검사실적

식품공전에 분류된 품목을 검사항목별로 검사한 결과가 <표 3-15>에 제시되어있다.

부적합률이 높은 시험항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과자류의 경우는 산가와 과산화물가가 가장 부적합률이 높았으며, 유가공품의 경우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다른 검사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15> 식품종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ood type)

(단위: 건, %)

구분	합계	과자류	당류	아이스크림제품류	유가공품
총계	13,623	1,297	14	216	25
대장균	720	37	-	-	1
대장균군	2,083	98	-	142	7
세균수	1,687	111	-	63	7
식중독균	262	17	-	-	-
산가	1,835	340	-	-	-
과산화물가	907	258	-	-	-
요오드가	1,435	-	-	-	-
수분	559	38	-	-	-
성상	296	87	-	2	4
비중	14	-	-	-	-
굴절률	21	-	-	-	-
회분	53	-	-	-	-
이산화황	127	26	2	-	-
보존료	478	102	-	-	-
인공감미료	192	21	-	-	-
타르색소	118	28	-	-	-
농약	1,201	-	-	-	-
내용량	229	63	2	-	-
표시량미달	60	33	-	1	-
사용이외의원료	23	-	-	-	-
표백제	63	-	-	-	-
고형량, 고형분	55	1	-	-	3
붕해시험	79	-	-	-	-
성분함량미달	680	5	2	8	2
산도	21	-	8	-	-
기준초과성분	84	-	-	-	-
허용외첨가물	8	-	-	-	-
기타	333	32	-	-	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표 3-15〉 계속(Continued)

(단위: 건, %)

구분	식육제품	어육제품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다류
합계	358	125	115	3,556	113	250
대장균	42	7	10	1	1	1
대장균군	254	76	17	-	14	8
세균수	23	4	9	-	63	158
식중독균	3	2	-	-	-	-
산가	-	-	7	1,435	1	-
과산화물가	-	-	-	622	1	-
요오드가	-	-	-	1,434	-	-
수분	-	-	-	3	7	62
성상	8	3	2	19	8	3
비중	-	-	-	12	-	-
굴절률	-	-	-	19	-	-
회분	-	-	1	-	-	-
이산화황	-	-	-	-	-	-
보존료	21	31	55	-	5	2
인공감미료	-	-	-	-	-	-
타르색소	-	-	1	-	6	3
농약	-	-	-	-	-	-
내용량	2	2	1	2	6	7
표시량미달	-	-	-	-	-	-
사용이외의원료	-	-	-	-	-	4
표백제	-	-	-	-	-	-
고형량, 고형분	-	-	1	1	-	-
붕해시험	-	-	-	-	-	1
성분함량미달	-	-	11	-	-	-
pH	-	-	-	-	-	-
기준초과성분	5	-	-	-	-	-
허용외첨가물	-	-	-	-	-	-
기타	-	-	-	8	1	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일본에서는 부적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식육제품을 보면 우리나라 식육제품에는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육제품, 두부류 및 묵류도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식육제품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식용유지류는 산가와 요오드가가 1,000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계속(Continued)

(단위: 건, %)

구분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조미식품	열음
합계	425	332	406	762	106
대장균	-	1	-	14	-
대장균군	101	111	60	185	37
세균수	244	1	19	33	50
식중독균	-	-	-	3	-
산가	-	-	8	13	2
과산화물가	-	-	3	-	-
요오드가	-	-	1	-	-
수분	-	6	8	280	-
성상	47	2	1	17	2
비중	-	-	2	-	-
굴절률	-	-	2	-	-
회분	-	-	3	18	-
이산화황	-	-	-	-	-
보존료	11	6	4	64	-
인공감미료	-	-	-	1	-
타르색소	-	-	-	44	-
농약	-	-	-	-	-
내용량	1	4	8	13	1
표시량미달	1	14	-	3	-
사용이외의원료	1	6	1	-	-
표백제	-	-	-	-	-
고형량, 고형분	-	-	-	-	-
붕해시험	-	18	30	-	-
성분함량미달	9	148	243	66	-
pH	-	-	1	1	4
기준초과성분	1	11	2	-	-
허용외첨가물	-	-	-	-	-
기타	9	4	10	7	1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음료류와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은 모두 대장균군이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그 다음은 세균수로 나타났다. 열음은 반대로 세균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장균군으로 나타났다으며, 조미식품의 경우 수분이 가장 부적합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3-15〉 계속(Continued)

(단위: 건, %)

구분	인삼제품류	김치절임식품	주류	건포류	기타식품류
합계	373	402	133	678	1484
대장균	-	4	-	34	499
대장균군	13	22	1	513	47
세균수	174	7	-	6	447
식중독균	-	2	-	4	131
산가	-	-	-	-	18
과산화물가	1	1	-	-	14
요오드가	-	-	-	-	-
수분	25	5	-	65	48
성상	4	3	5	22	27
비중	-	-	-	-	-
굴절률	-	-	-	-	-
회분	-	-	-	-	10
이산화황	1	12	-	16	11
보존료	11	138	3	2	5
인공감미료	-	82	87	-	1
타르색소	-	26	-	-	3
농약	7	-	-	-	3
내용량	62	4	-	9	16
표시량미달	-	6	-	-	2
사용이외의원료	5	-	3	-	2
표백제	-	-	-	7	-
고형량, 고형분	7	1	-	-	10
붕해시험	1	-	-	-	12
성분함량미달	39	84	14	-	42
pH	-	-	-	-	7
기준초과성분	2	2	8	-	46
허용외첨가물	-	-	7	-	-
기타	21	3	5	-	8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인삼제품류는 세균수가 가장 많고 고가격 제품답게 내용량에 관한 부적합 처분이 높게 나타났다. 김치절임식품은 보존료와 성분함량 미달 및 인공감미료가 문제가 되었고 주류는 인공감미료와 성분함량이 건포류는 대장균군과 수분이 기타식품류는 대장균과 세균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계속(Continued)

(단위: 건, %)

구분	식품별기준 및 규격외의 일반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기타
합계	612	1322	187	7	325
대장균	36	-	17	1	14
대장균군	273	-	14	-	90
세균수	159	1	11	-	97
식중독균	28	-	59	4	9
산가	9	-	-	-	2
과산화물가	7	-	-	-	-
요오드가	-	-	-	-	-
수분	2	-	9	-	1
성상	15	4	4	-	7
비중	-	-	-	-	-
굴절률	-	-	-	-	-
회분	-	17	-	-	4
이산화황	10	13	5	-	31
보존료	6	5	-	-	7
인공감미료	-	-	-	-	-
타르색소	-	4	1	-	2
농약	6	1,183	-	-	2
내용량	25	1	-	-	-
표시량미달	-	-	-	-	-
사용이외의원료	1	-	-	-	-
표백제	-	45	-	-	11
고형량, 고형분	15	-	3	-	13
붕해시험	8	-	-	-	9
성분함량미달	-	-	7	-	-
pH	-	-	-	-	-
기준초과성분	4	2	1	-	-
허용외첨가물	-	-	1	-	-
기타	8	47	55	2	26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일반가공식품의 경우는 대장균군과 세균수가 많아 부적합을 받았고 농산물은 농약, 수산물은 식중독균과 기타, 축산물은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미량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대장균군(2,803), 산가(1,835), 세균수(1,687), 요오드가(1,435), 농약(1,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 지방청별 검사실적

1) 청별 현황

<표 3-16>에는 지방청별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6개 지방청의 평균 부적합률은 3.38%로 나타났고, 총검사건수로 보면 경인청, 부산청, 서울청의 순으로 많았고, 부적합률을 보면 부산청, 광주청, 서울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6> 지방식약청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regional KFDA)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총계	20,589	19,894	695	3.38
서울청	3,363	3,247	116	3.45
경인청	4,460	4,366	94	2.11
대전청	2,903	2,816	87	3.00
대구청	2,740	2,657	83	3.03
광주청	3,190	3,057	133	4.17
부산청	3,933	3,751	182	4.63

주: 미생물관장규격(1,002건)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2) 식품별 현황

<표 3-17>에는 6개 지방청이 검사한 실적의 종합 분석치가 제시되어있다.

총 20,589건을 검사하였으며 이중에 695건이 부적합 처분을 받아 식약청에서 수거검사한 대상제품의 평균 부적합률은 3.38%로 나타났다.

지방청에서 검사한 실적에 의하면 주류, 미생물관장규격대상의 기타식품, 건포류, 김치절임식품, 건강보조식품, 과자류의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표 3-16>에 제시된 지난 3년간 전체 검사기관이 검사한 실적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사항은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냉면육수와 수족관물을 제외한 미생물관장규격대상 품목들의 부적합률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기타식품과 더불어 접객용음용수와 조리용구가 부적합률이 높아 식품접객업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류의 전반적인 위생수준이 낮음을 짐작케한다.

〈표 3-17〉 식품군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ood category)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합계	20,589	19,894	695	3.38
과자류	1,439	1,352	87	6.05
당류	61	58	3	4.92
아이스크림제품류	302	299	3	0.99
유가공품	375	372	3	0.80
식육제품	812	805	7	0.86
어육제품	208	207	1	0.48
두부류또는묵류	492	463	29	5.89
식용유지류	450	433	17	3.78
면류	254	248	6	2.36
다류	394	384	10	2.54
음료류	523	508	15	2.87
특수영양식품	397	361	36	9.07
건강보조식품	203	189	14	6.90
조미식품	1,344	1,324	20	1.49
얼음	79	78	1	1.27
인삼제품류	192	178	14	7.29
김치절임식품	466	415	51	10.94
주류	104	84	20	19.23
건포류	362	319	43	11.88
기타식품류	1,732	1,666	66	3.81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	831	818	13	1.56
농산물	6,500	6,442	58	0.89
수산물	686	644	42	6.12
축산물	222	220	2	0.90
기타	309	293	16	5.18
미생물권장규격대상: 냉면육수	31	31	-	-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접객용음용수	393	362	31	7.89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수족관물	25	25	-	-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조리용구	28	27	1	3.57
미생물권장규격대상: 기타	525	449	76	14.48
식품첨가물	354	347	7	1.98
기구용기포장	496	493	3	0.6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실적

1) 지역별 현황

<표 3-18>에는 각 시도에 있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지방식약청의 검사실적에 비해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실적은 부적합률이 약 2배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전체 평균 부적합률이 1.58%로 나타났고, 지역별로 보면 대전, 충북, 광주, 경북, 충남의 순으로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8> 기관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acilities)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총계	431,667	424,841	6,826	1.58
서울	149,040	147,052	1,988	1.33
인천	16,426	16,191	235	1.43
경기	47,457	46,636	821	1.73
대전	16,436	15,966	470	2.86
충남	13,762	13,487	275	2.00
충북	9,853	9,627	226	2.29
전남	20,992	20,703	289	1.38
전북	23,526	23,206	320	1.36
광주	14,649	14,327	322	2.20
경남	16,239	15,905	334	2.06
경북	16,096	15,753	343	2.13
대구	42,137	41,684	453	1.08
울산	8,060	7,929	131	1.63
부산	10,652	10,514	138	1.30
강원	20,935	20,522	413	1.97
제주	5,407	5,339	68	1.26

주: 미생물관장규격(51,613건) 포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2) 식품군별 현황

<표 3-19>에는 식품군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기타식품류를 제외하고는 주류, 아이스크림류, 인삼제품류, 특수영양식품류, 식용유지류의 순으로 부적합 처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검사결과는 집객용음용수와 조리용구에 관한 부적합률로 <표 3-17>에 제시된 식약청의 부적합률에 비해 거의 1/2 수준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처럼 두 기관간 차

이가 발생하는 원인에 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하다.

〈표 3-19〉 식품군별 검사실적(Results of inspection for domestic food category)

(단위: 건, %)

구분	총검사전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총계	431,667	424,841	6,826	1.58
과자류	50,943	50,157	786	1.54
당류	1,833	1,824	9	0.49
아이스크림제품류	2,783	2,709	74	2.66
유가공품	3,352	3,338	14	0.42
식육제품	10,284	10,195	89	0.87
어육제품	5,254	5,218	36	0.69
두부류또는묵류	9,715	9,649	66	0.68
식용유지류	11,435	11,191	244	2.13
면류	10,874	10,802	72	0.66
다류	11,693	11,575	118	1.01
음료류	10,174	10,019	155	1.52
특수영양식품	2,616	2,555	61	2.33
건강보조식품	900	854	46	5.11
조미식품	21,949	21,637	312	1.42
얼음	883	825	58	6.57
인삼제품류	2,121	2,066	55	2.59
김치절임식품	14,819	14,607	212	1.43
주류	2,733	2,628	105	3.84
건포류	15,546	15,219	327	2.10
기타식품류	25,433	24,740	693	2.72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	20,496	20,302	194	0.95
농산물	90,515	89,302	1,213	1.34
수산물	28,826	28,731	95	0.33
축산물	609	608	1	0.16
기타	8,997	8,908	89	0.99
미생물권장규격대상: 냉면육수	3,665	3,571	94	2.56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접객용음용수	9,808	9,444	364	3.71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수족관물	7,255	6,791	464	6.40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조리용구	26,531	26,172	359	1.35
미생물권장규격대상: 기타	4,354	4,123	231	5.31
식품첨가물	3,790	3,757	33	0.87
기구용기포장	11,481	11,324	157	1.3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마. 식품위생검사기관 검사실적

<표 3-20>에는 (민간)식품위생검사기관별 검사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전체 부적합 비율은 평균이 1.60%로 여전히 지방식약청의 부적합처분 비율의 1/2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20> 기관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Non-Gov. facilities)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합계	315,867	310,816	5,051	1.60
보건산업진흥원	11,446	10,957	489	4.27
한국식품연구소	53,120	51,998	1,122	2.11
한국식품연구소부산지소	1,959	1,922	37	1.89
한국식품개발연구원	2,197	2,099	98	4.46
산업기술시험원	1	1	-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0	10	-	-
목포대학교 식품산업기술연구센터	9,811	9,787	24	0.24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	24,866	24,865	1	-
삼성에버랜드	110	110	-	-
순천대학교식품산업연구소	1,353	1,347	6	0.44
농협중앙회식품연구소	4,995	4,947	48	0.96
(주)현대백화점	2,439	2,344	95	3.90
(주)영웅 환경생명기술연구원	771	771	-	-
(주)삼성테스코품질과학연구소	4,145	3,978	167	4.03
순창군	440	440	-	-
유니푸드테크(주)	16,875	16,785	90	0.53
(주)신세계 상품과학연구소	4,796	4,793	3	0.06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부산분소	7,241	7,212	29	0.40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6,826	6,711	115	1.68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	3,801	3,801	-	-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식품영양연구소	9,872	9,872	-	-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5,291	5,291	-	-
(주)한화유통 상품연구소	3,090	3,080	10	0.32
한국어육연제품공업협동조합	10,986	10,973	13	0.12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인천광역시지부	14,388	12,905	1,483	10.31
한국인삼제품협회	2,457	2,376	81	3.30
(주)랩프런티어	2,124	2,104	20	0.94
(주)이씨테크 환경생명기술연구원	23,741	23,710	31	0.13
LG유통상품연구소	27,729	27,316	413	1.49
(주)과학기술분석센터	15,737	15,663	74	0.47
(주)동진분석기술연구소	4,720	4,685	35	0.74
(주)에이앤드에프	28,638	28,177	461	1.61
한국인삼연초연구원	9,563	9,467	96	1.00
한국화학시험연구원	318	308	10	3.14
고려대부설식품가공핵심기술센터	11	11	-	-

주: 2000.7~2002.12까지의 검사기관별 실적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기관별로 보면 한국압착식용유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부가 10.31%, 한국식품개발원이 4.46%,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4.27%로 평균보다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1〉 식품군별 검사실적(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ood category)

(단위: 건, %)

구분	총검사건수	적합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총계	413,505	407,218	6,287	1.52
과자류	64,478	64,176	302	0.47
당류	400	397	3	0.75
아이스크림제품류	1,588	1,486	102	6.42
유가공품	576	572	4	0.69
식육제품	17,652	17,395	257	1.46
어육제품	25,745	25,659	86	0.33
두부류 또는 묵류	35,612	35,592	20	0.06
식용유지류	27,945	25,767	2,178	7.79
면류	6,995	6,969	26	0.37
다류	10,388	10,274	114	1.10
음료류	11,156	10,979	177	1.59
특수영양식품	2,194	2,018	176	8.02
건강보조식품	3,265	3,063	202	6.19
조미식품	26,876	26,487	389	1.45
얼음	833	799	34	4.08
인삼제품류	6,762	6,490	272	4.02
김치절임식품	26,648	26,556	92	0.35
주류	241	239	2	0.83
건포류	3,397	3,177	220	6.48
기타식품류	63,588	62,905	683	1.07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	23,367	23,038	329	1.41
농산물	2,199	2,179	20	0.91
수산물	728	685	43	5.91
축산물	642	638	4	0.62
기타	29,012	28,829	183	0.63
미생물권장규격대상: 냉면육수	159	159	-	-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접객용음용수	44	44	-	-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수족관물	10	10	-	-
미생물권장규격대상: 조리용구	2,958	2,955	3	0.10
미생물권장규격대상: 기타	3,586	3,482	104	2.90
식품첨가물	3,880	3,824	56	1.44
기구용기포장	10,581	10,375	206	1.9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내부자료, 2003.

식품군별로 검사실적을 보면 특수영양식품이 8.02%, 건포류 6.48%, 건강보조식품이 6.19%, 그리고 수산물이 5.91%로 높게 나타났다.

바. 각 기관별 검사결과 비교

검사기관별 부적합 처분을 내린 우선순위 5개 품목을 정리한 결과가 <표 3-22>에 제시되어있다.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검사기관별 부적합 처분 식품의 순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검사대상 품목, 항목이 상이해서인지, 검사기술에 차이가 있어서인지 등

<표 3-22> 기관별 부적합 처분 식품

(Inspection for domestic food by facilities-Gov. and Non-Gov.)

순위	지방식약청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
1순위	주류	기타식품류	특수영양식품
2순위	건포류	주류	식용유지류
3순위	김치절임식품	아이스크림류	건포류
4순위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	건강보조식품
5순위	인삼제품류	특수영양식품류	수산물

제 4 장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운영현황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하거나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일본, 미국, 독일 등 EU의 식품검사제도 운영 현황을 고찰하였다.

제 1 절 일본

1. 일본의 식품위생체계²⁾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식품수입국으로 국제 사회에서 우리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과거부터 다원화된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1998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개칭한 바가 있으나 일본은 국가식품안전관리체계에 전혀 변화 없이 과거 조직을 유지하다가 2003년 7월에 획기적인 전환을 시도하였다.

즉, 다원화된 조직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직 설치를 목적으로 우선 총리산하에 국가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근거법으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 안전에 관한 정부, 업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부록 2. 참조).

또한 2003년 8월에는 식품검사제도와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위해중심의 검사항목 수정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였고, 긴급명령제도를 대물, 대인까지 확대 조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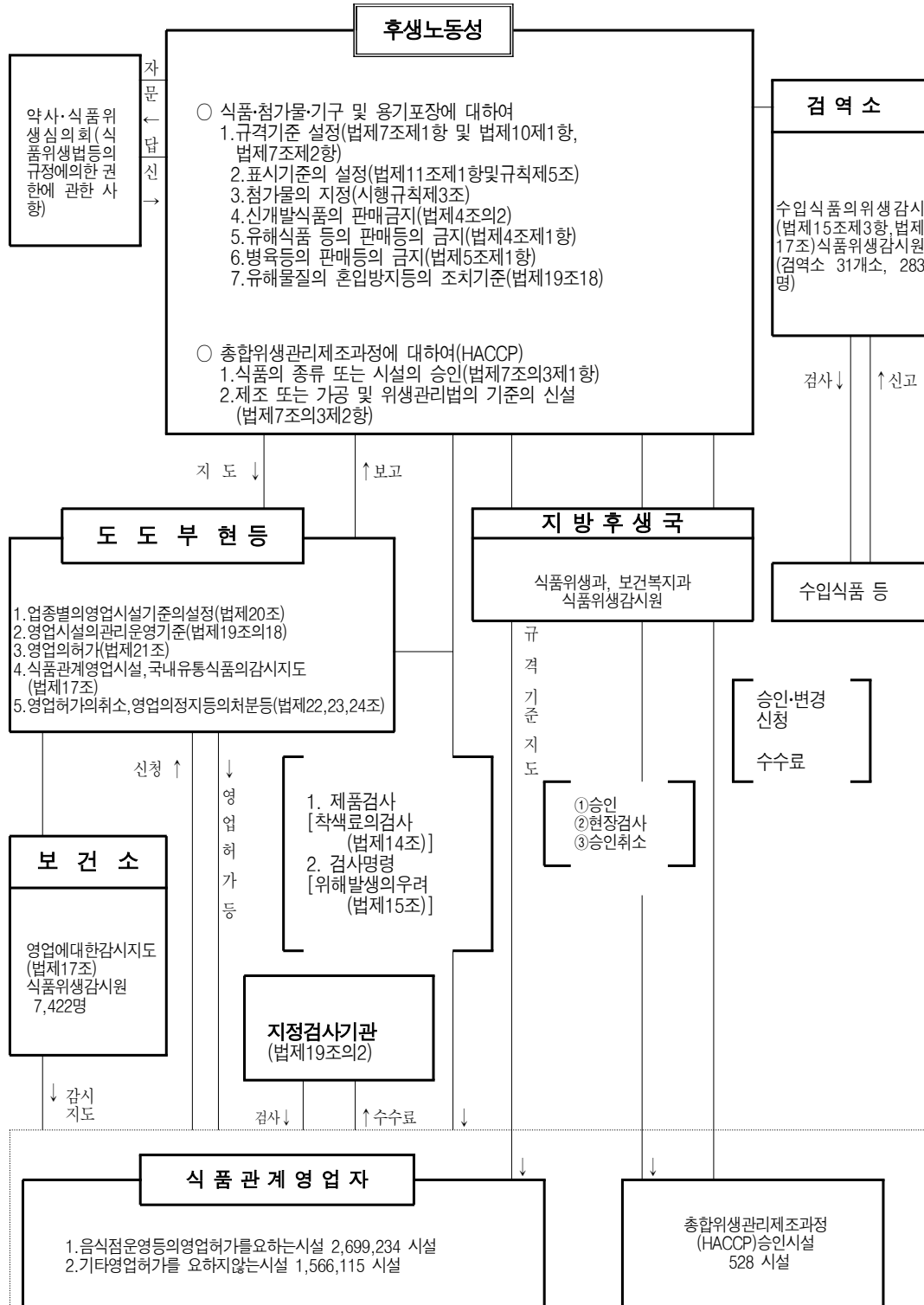
[그림 4-1]에는 일본 식품행정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관련 조직 체계가 제시되어있다.

후생노동성과 지방조직인 지방 후생국이 연결되는 중앙정부 조직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보건소, 업체와 연결되는 지방정부 조직체계가 있다.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후생노동성과 지방 후생국은 HACCP 관련 승인 등 조치와 기준규격 설정 및 관리 등 주로 기획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규격 및 기준과 표시기준을 설정하며 위반식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다. 지방정부 조직체계는 현장업무 즉, 법의 집행과 처벌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의 산하기관인 검역소가 수입식품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안전추진계획 주요내용의 재구성(<http://www.mhlw.go.jp/topics/0101/tp0118-1.html>)

[그림 4-1] 식품위생행정 개요 (Outline of regulative food administration)



자료: 일본후생통계협회, 『국민위생의 동향』, 제50-9호, 2003년. 2002년 4월 기준 현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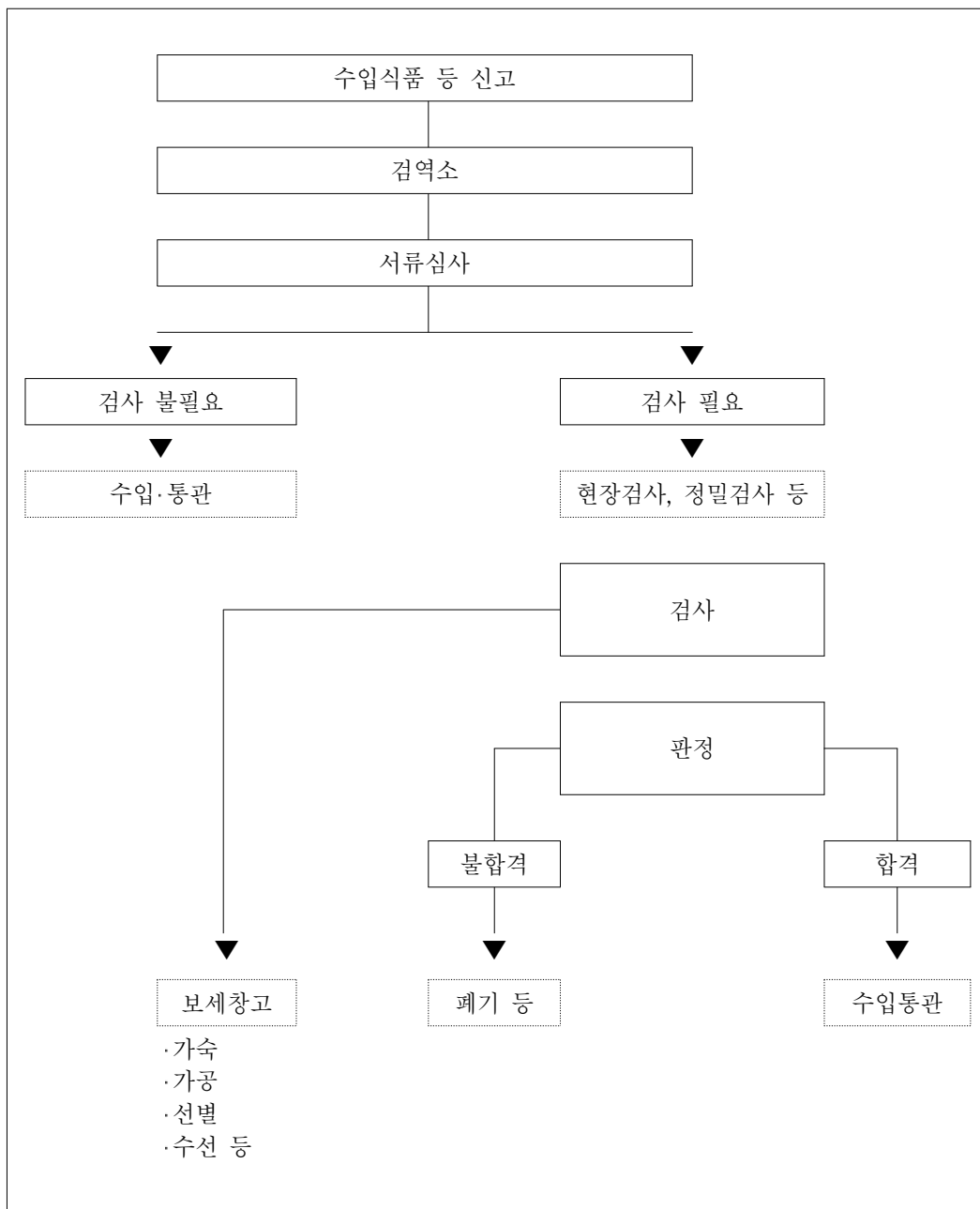
또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을 지정하여 비지정 식품첨가물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고, 유해식품 및 병육 등의 판매 금지와 유해물질 혼입 등의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HACCP를

적용하여 식품의 종류, 시설의 승인, 제조·가공 및 위생관리방법 등 식품위생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2.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체계

[그림 4-2]에는 일본의 수입식품 검사체계가 제시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방청이 담당하는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일본에서는 검역소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체계와 동일하다.

[그림 4-2] 수입식품 등의 검사 조직체계
(Inspected system for imported foods in Japan)



자료: 일본 후생통계협회, 『국민위생의 동향』, 제49~9호,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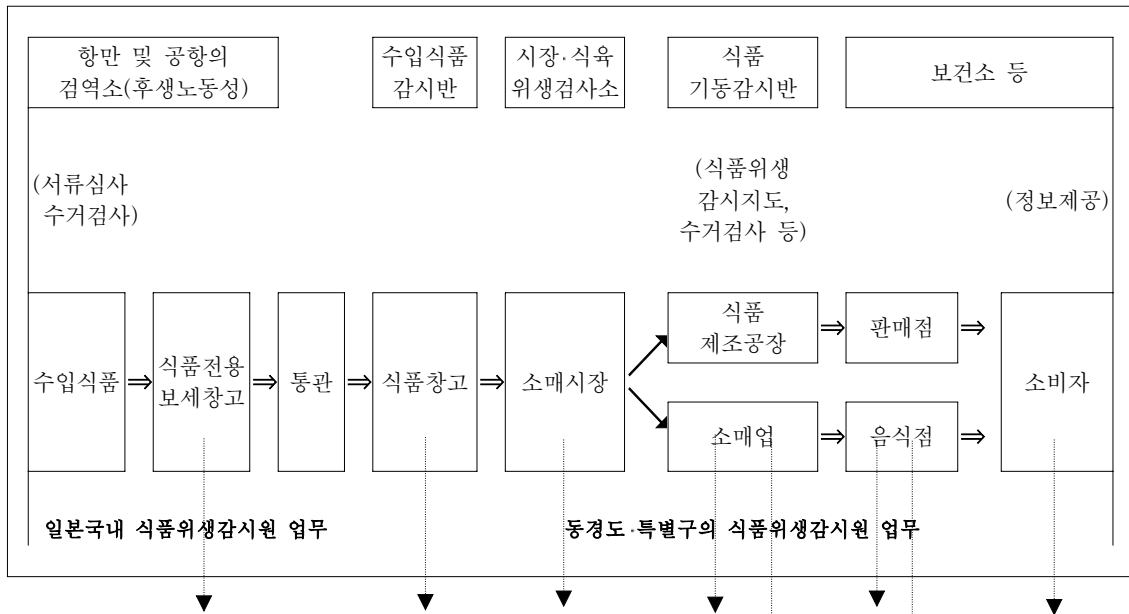
3. 동경도의 식품위생 조직체계

[그림 4-3]에는 동경도의 식품위생행정 조직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동경도의 식품위생행정조직은 건강국에 속해있는 식품의약품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다.

[그림 4-3] 동경도의 식품 위생감시 조직체계

(Inspected system for imported foods in Tokyo Province)



[그림 4-3]에는 일본 동경도의 유통식품 위생감시 조직체계가 제시되어 있다. 식품감시체계는 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진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차원의 식품위생감시원과 동경도 및 특별구의 지방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이분화되어 감시업무가 실시된다.

즉, 수입식품에 관해서는 통관까지 중앙 식품위생감시원이 담당하고, 식품창고부터 일본내 소매업, 음식점, 식품제조공장, 그리고 소비자까지는 지방정부의 식품위생감시원의 업무가 되고 있다.

[그림 4-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 동경도의 식품의약품안전부에는 식육가공품을 관리하는 식육위생검사소가 소속되어 있고, 따라서 동경도가 실시하는 검사에는 시장 및 식육위생검사소도 일부분을 담당하게 되어있다.

[그림 4-4] 동경도의 건강국 조직도 (Structure of Tokyo Health Care Division)



주: 동경도 건강국, 2003년 4월 1일 기준 조직도(<http://www.kenkou.metro.tokyo.jp/list/itiran.html>)

4. 동경도 지도감시 계획

<표 4-1>에는 2002년 동경도의 월별 식품지도감시 계획이 제시되어있다. 일본은 사계절이 분명한 기후대에 위치하고 있어 월별 차별화된 식품감시계획과 명절 등 특별한 날을 위한 안전대책 및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관한 개별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2002년 연간 총 감시계획 건수는 71,035건으로 월별로 보면 4~5월이 7,951건, 하절기인 6~8월이 35,857건, 9~11월이 10,401건, 12월 연말이 10,808건, 그리고 1~3월이 6,018건으로 계획되어 하절기, 명절, 9~11월의 순으로 감시계획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적은 1~3월은 동절기이자 학교가 방학이다.

5. 검사명령제도

가.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15조 3항에 기인하여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나. 법적 내용

식품위생법 제15조 3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5조 도도부현지사는 정령이 정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있어 다음에 기재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제조 또는 가공한 자의 검사의 능력 등을 보고 그의 자가 제조하고 또는 가공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 그 후 계속해서 해당 각 호에 기재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고,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정령에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그의 자에 대해 해당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해서 해당 도도부현지사 또는 후생대신이 지정한 자가 행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제3항 후생대신은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정령에 정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있어 생산지의 사정 그 외의 사정을 보고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또는 제6조에 규정한 식품에 해당하는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수입한 자에 대해 해당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관해서 후생대신 또는 후생대신이 지정한 자가 행하는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표 4-1〉 식품위생 일제 감시지도 일람(동경도, 2002)

(Synopsis of food inspection and guidance of Tokyo Province: 2002)

(단위: 건)

구분	실시 내용	실시 건수
총계		71,035
4월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시설의 일제 감시 지도 ○ 조리배달 서비스등 을 실시하는 시설의 일제 감시 지도 ○ 식조육(식조 처리장) 일제 감시 지도 ○ 식품 관계 보건소 계획 사업 ○ 자주적 위생 관리 추진 사업 ○ 종합 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 공장의 감시 지도 ○ 그 외(보건소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 등) ○ 표시의 검사·지도 , 위생 교육 	소계: 7,951 1,440 1,398 369 46 1,298 17 3,383
6월~8월 【여름철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일제 수거 검사 ○ 업종별 중점 감시 지도 ○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의 일제 점검 ○ 생식용 식육 및 (기계로)간 고기 등 의 감시 지도 ○ 텐더라이즈·텀블링 처리 등 된 식육 및 식육의 가공제품의 감시 지도 ○ 식품의 일시스톡 시설의 감시 지도 ○ 식품이동판매차 및 행상의 일제 감시 지도 ○ 젓 처리 시설의 위생 관리 상황에 관한 일제 점검 ○ 그 외(보건소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 등) ○ 표시의 검사·지도 , 위생 교육 , 식품위생 지식의 보급 계발 활동 	소계: 35,857
9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관계 보건소 계획 사업 ○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의 일제 점검 ○ 급식 공급자(병원 , 사업소 및 자원봉사 급식 등으로 신고된 시설) 의 일제 감시 지도 ○ 식품의 판매업(디스카운트 스토어 등) 의 일제 감시지도 ○ 식품취급 등 의 개선확인이 필요한 시설의 일제 감시지도 ○ 식조육(식조 처리장) 일제 감시 지도 ○ 액란 제조업·알 선별 포장업의 일제 감시 지도 ○ 학교급식용 빵·면류 제조소 및 쌀밥가공위탁공장 일제감시 지도 ○ 자주적 위생 관리 추진 사업 ○ 그 외(보건소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 등) ○ 표시의 검사·지도 , 위생 교육 	소계: 10,401 459 391 740 2,311 417 104 83 55 2,282 3,559
12월 【연말 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일제 수거검사 ○ 식품의 유통·판매 등 시설의 일제 감시지도 ○ 연말연시용 식품의 제조시설 등 의 일제 감시지도 ○ 생식용이나 나무 취급관계 영업자의 일제 감시지도 ○ 취급관계 영업자의 일제 감시지도 ○ 식육관계 영업자의 일제 감시지도 ○ 음식점(연회 시설) 등 의 일제 감시지도 ○ 야간업의 일제 감시지도 ○ 표시검사 등 	소계: 10,808
1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복지 시설등 급식의 일제 점검 ○ 식품 취급 등 의 개선 확인이 필요한 시설의 일제 감시 지도 ○ 수입 식품에 사용되고 있는 첨가물에 관한 일제 감시 지도 ○ 식조육(식육 판매업) 의 일제 감시 지도 ○ 생식용이나 나무 취급 관계 영업자의 일제 감시 지도 ○ 식품(카즈오 파자등) 제조업의 일제 감시 지도 ○ 자주적 위생 관리 추진 사업 ○ 식품 관계 보건소 계획 사업 ○ 종합 위생관리 제조과정 승인 시설의 감시 지도 ○ 그 외(보건소 독자적인 계획에 의한 사업등) ○ 표시의 검사·지도 , 위생 교육 	소계: 6,018 198 85 956 718 988 517 786 293 20 1,457

주: 보건소 계획 사업은 각 보건소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테마에 기초해 실시하고 있음.

자료: <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2001/h13kanshigaiyo.pdf>

6. 일본의 식품위생감시 실적

<표 4-2, 3, 4, 5>에는 일본내 식품위생감시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가. 식품업체 검사

<표 4-2>에는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개 연도에 걸친 일본 전역의 식품영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감시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1999년에는 총 4,243,215업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 감시를 실시하였으며,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 감시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2> 식품영업시설의 감시지도 현황

(Inspection and guidance for food service establishments)

(단위: 건, %)

구분	현장검사회수	총식품영업시설수	자체불량검체수	불량률
1999	4,429,828	4,243,215	5,041	0.11
2000	4,250,894	4,285,170	6,313	0.15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료(<http://www.mhlw.go.jp/topics/0101/tp0118-1.html>)

후생노동성, 『위생업무 보고』, 2000~2001.

<표 4-3>에는 <표 4-2>에 제시된 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총 4,243,215 업체 중 수거검사를 실시한 업체는 202,230개소로 전체의 4.8%였으며, 수거검사결과 불량률은 1999년 1.41%에서 2000년에는 1.06%로 다소 낮아졌다.

<표 4-3> 수거검사 (Inspection and examination in 2002, Japan)

(단위: 건, %)

구분	총수거검사수	자체불량검체수	불량률
1999	202,230	2,843	1.41
2000	193,912	2,054	1.06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료(<http://www.mhlw.go.jp/topics/0101/tp0118-1.html>)

후생노동성, 『위생업무 보고』, 2000~2001.

나. 축수산식품 검사

일본 내에서 유통되는 축수산식품 검사 현황이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4〉 연도별 축·수산물식품 검사현황

(Inspection of producted foods in domestic, Japan)

(단위: 건, %, 항목)

구분	검체수	검출수	검출율	검사항목수
1995	10,413	40	0.38	71,592
1996	7,207	8	0.11	55,139
1997	8,988	8	0.09	63,780
1998	9,170	6	0.07	53,733
1999	11,215	8	0.07	46,009
2000	9,447	6	0.06	44,204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자료(<http://www.mhlw.go.jp/topics/0101/tp0118-1.html>)

다. 일본의 수입식품 감시 실적

〈표 4-5〉에는 일본에 수입된 식품의 신고, 검사, 위반 현황이 식품별로 제시되어있다 (2002년 기준). 총 위반률은 1.39%로 나타났고, 식품별로 보면 용기 및 포장 10.10%, 농산 식품이 1.80%, 식품첨가물이 1.50%로 가장 높았으며, 음료가 0.06%로 위반률이 가장 낮은 품목으로 나타났으며 위반률이 0.1%를 보인 축산식품, 기구 등이 그 다음 순위였다.

〈표 4-5〉 식품분류별 수입식품 신고·검사·위반현황

(Enforcements of imported foods by classified foods)

(단위: 건, 톤, %)

구분	수입신고 수량		검사수량		위반수량		위반율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비	중량비
총계	1,618,880	33,201,949	136,087	2,732,662	972	38,163	0.71	1.39
축산식품	174,190	2,143,882	9,103	156,276	12	164	0.13	0.10
축산가공식품	146,397	722,862	6,485	58,462	71	324	1.09	0.55
수산물식품	205,523	1,921,060	20,140	119,192	46	100	0.22	0.83
수산가공식품	156,170	1,217,623	26,996	148,070	165	423	0.61	0.28
농산식품	1,95,465	20,557,698	31,933	1,965,967	198	35,393	0.62	1.80
농산가공식품	262,605	3372,860	20,582	219,717	267	1,554	1.29	0.70
그외 식품	141,542	848,091	11,799	31,510	128	125	1.08	0.39
음료	154,254	1,453,458	6,260	27,831	27	17	0.43	0.06
식품첨가물	29,416	362,582	312	2,658	9	40	2.88	1.50
기구	1,34,512	523,462	2,207	2,730	12	3	0.54	0.10
용기 및 포장	7,578	46,101	195	188	36	19	18.4	10.1
장난감	11,228	32,271	75	62	1	0	1.33	-

주: 2002년 기준 자료: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수입식품 감시현황 자료 재구성

(<http://www.mhlw.go.jp/topics/0101/tp0118-1.html>)

7. 동경도의 식품위생감시 실적

<표 4-6>은 동경도의 보건소가 담당하는 연 사업별 내용과 실적이 제시되어있다.

<표 4-6> 연간계획사업내 월별검사(동경도, 2002)

(Monthly inspection in annual master plan of Tokyo Province : 2002)

(단위: 건)

월 사업		검체수	검사건수	불량검체	불량률
총 계		2,700	13,416	99	3.7
4~5월	급식시설	196	932	4	2.0
	즉석 제조, 택배서비스시설	97	466	3	3.1
	식조육	24	152	-	-
	계획사업부문	32	160	1	3.1
6~8월	도시락·조리빵류	99	498	14	14.1
	샐러드·반찬류	188	759	9	4.8
	면류·피제품류	60	197	1	1.7
	두부제품	40	242	5	12.5
	스시·회류	61	427	2	3.3
	생과자류	102	434	11	10.8
	아이스크림류	75	375	8	10.7
	식육가공품	23	97	4	17.4
	수입식품	49	103	-	-
	우유	48	174	-	-
	식육	51	265	5	9.8
	식조육	116	648	-	-
	기타식품	15	65	-	-
9~11월	급식공급시설	205	1,026	-	-
	개선확인 필요시설	81	414	8	9.9
	식품판매업(할인매점)	68	355	5	7.4
	식조육	30	210	-	-
	계획사업부문	206	1,430	4	1.9
12월	가열처리반찬	46	230	-	-
	미가열처리반찬	4	20	-	-
	청과류	35	182	-	-
	생과자류	82	426	6	7.3
	생식용조개류	114	399	-	-
	어육제품	79	360	1	1.3
	어패류가공품	41	152	-	-
	기타	1	3	-	-
1~3월	개선확인 필요시설 감시	69	355	3	4.3
	수입식품사용 첨가물	61	122	3	4.9
	생식용조개취급·관계영업자	48	168	-	-
	식품(생과자 등)제조업	78	390	2	2.6
	식조육	118	826	-	-
	계획사업부문	34	212	-	-
	상기이외 사업	24	142	-	-

주: 기간은 2001년 4월 1일~2002년 3월 31일까지임.

자료: 『동경도위생연감(54호)』, 일본 동경도건강국 식품의약품안전부 식품감시과, 2002.

총 불량률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사업시기별로 보면 하절기인 6~8월의 불량률이 타 절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사업 내용별로 보면 식육가공품의 불량률이 17.4%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도시락 및 조리빵류의 불량률이 14.1%로 나타났고, 두부제품류, 생과자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11월에는 개선확인 필요시설과 식품판매업, 12월에는 생과자류, 1~3월에는 수입식품 첨가물, 4~5월에는 즉석제조 등의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 연도별 현황

1) 수거검사 실적

최근 7년간 동경도의 식품수거검사 실적이 <표 4-7>에 제시되어있다.

부적합률은 연도별로 약간의 등락이 있지만 대체로 0.1%~0.3%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가 거듭할수록 검사건수와 부적합 건수가 같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동경도의 업체 자율점검제 실시와 맥을 같이 하는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정부가 직접 감시하는 강제적 감시행정에서 벗어나 업체 스스로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과 감시를 실시하라는 정부의 권유이다.

<표 4-7> 연도별 수거검사 결과 (Annual collected food inspection)

(단위 : 건, %)

구분	검사 건수	부적합 건수	부적합률
1997. 8	40,240	85	0.2
1998. 8	43,673	78	0.2
1999. 8	40,947	67	0.3
2000. 8	24,438	63	0.3
2001. 8	25,088	59	0.2
2002. 8	25,381	37	0.1
2003. 8	24,067	30	0.1

자료: 일본 동경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kansi.html>)

2) 검사종류별 실적

가) 총괄 현황

<표 4-8>에는 최근 7년간 검사종류별 감시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연도별로 위반률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0.3%에서 0.1%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4-8> 검사종류별 감시결과 총괄현황 (Overall results of enforcement: 1997-2003)

(단위: 건, %)

구분		1997	1998	1999	2000.8	2001.8	2002.8	2003.8
감시 출입횟수		222,146	216,249	214,441	164,321	151,068	144,934	144,050
수거검사 실시횟수		11,424	9,749	9,135	7,128	6,493	5,500	5,882
수거검사	총검사 대상수	40,240	43,673	40,947	24,438	25,088	25,381	24,067
	총위반 검사대상수	85	78	67	63	59	37	30
	위반율(%)	0.2	0.2	0.3	0.3	0.2	0.1	0.1
	화학 검사	검사대상수	19,836	19,132	19,488	12,480	13,499	14,576
		위반검사 대상수	35	17	21	31	42	25
		위반율(%)	0.5	0.2	0.1	0.2	0.3	0.2
	세균 검사	검사대상수	20,404	24,541	21,459	11,958	11,589	10,805
		위반검사 대상수	50	61	46	32	17	12
		위반율(%)	0.2	0.2	0.2	0.3	0.1	0.1
표시검사	검사대상수	536,050	525,224	542,953	303,964	327,435	†	285,619
	위반 검사대상수	2,924	2,390	2,045	1,498	1,047	†	1,306
	위반율(%)	1.1	0.9	0.8	0.5	0.3	†	0.4

주: † 자료없음

자료: 일본 동경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kansi.html>)

나) 화학검사 현황

〈표 4-9〉 연도별 화학검사 결과 (Synopsis of chemical examination results)

구분	1999.8			2001.8			2001.8			2002.8			2003.8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총계	13,878	22	0.2	12,480	31	0.2	13,499	42	0.3	14,576	25	0.2	12,655	25	0.2
조미료 · 향신료	768	1	0.1	469	6	1.3	858	2	0.2	915	-	-	830	1	0.1
절임류	1,536	4	0.3	276	4	1.4	462	2	0.4	435	3	0.7	459	2	0.4
면류·피류	686	1	0.1	407	0	-	349	0	-	289	-	-	292	2	0.7
농산물 가공품	725	2	0.3	715	0	-	788	4	0.5	1,010	6	0.6	581	-	-
식육· 식육 제품	2,135	1	0.0	1,316	0	-	1,798	2	0.1	1,361	-	-	1,756	2	0.1
과자· 제과 재료	1,163	3	0.3	1,322	4	0.3	1,564	10	0.6	1,219	3	0.2	789	4	0.5
어패류 가공품	878	8	0.9	697	7	1	436	8	1.8	733	3	0.4	1,234	2	0.2
사라다· 반찬류	941	0	-	962	2	0.2	1,418	2	0.1	1,587	1	0.1	794	2	0.3
청량 음료수	502	1	0.2	1,173	0	-	1,296	3	0.2	1,311	1	0.1	996	-	-
유·유제품	821	1	0.1	570	0	-	482	0	-	620	2	0.3	521	-	-
과실·야채	1,869	0	-	2,409	0	-	1,853	3	0.2	1,648	2	0.1	2,095	-	-
기구· 용기 포장	9	0	-	236	2	0.8	432	0	-	356	1	0.3	251	3	1.2
기타	1,845	0	-	1,928	6	0.3	1763	6	0.3	3,092	3	0.1	2,057	7	0.3
이화학적검사	보존료, 살균제, 표백제, 착색료, 감미료, 발색제, 인산, 방충제, 잔류농약, PCB, 중금속 (수은, 기타), 방사능, 질산·아질산, 기타														

주: 1) 대상- 검사대상 검체수, 위반-범위반 검체수, %-범 위반율

2) 소수점 두째자리를 사사오입하였기 때문에 「0.0」로 표기

자료: 일본 동경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kansi.html>)

다) 세균검사 현황

〈표 4-10〉 연도별 세균검사 결과

(Synopsis of bacterial microbiological examination results)

구분	1999.8			2000.8			2001.8			2002.8			2003.8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대상	위반	%
총계	13,833	19	0.1	11,958	32	0.3	11,589	17	0.1	10,805	12	0.11	11,412	5	0.04
아이스크림류	670	18	2.7	566	8	1.4	631	11	1.7	557	7	1.26	540	4	0.74
어육제품	313	0	—	87	0	—	374	2	0.5	215	0	—	397	0	—
유·유제품	546	0	—	617	1	0.2	521	3	0.6	514	0	—	327	1	0.31
청량음료수	123	0	—	401	0	—	354	0	—	326	0	—	223	0	—
조리 빵·도시락류	1,291	0	—	1,430	0	—	1,388	0	—	1,342	0	—	1,332	0	—
초밥종·생선회	1,230	0	—	1,146	0	—	966	0	—	945	1	0.11	1,077	0	—
사라다·절임류	2,826	0	—	2,804	0	—	2,492	0	—	2,388	0	—	2,493	0	—
과자·제과 재료	420	0	—	422	0	—	461	0	—	329	0	—	347	0	—
면류·피류	201	0	—	200	0	—	196	0	—	161	0	—	154	0	—
두부·동가공품	630	0	—	631	0	—	572	0	—	532	0	—	614	0	—
식육·식육 제품	1,875	1	0.1	1,572	23	1.5	1,762	0	—	1,510	3	0.20	1,749	0	—
기타	3,708	0	—	2,082	0	—	1,872	1	0.1	1,986	1	0.05	2,159	0	—
o-157 재검사	검체 수	검출 수	검출율 (%)	검체 수	검출 수	검출율 (%)	검체 수	검출 수	검출율 (%)	검체 수	검출 수	검출율 (%)	검체 수	검출 수	검출율 (%)
합계							3,898	2	0.05	3,540	1	0.03	4,076	0	—
식육							17	0	—	447	1	0.22	590	0	—
기타 식육							526	2	0.38	0	0	—	0	0	—
식육제품							128	0	—	0	0	—	0	0	—
사라다·절임식품							1,167	0	—	1,107	0	—	1,308	0	—
기타식품							2,060	0	—	1,986	0	—	2,178	0	—
생물학적 검사항목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포도구균, 장염비브리오, 살모넬라, T.T.C.테스트, 세레우스균, 기타비브리오, 기생충·기생충란, 기타														

자료: 일본 동경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kansi.html>)

3) 부적합 현황

<표 4-11>에는 최근 5년간 검사별 부적합 처분 식품이 순위별로 정리되어있다.

화학검사결과에 의하면 아이스크림류, 식육과 식육제품, 유 및 유제품, 어육제품의 순으로 분석이 되었고, 세균검사 결과에 의하면 아이스크림류, 식육 및 식육제품, 유 및 유제품, 어육제품, 그리고 초밥의 순으로 화학검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들 5개 품목이 일본에서는 다빈도 검사대상 품목이 되어야 하겠다.

식육류의 경우는 O-157 재검사 결과에서도 부적합 순위가 1위로 나타나 가장 위대한 식품임이 입증되었다.

<표 4-11> 검사항목에 따른 식품별 부적합 순위(동경도-하계: 1999~2003)

(The rank of failure by food type and test items-Tokyo province, Japan in summer)

(단위: 건, %)

화학검사결과 부적합 순위					세균검사결과 부적합 순위					O-157재검사결과 부적합 순위 ¹⁾				
순위	식품	대상	위반	%	순위	식품	대상	위반	%	순위	식품	대상	위반	%
총계		59,597	85	0.1	총계		59,597	85	0.1	총계		11,514	3	0.0
1	아이스크림류	2,964	48	2.0	1	아이스크림류	2,964	48	1.6	1	식육류	1,708	3	1.7
2	식육·식육 제품	8,468	27	0.3	2	식육·식육제품	8,468	27	0.3	2	기타	9,806	-	-
3	유·유제품	2,525	5	0.2	3	유·유제품	2,525	5	0.2					
4	어육제품	1,386	2	0.1	4	어육제품	1,386	2	0.1					
5	기타	44,254	3	0.0	5	초밥중·생선회	5,364	1	0.0					
					6	기타	11,807	2	0.0					

주: 1) O-157 재검사는 2001년 이후 실시된 결과이며, 식육류는 식육, 기타 식육, 식육제품 포함함.
자료: 일본 동경도 홈페이지 자료 재구성(<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kansi.html>)

나. 2003년 현황

1) 총괄현황

<표 4-12>에는 2003년 동경도의 출입·감시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업체는 제조업, 판매업, 조리업으로 행정처벌을 한 업체수가 많은 업종은 조리업으로 총 41,701업체 중 5.3%인 2,235개소가 행정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부적합 내용을 보면 조리업의 경우는 식품취급이 불량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판매업과 제조업의 위반 부적합 내용은 표시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출입·감시지도 현황(Status of food inspection in Japan)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계	제조업	판매업	조리업
출입 검사한 업소(개소)			144,050	13,016	79,324	51,710
행정조치 실시업소 ¹⁾			4,042	418	1,389	2,235
행정조치	판매금지 등(행정처분)		1	0	1	0
내역	행정지도	시말서 등 ²⁾	448	80	62	306
		구두주의	3,688	357	1,371	1,960
위반	시설기준 등		573	25	111	437
부적합 내용	관리운영 기준 등	시설관리	797	93	140	564
		기구용기류취급	338	51	59	228
		식품의 취급	1,265	116	385	764
		기타 ³⁾	412	60	47	305
	제조기준 등		13	3	6	4
	표시기준 ⁴⁾		1,306	154	924	228
기타 ⁵⁾		508	69	181	258	

주: 1) 수거 검사 결과에 근거하는 행정 조치를 포함.

2) 답신서, 보고서 등을 포함.

3) 식품위생 책임자의 책무, 종업원의 위생교육 등임.

4) 합계 1,306 건중, 수거검사의 결과 발견된 표시위반 18건을 포함.

5) 보존기준 등임.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2) 검사항목별 현황

가) 표시

<표 4-13>에는 2003년 동경도의 식품위생검사실적 중 표시검사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총 검사건수 285,619건 중 4.66%인 1,306품목이 표시위반건수로 집계되었고, 현장에서 표시위반이 발견된 건수는 1,288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알러지 물질관련 표시가 410건, 제조자주소 및 이름 미기재가 245건, 그리고 유통기한 미표시가 232건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표 4-13> 표시검사 현황(Status of food inspection on food labeling)

(단위: 품목, 건)

구분		내 용
총검사항목수		285,619
총 표시위반 품목수		1,306
현장발견 표시위반 품목수		1,288
현장발견 표시위반(건수)	무표시	279
	명칭	35
	기한표시	232
	제조자주소이름	245
	식품첨가물	130
	사용·보존방법	53
	유전자조작	0
	보건기능식품	0
	알레르기물질	410
	기타	48
수거검사결과 표시위반 판명한 품목수		18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나) 알레르기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여부를 감시한 실적이 <표 4-14>에 제시되어있다. 알레르기 물질을 함유한 제품을 유통시킨 업소는 총 7,862개소이고, 이들 위반 업소는 제조업 및 가공업종보다는 음식점 영업 업소가 단연 많았다. 특히 1,920개소의 도시락 제조업소, 기타가 1,620업소, 그리고 반찬점이 1,558업소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제조업 및 가공업분야에서는 과자류에 알레르기 물질을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치한 대상업체는 과자류 가공업체와 도시락 제조업체가 각각 40건, 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9개 알레르기 표시 품목에 관한 점검 결과 위반한 업소는 일반 제품 감시결과와 같은 추세를 보였다.

<표 4-14>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한 식품과 관련되는 출입검사 현황
(Status of food inspection including allergy material)

(단위: 호·개소, 건)

구분		총계	제조업 및 가공업				음식점 영업		
			과자류	반찬류	면류	기타	반찬점	도시락	기타
출입 검사한 업소		12,329	2,332	452	428	931	2,235	2,840	3,111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한 식품취급 업소		7,862	1,527	240	293	684	1,558	1,920	1,640
현장발견 표시위반	특정원재료포함 표시위반품목수	168	84	2	1	0	13	55	13
행정조치 실시 업소		101	40	2	1	0	11	44	3
행정조치	시말서 등	0	0	0	0	0	0	0	0
내역(건)	구두주의	101	40	2	1	0	11	44	3
	기타	0	0	0	0	0	0	0	0
19개 추천품목에 관한 표시지도 실시 업소		2,249	357	82	41	226	390	514	639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 (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다) 유전자재조합식품 감시

<표 4-15>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취급업소와 표시 관련한 위반업소 등 감시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유전자재조합 식품과 관련한 검사실적결과 위반업소는 한 개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관련한 출입검사 현황

(Status of food inspection on GM food)

(단위: 호·개소)

구분	합계	제조업 및 가공업				
		두부제조	낫토제조	된장제조	과자제조	기타
출입 검사 업소	3,599	1,333	6	16	1,771	473
유전자재조합식품 취급업소	0	0	0	0	0	0
유전자재조합식품 관련 표시위반 품목수	0	0	0	0	0	0
행정조치 실시업소	0	0	0	0	0	0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 (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라) 현장 간이검사

음식적 영업소와 음식점을 제외한 기타 집단급식소, 그리고 제조 및 판매업을 대상으로 현장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표 4-16>에 제시되어있다.

<표 4-16>에는 현장 간이검사 대상 업소 현황이 제시되어있다. 총 17,0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42개소로 가장 많았다.

〈표 4-16〉 현장 간이검사 대상 업종

(Status of simple inspection test in field by establishments)

(단위: 개소)

구분		실시호수
총계		17,043
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3,942
	횃집	3,137
	도시락, 반찬 만드는 곳	1,177
	허가받은 집단급식	1,186
	기타	1,386
기타 집단급식소		1,579
제조업		1,445
판매업		2,955
기타		236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 (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현장 간이검사 결과를 검체대상별로 보면 <표 4-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세균검사의 경우 사람의 손이 가장 세균 보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염비브리오균의 경우는 식품 자체가 보관하고 있는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17> 현장 간이검사 현황(검체대상별)

(Status of simple inspection test in field by target)

(단위: 건)

구분		총계	식품	조리기구	손	기타
검사건수		85,172	12,911	34,053	28,007	10,201
세균검사	양호	79,286	12,050	31,899	25,740	9,597
	불량	5,886	861	2,154	2,267	604
장염비브리오(재검)	양호	7,464	3,393	3,099	489	483
	불량	132	81	36	3	12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 (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마) 이물질 혼입감시

<표 4-18>에는 이물질 혼입방지 대책에 관한 일제 감시지도 실적이 제시되어있다.

판매업, 음식점, 제조업의 순으로 총 35,473개 업소를 대상으로 출입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업소의 1.58%인 561개 업소의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판정되었다.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나 지도가 필요한 업소의 위반 내용을 보면 머리카락이나 곤충 등이 혼입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18> 이물질 혼입방지대책 일제 감시지도

(Synopsis of food inspection and guidance protecting from the alien-material)

(단위: 개소, 건)

구분		총계	음식점	제조업	판매업	기타
출입 검사 업소		35,473	13,855	4,242	16,020	1,356
행정조치 실시 업소		561	302	102	140	17
행정조치내역	시말서 등	9	6	3	0	0
	구두주의	533	285	96	139	13
	기타	32	22	4	1	5
지도가 필요한 내용	곤충 등	303	183	46	71	3
	동물성이물(머리카락 등)	320	185	53	72	10
	광물성이물(금속 등)	64	41	11	12	0
	기타	120	44	39	30	7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 (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2) 행정처벌 현황

<표 4-19>에는 동경도가 법적 조치를 취한 식품감시 위반사례를 정리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국내식품과 수입식품으로 나누어 위반사유, 행정처벌 내용, 담당기관 등이 정리되어 있는데 수입품으로는 중국산이 3건(장어구이, 빨대, 메추리알 조림)으로 가장 많았고, 헝가리산인 벌꿀을 담는 용기가 뚜껑에서 납이 검출되는 이유로 잔품확인과 유통중인 제품의 회수 및 수입자를 관리하는 해당 지역에 통보하였다.

중국산 장어구이는 성분규격을 위반하였고, 메추리알 조림은 식품첨가물 표시에는 없는 에르소르빈산이 검출될 경우이다.

<표 4-19> 주요 법위반 식품조치 현황(2003년 6월 기준)(Enforcement report, 2003)

구분	식품명(분류명)	위반조항	위반내용	위반원인	조치	수거기관
세균 검사	라크트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7조2항	성분규격위반	대장균균양성	조사지도 중	南多摩 (미나미타마) 보건소
	우유	7조2항	성분규격위반	대장균균양성	제조자를 소관 하는 이와테현 에 통보	江東區(코토 쿠)
화학 검사	멸치 (어개류가공품)	7조2항	사용기준위반 (첨가물 잔존)	과산화수소 0.11g/kg검출	판매 금지 명령 제조자를 관리 하는 화노래야 마가타에 통보	시장위생조사 소
	롤케이크(양과자)	7조2항 11조2항	대상외첨가물사용 (첨가물표시없음)	스폰지 케이크에 사용 불가 의 착색료(적 102)를 검출 표시에 없는 착색료(적 106) 를 검출	제조자를 소관 하는 북야마이 치에 통보	건강안전연구 센터
	테리느(식육제품)	11조2항	첨가물표시없음	표시에 없는 L-아스코르빈산 0.02g/kg, 에리소르빈산 0.01g/kg, 소르빈산 0.14g/kg 검출	답신서 및 개선 보고서 징취	건강안전연구 센터
	생중화면	11조2항	첨가물표시없음	표시에 없는, 프로필렌글리콜 0.2%를 검출	시말서 징취	葛飾區 (카즈시카쿠)
	면소스(조미료)	11조2항	첨가물표시없음	표시에 없는, 안식향산 0.09g/kg 검출	표시지도, 개선 보고서 징취	大田區 (오타쿠)
수입 식품	장어 장어구이 【중국산】	7조2항	성분규격위반	검사대상 3물체로부터 엔로 후로키사신(항생물질)을 각각 0.11ppm, 0.33ppm, 1.3ppm 검출	잔품의 확인 및 회수와 수입자 를 소관하는 정 강현에 통보	시장위생 조사소
화학 검사	빨대 【중국산】	10조2항	합성수지제의 기 구 또는 용기포장 의 일반규격(재질 시험)에 적합하지 않음	납 170ppm를 검출	잔품의 확인 및 회수와 수입자 를 소관하는 신 석현에 통보	건강안전연구 센터
	벌꿀의 용기 【헝가리산】	10조2항	합성수지제의 기 구 또는 용기포장 의 일반규격(재질 시험)에 적합하지 않음	용기 뚜껑으로부터 납 310ppm를 검출	잔품의 확인 및 회수와 수입자 를 소관하는 바 닷가마츠이치에 통보	건강안전연구 센터
	메추리알 조림 【중국산】	11조2항	첨가물표시없음	표시에 없는, 에리소르빈산 0.06g/kg검출	조사지도 중	건강안전연구 센터

자료: 일본 동경도 홈페이지 자료(<http://www.kenkou.metro.tokyo.jp/shokuhin/kansi/kansi.html>)

8. 동경도의 수입식품 감시 현황

가. 수입식품감시

〈표 4-20〉에는 2003년도 동경도의 수입식품 감시결과가 제시되어있다. 전체 감시대상 품목의 부적합률은 0.2%로 나타났고, 품목별로 보면 기구 및 용기가 3.3%, 어패류가 0.7%, 식육 및 식육제품이 0.1%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분석되었다.

〈표 4-20〉 수입식품 검사결과 현황(동경도 2003년)

(Synopsis of imported food inspection results in 2003, Tokyo)

(단위: 건, %)

항목	검사대상수	화학 검사			세균 검사		
		검사물체수	위반 검사 대상물체수	위반율	검사대상 수	위반 검사 대상물체수	위반율
총계	5,350	4,162	9	0.2	1188	-	-
조미료·향신료	555	392	-	-	163	-	-
절임류	59	48	-	-	11	-	-
면류·피류	-	-	-	-	-	-	-
농산물 가공품	456	405	-	-	51	-	-
식육·식육 제품	1,241	795	1	0.1	446	-	-
과자·제과 재료	176	172	-	-	4	-	-
어패류 가공품	177	144	1	0.7	33	-	-
사라다·반찬류	38	20	-	-	18	-	-
청량 음료수	92	76	-	-	16	-	-
유·유제품	163	115	-	-	48	-	-
과실·야채	1,360	1,183	-	-	177	-	-
기구·용기 포장	92	92	3	3.3	-	-	-
기타	941	720	4	0.6	221	-	-

자료: 일본 동경도 수거검사결과, 일본 동경도 위생국, 2003 (2003년 6월1일까지의 집계현황임).

(<http://www.kenkou.metro.tokyo.jp/anzen/news/2003/pressshokuhin030820table1-12.pdf>.)

나. 수입식품 적발 사례

〈표 4-21〉 2003년 9월 수입식품 적발 사례(Inspection of imported food, 2003. 9)

품명	부적격내용	생산지	담당검역소	원인	조치상황
율무	aflatoxin 음성(14ppb)	타이	요코하마	조사중	폐기,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아몬드	aflatoxin 음성 (64.5ppb)	미국	동경	조사중	폐기,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조개	설사성구독 0.10MU/g 검출	중국	나라타공항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ACASIA HONEY	성분규격부적합(함생물질함 유(스트레푸토마이신0.12ppm 검출))	중국	동경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치리 파우더	aflatoxin음성 (18ppb)	스리랑카	나라타공항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가공후 섭취 냉동식품 (동결직전가열): 마부소스	지정외 첨가물 (cyclamate산 6.0g/g검출)	중국	가와사키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건조매실	지정외 첨가물 (cyclamate산 7.0g/g검출)	중국	요코하마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무가열섭취 냉동식품 삶은 풋콩	성분규격부적합(크로르피리 호스0.2ppm검출)	중국	고베	근처농장에 서 사용된 농약에 의해 오염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콩	성분규격부적합(시안화합물 지550ppm검출)	미얀마	고베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닭고기(皮)	지정외 첨가물 (cyclamate산31.0g/g검출)	중국	후쿠오카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닭고기	지정외첨가물 (cyclamate산29.0g/g검출)	중국	가와사키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새우만두	지정외첨가물 (cyclamate산13.0g/g검출)	중국	가와사키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냉동양식연어	성분규격부적합(오키시 테토 란사이크린7.4ppm검출)	칠레	동경	조사중	폐지, 반품 등을 지시 (전량보관)

제 2 절 미국

미국의 식품검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연방정부는 계획 수립 등 감시에 관한 지도감독업무만 수행하고, 현장에서의 직접 검사는 지방조직이 담당한다.

즉, FDA의 경우를 보면 본부조직은 직접 식품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규제업무실(ORA) 산하의 지방조직인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 지구사무소(District Office), 주재소(Resident Post)에 근무하는 식품검사원들이 현장 감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방조직 중에서도 지역사무소는 지구사무소나 주재소의 업무를 기획,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 총괄조직으로 직접 현장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방 조직외에 실험실이 감시업무를 한 축을 수행하고 있다³⁾.

1. 감시업무 관련 기관

가. FDA와 DHHS

FDA는 DHHS 산하기관으로 보고의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테러와 같은 중요한 사항, 다른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보고하고, 그 외의 업무는 FDA가 스스로 추진하고 있다.

나. FDA와 FSIS

관리 제품이 다르지만 식품을 동시에 관리하는 두 조직은 분명한 업무분담체계를 구축하여 업무추진상의 효율을 높이고 업무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표 4-22>에는 두 기관이 각각 담당하는 대상 제품이 제시되어있다.

〈표 4-22〉 FDA와 FSIS의 검사대상 품목
(Status of inspected products between FDA and FSIS)

FSIS	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소, 양, 돼지, 산양, 말, 노새 기타 말속의 육) 및 이를 3% 이상 함유하는 가공식품들 - 가금육(닭, 칠면조, 집오리, 거위, 호루조) 및 가금육을 2% 이상 함유하는 가공식품들 - 수출어패류 - 식육, 가금육의 처리, 가공, 포장 등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 용기, 포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들소, 토끼, 사슴, 야생조수, 기타 FSIS 소관이 아닌 동물의 고기(사냥으로 잡은 야생조류의 육 포함) - 수입어패류, 기타식품, 식품첨가물 등 - 기타의 기계, 기구, 용기, 포장, 전자레인지, 의료기기 등

3) 미국 전역에는 9개 지역사무소, 20개 지구사무소, 130개 주재소, 7개의 실험실이 있음.

자료: 정기혜 등, 『수입식품의 안전성 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1997.

다. FDA와 EPA

물에 관한 규제는 FDA와 EPA에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EPA는 시의 수돗물 공급에서부터 마시는 물의 국가적 기준을 설정하는 반면에 FDA는 포장된 물의 안전성과 표시를 규제한다.

〈표 4-23〉 FDA와 EPA의 물관리 영역
(Area of water regulatory between FDA and EPA)

구분	업무 영역
E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전역의 마시는 물의 기준 - 시 단위의 물 공급
FD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용 물의 안전성, 표시

자료: <http://www.fda.gov/fdac/reprints/getinfo.html>

라. FDA와 주정부

감시업무 수행시 FDA 지방조직과 주정부간에는 협력, 계약, 분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며, FDA가 주정부와 식품안전을 위한 감시업무 계약은 ORA의 Contract Support Team이 담당한다.

〈표 4-24〉 FDA와 주정부간의 검사계약 업무 현황
(Status of inspection between FDA and State)

계약 업무	내 용
식품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또는 주법(State Law)에 규정된 사항을 식품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 대상자를 선별하여 실시
사료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생산시설이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 또는 주사료법(state feed law)의 규정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세포 잔류량 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DA와 FSIS의해 가축의 세포 잔류량 위반으로 확인된 생산자와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시됨 · 감시결과 제약사의 활동, 약 사용량, 사료전달체계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음
MQ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수준의 유방암 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FDA가 허가한 유방암 설비가 “Mammography Facility Inspection”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 · 10월내지 14개월을 주기로 실시

자료: FDA, *Investigations operations Manuals*, 2003.

FDA와 주정부간의 계약에 의한 업무 추진은 주정부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즉, 주정부 입장에서는 FDA의 기술적 훈련 실시에 따른 기술 향상, 연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용이하게 이해 및 수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FDA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소비자 관련법의 집행을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표 4-24>에는 두 기관간 계약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업무의 종류와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2. FDA의 검사업무(Inspection)

가. 법적 권한(statutory authority)

FDA 조사관의 책임(Investigator's Responsibility)은 합리적 방법으로(in reasonable manner), 합리적 범위 안에서(within reasonable limits), 그리고 합리적 시간에(at reasonable times) 모든 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검사(Inspection)와 조사(Investigation)의 차이이다.

모든 검사업무 수행시에는 그 검사에 대한 지시서를 반드시 소지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나. 담당 조직

검사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은 ORA 본부 조직으로 자원관리부(ORM), 지역운영부(ORO)와 법집행부(OE)가 담당한다. 자원관리부에서는 검사운영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지역운영부내 긴급·조사운영과(DEIO)에서는 검사절차에 대한 현장안내지침서 조정·개발 및 유지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법집행부내 지도정책과(DCP)는 FDA 직원의 증거개발훈련(Evidence Development Training)을 맡고 있다.

다. 업무 진행

검사는 검사정보(Inspection Information)를 기반으로 일반적인 검사 절차·기술(General Procedures & Techniques)과 현장에서의 검사 절차(Inspection Procedures)에 따라 추진되며, 이를 통하여 증거 개발(Evidence Development)과 보고(Reporting)가 이루어진다.

라. 담당 업무

검사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식품검사를 위한 준비 및 조회, 수산물 HACCP, 검사 기관

둘째, 직원, 공장 및 부지

셋째, 원료물질

넷째, 장비 및 용구

다섯째, 혼합재료의 취급, 제조방식, 식품 첨가제, 색소 첨가제, 품질 조정, 포장 및 표시 등의 제조과정

여섯째, 오염경로, 미생물적 주의, 보관 등의 위행 전반

일곱째, 유통

여덟째, 관련 정부기관 검사(Other Government Inspection)

아홉째, 검사 체제, 보고, 위반에 관한 검사에 대한 표준화

마. 식품 검사 특성

<표 4-25>에는 식품 검사업무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4-25> 식품 검사 현황(Status of food inspection)

내 용	식품검사
공통업무 부문	· 식품 검사 위한 준비 및 조회 · 보고
고유업무 부문	
- 검사업무 강조	· 검사 권한
- 주요 검사 대상	· 수산물 HACCP
- 검사 기준	· 원료물질 · 제조과정 · 위생 · 유통
- 검사 주안점	· 식품표준화

자료: FDA, *Investigations Operations Manuals*, 2003.

바. 절차 및 기술

검사의 절차 및 기술로 사용되는 것은 캔들링(Candling), 표시검토(Label Review) 및 현장 검사(Field Exams)이다.

ORA 현장에서 캔들링(Candling)은 눈(eye)과 빛(light)사이에서 제품을 유지하여(holding) 검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표시검토(Label Review)시 다른 표시설명(label comments)이 요청될 경우 해당업체에게 표시검토를 받기 위한 적절한 센터를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현장 검사는 국내제품(또는 무역을 통한 국내유통과정의 외국제품)이 FDA가 단속하는 법령을 준수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자체적 법령 충실 여부를 방문검사(on-site examination)하는 것이다.

사. 검사 종류

미국 ORA 현장 조직이 수행하는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분산건물에 대한 검사(Multiple Occupancy Inspections, MOI), 검사후 문서에 의한 통보(Post-Inspection Notification Letters, PINL), 다른 정부기관에 의한 검사(Other Government Inspection, OGI), 식품검사(Food Inspection, FI), 의약품 검사(Drug Inspection, DI), 의료기기 검사(Device Inspection, DI), 생물학제제 검사(Biologics Inspection, BI) 및 살충제 검사(Pesticide Inspection, PI)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1) 분산건물에 대한 검사(MOI)

검사 대상 회사의 공장 등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검사 통보문서를 각각의 공장에 다 보내야 한다. 그러나 검사 대상 회사가 도보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 분산 위치해 있을 경우 한 공장에만 보낸 기존의 검사통보(Notice of Inspection, NI)로서 모든 분산된 공장을 상대로 검사통보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FDA 482 규정에 의거하면 처음 검사대상인 공장의 책임자에게 다른 검사 대상 공장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어야 하며, 만약 각각의 검사 관련 공문발송을 요구하면 따라야 한다.

2) 검사후 문서에 의한 통보(PINL)

2003년 현재 검사후 문서에 의한 통보(PINL)는 사실상 실행되고 있지 않다.

3) 다른 정부기관에 의한 검사(OGI)

가) 연방 차원

FDA가 관장하지 않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다른 기관(예, USDA 등)이 실시하는 강제 검사 대상 품목에 대해서 FDA는 검사권한이 없다.

그러나 미농무성의 농산물마케팅부(Agriculture Marketing Service, AMS), 국립해양수산물부(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NMFS)와 상무성(USDC)의 임의 검사 대상 품목은 모두 FDA 검사 대상이 되며, FDA가 실시하는 통상적인 정기검사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검사가 실시된다.

나) 주 및 지방차원

주·지방 공무원은 통상적으로 식품의 생산지 또는 주간이동(interstate movement)과 상관 없이 관할지역 소재 하는 업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규정적 행정권한(extensive regulatory

authority)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FDA와 주·지방정부간 공동검사가 자주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검사는 ORA 지구의 행정 또는 관리 담당자가 마련한다.

4) 식품검사(FI)

식품공장검사(Food plant inspections)은 업체의 제조방법(methods)·시설(facilities)과 식품의 제조·저장 및 보관에 사용되어진 수단과 방법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

아. 감시실적

<표 4-26>에는 FDA 본부조직인 6개 센터가 수행한 5개년간 감시실적이 제시되어있다.

<표 4-26> 5년간 FDA의 감시 실적(Five year inspection totals by FDA centers)

(단위: 건)

구분	Total	CFSAN	CDER	CDRH	CBER	CVM
1998	18,175	7,732	3,661	2,572	2,218	1,992
1999	16,917	7,359	3,321	2,332	2,197	1,708
2000	15,146	6,989	2,786	2,389	1,969	1,013
2001	18,649	10,132	2,529	2,485	2,111	1,392
2002	18,566	8,979	2,585	2,490	1,985	2,527

주: CBER(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DER(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RH(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CFSAN(Center for Food Safety and Applied Nutrition), CVM(Center for Veterinary Medicine)

자료: FDA 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구성(http://www.fda.gov/ora/about/enf_story/ch10/stats_charts.htm)

3. 검사 종류

미국 FDA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 감시업무는 세가지 형태로 수행된다.

첫째는, FDA가 단독으로 지구사무소와 주재소에 근무하는 자체 감시원을 통해 추진하는 업무체계임,

둘째는, FDA 감시인력 부족에 따라 FDA 지방조직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 주정부에 계약의 형식을 통해 주정부 감시원을 통해 감시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체계고,

셋째는, FDA 감시인력과 주정부 인력이 공동으로 감시업무를 추진하는 체계이다.

가. 국내생산 식품 검사

<표 4-27>에는 미국내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식품감시 실적이 제시되어있다. 총 검사건수 등 모든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및 수입치즈 검사와 저산성통조림 및 산성

식품에 관한 검사 실적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

〈표 4-27〉 유형별 식품 감시 실적(Status of inspection)

(단위: 건)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총 검사 건수		19,284	20,290	21,500
FDA 단독 검사	국내산 식품 검사	6,156	5,766	5,800
	수입·국내산 치즈 검사	531	573	400
	국내산 저산성통조림식품 / 산성화식품 검사	568	420	500
	미국내 수산제품의 HACCP 검사	2,733	1,650	1,700
	수입 수산물 검사 (HACCP적용 수입 수산물)	415	700	700
	주(州)간 운송위생 검사	1,364	1,894	1,900
주정부와 계약 검사	HACCP 미실시 식품의 안전 검사	5,147	6,508	7,500
	미국내 수산물 HACCP 검사	848	779	1,000
	주정부와 협력 검사	1,522	2,000	2,000

주: 2004년은 목표치임. 자료: <http://www.fda.gov/oms/ofm/budget/2004/7ORA.htm>

이미 업무 협력체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FDA가 주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주정부에게 지원하는 식품보조금은 2002년 4,200천불에서 2004년에는 9,600천불로 상향조정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런 조치는 향후 주정부와의 업무연계를 강화하려는 FDA의 노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표 4-28〉 FDA가 주정부에게 지원하는 식품보조금
(Supporting to food subsidy for state)

(단위: USD)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주정부 계약에 따른 식품 보조금	4,200,000	4,600,000	9,600,000

주: 1. 2002년은 실행예산임.

2. 2003년 및 2004년은 추정예산임.

자료: <http://www.fda.gov/oms/ofm/budget/2004/7ORA.htm>

〈표 4-29〉에는 식품분야 정밀검사 비율이 제시되어있다. 식품안전의 강화 방침에 의해 정밀검사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9〉 연도별 식품검사 실적(Status of Inspection about domestic food)

(단위: 건)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현장 조사 및 검사	10,108	5,085	5,000
정밀 검사	12,703	13,526	14,000

주: 2004년 실적은 목표치임.

자료: <http://www.fda.gov/oms/ofm/budget/2004/7ORA.htm>

나. 수입 및 해외 검사 실적

〈표 4-30〉에는 미국 FDA가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실적과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검사 실적이 제시되어 있다.

해외검사 실적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수입품을 생산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감시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한 실적이다.

2003년부터 FDA의 CFSAN에서는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 중 비교적 위생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003년 상반기에는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2003년 하반기 및 2004년에는 베트남, 중국, 한국 등 아시아권에 확대할 예정이다.

즉, 주요 수입국의 위생수준을 제고시켜 해외검사 업무의 양적, 질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⁴⁾

해마다 수입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검사 건수나 수입식품 검사건수 등도 증가하고 있다. 수입식품검사 비율이 2002년 1.0%에서 2003년 1.5%로 증가하였다.

〈표 4-30〉 연도별 수입 및 해외검사 실적

(Status of inspection about foreign food)

(단위: 건, %)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해외 검사	184	250	250
수입식품 총 검사건수	52,856	74,080	74,080
- 현장 조사 및 검사	34,447	48,000	48,000
- 정밀 검사	18,225	26,080	26,080
수입건수	5,053,703	5,609,610	6,226,667
수입 검사 비율	1.0	1.5	1.1

주: 2004년 실적은 목표치임.

자료: <http://www.fda.gov/oms/ofm/budget/2004/7ORA.htm>

4. 회수(Recall)⁵⁾

4) 2003년 저산성통조림에 관한 해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KFDA도 9월부터 참여하고 있음.

가. 업무 범위

회수(Recalls)란 Investigations의 특수한 업무로서 FDA가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한 유통제품을 해당 업체가 스스로 수거(removal) 및 시정(correction)을 하는 것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 FDA는 몰수(seizure)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다. 회사자체적인 시장에서의 상품 철수 및 재고 회수 조치는 공식적인 회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회수 대상제품의 건강위해정도, 유통정도에 의해 회수 범위(도매상, 소매상, 소비자 등)가 정해진다.

나. 담당 조직

회수 관련한 미국내 주요 기관은 FDA와 FSIS이며 FDA 조직에서는 ORA 본부조직인 지역운영부(ORO)내 긴급조사운영과(DEIO)에서 회수계획과 절차, 지침 등과 관련하여 모든 회수 제품의 회수 지원에 관한 현장활동 조정 및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특별 회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타 기관, 타 정부기관, 업체와 연계 업무를 추진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조직인 지구사무소(District Office)가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센터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회수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련 시료채취는 지구사무소의 고유 관리업무이다.

다. 관련 법 및 정보

회수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법은 1997년 제정된 식품안전시행증진법(FSEEA)과 연방규정집(CFR)이며 집행된 회수 정보는 FDA 본부에 수집되고 이처럼 모아진 새로운 회수 정보는 집행보고서(Enforcement Report)를 통하여 인터넷에 게재된다.

라. 업무 유형 및 품목 분류

1) 업무 유형

회수 업무의 유형(Recall Type)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자발적 회수(Voluntary Recall)

둘째, FDA 요구 회수(FDA Requested Recall)

셋째, 518(e) 절 또는 법에 의하여 명령된 회수

FDA 요구에 의한 회수라는 것은 FDA 청장이나 청장대리인이 직권으로 회수를 요구할 경우 수행되는 요구이다.

5) 자료: http://www.fda.gov/ora/inspect__ref/iom/chapterText/800__end.html

또한 국민건강에 잠재적 위험을 가져오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통보(Medical Device Notification) 및 의료기기 안전경고(Medical Device Safety Alert)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2) 품목 분류

특정 제품에 대한 회수 분류(Recall Classification)는 회수 대상제품의 상대적인 건강위해 정도를 근거로 Class I·Class II·Class III로 분류된다.

(가) Class I

회수대상 품목의 건강위해정도가 가장 심한 상태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이 속한다.

(나) Class II

회수대상 품목의 건강위해정도가 일시적이거나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 제품이 속한다.

(다) Class III

회수대상 품목의 건강위해정도가 건강상의 문제를 거의 일으키지 않는 경우이다.

마. 업무 구분

미국 FDA가 수행하는 주요 회수업무는 세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단계는 리콜 통보·조사(Recall Notification & Inspection)이며, 두번째는 모니터링을 위한 회수(Monitoring Recalls)이고, 마지막으로 특별리콜 상황(Special Recall Situations)으로 각 단계별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회수 통보·조사(Recall Notification·Inspection)

회수는 업체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제도로, FDA는 회수가 필요한 의심스러운 제품에 대해 통보해 주면 해당 업체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FDA의 회수 결정은 ORA의 행정권한과 약품유효성조사이행(Drug Efficacy Study Implementation, DESI)과 같은 권한위임을 통하여 적용된다.

검사에서 제조나 유통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였더라도, 해당업체는 모든 유통중임 제품을 시장에서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시장철회(Market Withdrawal)라 한다. 시장 철회는

유통중인 제품이 FDA가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을 하였거나, 법적 위반이 아닌 경우 즉, 정상적인 제고정리, 정기적인 시설 개·보수에 의한 제품 철수 등을 의미한다.

회수 통보·조사를 살펴보면 조사절차(Inspection Procedures)에서의 회수 제품 결정과 Follow-up 적용, 식품회수에서는 주간 이동하는 우유운반업자 대상의 주정부 회수 업무 지원, 의약품 회수에서 의약품·동물의약품 회수, 시료채취(Sample Collection) 및 리콜 경고(Recall Alert)에 주력하고 있다.

2) 회수 모니터링(Monitoring Recalls)

회수업무에 관한 모니터링은 회수된 제품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업체를 세단계로 나누어 재감독하는 것이다.

(가) 회수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감시

회수 진척 상황 및 회수대상 제품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회수 진행과정상에서 (시작과 종결) 재검사를 실시하는 업무로 방문을 통해 수행되며, 통상 검사업무에 국한하게 된다. 회수 대상업체는 CFR 7. 53에 의거하여 회수 진척상태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FDA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FDA의 회수 감시 확인(FDA Recall Audit Checks)

회수에 관한 FDA의 감시 확인은 개별 방문, 전화, 편지 및 열거된 모든 방법을 종합하여 해당업체의 위탁업자, 사용자, 소비자 등 유통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계획된 회수 업무에 관련된 모든 위탁업자들이 회수에 관한 통보와 그들이 취하여야 할 적절한 행동을 지시 받았는지를 조회하게 된다.

업무 추진 정도는 A, B, C, D, E 단계로 구분되는데, A 단계는 모든 위탁업자(100%)를 조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조사대상 위탁업자의 10%~100%, 10%, 2%, 2% 미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통계적인 감시계획은 회수대상품목의 종류에(식품, 의약품 등) 따라 해당 센터가 수립한다.

(다) 회수 종결·완료(Recall Terminated·Recall Completed)

FDA는 회수 감사확인(FDA Recall Audit Checks) 방법을 적용하여 회수 종결·회수 완료(Recall Terminated·Recall Completed)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수 종결은 FDA가 모든 회수 관련 업무가 수행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결정하며, 해당 업체는 지역사무소에 회수 종결을 문서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Recall Completed는 모니터링 차원에서 Recall Terminated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용어이다.

3) 특별회수 적용(Special Recall Situations)

특별회수는 다음 경우에 적용된다.

- 미국 국방성산하의 군사시설이 소유한 제품
- 인체용, 동물용 신약허가신청(NDA)과정에서 사용을 중지시킨 제품
- 국립과학아카데미(NAS)와 핵규제위원회(NRC)에 의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약품
- FDA, EPA 등 한곳 이상의 연방정부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제품

바. 회수 실적

<표 4-31>에는 2002년 센터별 회수 건수가 제시되어 있다.

1년 총 회수 건수는 4,998건이며, CBER이 2,025건으로 가장 많았고, CVM이 162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96년 식품분야에 리콜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2년까지 건강기능성식품을 대상으로 서너건의 리콜이 보고된 것이 전부이다.

<표 4-31> 2002년 FDA 센터 회수 현황(Recalls by FDA center, FY 2002)

구분	Total	CBER	CDRH	CDER	CFSAN	CVM
건수	4,998	2,025	1,454	437	920	162

주: 생산제품과 세금에 의해 결정된 센터의 분류

자료: FDA 홈페이지 내부자료 재구성

(http://www.fda.gov/ora/about/enf_story/ch10/stats_charts.htm)

사. 회수 사례

<표 4-32>는 2003년 1월에서 9월 17일까지의 FDA Recall 사례를 요약 정리하였다.

회수된 식품군중에서는 과자류, 수산물, 유제품류, 그리고 기타 등이 주 회수 식품군으로 나타났는데 기타에는 식이보조제, 식품첨가물 등이 속해있다.

리콜한 이유를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식품구성분과 관련된 오염으로 필수 구성분 미함유와 잘못 혼합된 구성분 등이다.

둘째는 식품공정, 유통 등에 관련된 식품오염으로 부적절한 식품사용 등이며,

셋째는 생물학적 오염으로 리스테리아균과 살모넬라와 곰팡이 등에 의한 오염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이화학적 오염으로 알러지 유발물질 함유, 표시사항 위반 등이며 표시사항 위반내

에는 미표시 구성분 함유, 식품표시오기 등이 대다수였다.

다섯째는 물리적 오염으로 이물질 함유되었거나 포장이 불량한 경우였고,

마지막으로 법 관련한 위반 사례는 FFDCA 위반이 있었다.

이러한 회수 사례는 억류목록(Detention List) 대상 식품을 식품공전에서 규정한 유해성 검사인 생물학적 검사(Listeria균, 대장균 O157:H, 살모넬라, 곰팡이)와 이화학적 검사(알러지 유발물질, 중금속, 표시사항)를 통하여 원인이 조사·분석되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를 보면 약 9개월 간에도 200건 이상의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식품리콜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3년 6월말 현재까지 리콜다운 리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약 7여년 동안 일부 건강기능성식품을 리콜한 사례 등이 거의 전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리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지속적인 감시, 검사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겠고, 특히 실험분석실의 업무가 전문화, 활성화되어야 하겠다.

〈표 4-32〉 2003년 FDA Enforcement Report 현황(리콜)

(Contents of FDA Enforcement Report, Recall)

(단위: 건수)

구분	총계	과자류	유제품	수산물	기타
총계	222	66	36	23	97
<input type="checkbox"/> 식품 성분	130	-	-	-	-
(필수)구성분 미함유	9	4	2	-	3
과다성분 사용	1	-	1	-	-
잘못혼합된 구성분	3	-	1	-	2
가짜성분 포함	1	-	-	1	-
허가되지 않은 성분 포함 및 사용	-	-	-	-	-
-품목구성분	39	20	13	2	4
-특정성분(예, 아황산염)	39	8	-	2	29
허가되지 않은 착색료	38	17	2	-	19
<input type="checkbox"/> 식품 공정·유통·인력	13	-	-	-	-
등록되지 않은 공정·과정·관리자의한 생산	3	1	1	1	-
부적합 과정에서 생산	2	-	-	2	-
부적합 식품 사용	3	-	1	-	2
물·염분 수준의 조정 불량	2	-	-	2	-
해동시 온도확보 부족	1	-	-	1	-
판매금지 명령된 제품의 발송	1	-	-	1	-
식품병원균 함유한 처리과정	1	-	-	-	1
<input type="checkbox"/> 생물학적 오염	33	-	-	-	-
리스테리아균	18	2	6	5	5
살모넬라	6	1	1	-	4
Enterobacter Sakazaki	3	-	-	-	3
C. botulim	2	-	-	2	-
공중보건상 우려되는 병원체 (대장균·곰팡이균 등 포함)	4	-	-	-	4
<input type="checkbox"/> 이화학적 오염	38	-	-	-	-
알러지 유발물질 함유	6	4	1	-	1
중금속 함유	2	-	-	-	2
표시 사항	-	-	-	-	-
-식품표시오기(위반)	8	2	2	-	4
-의무표시사항 위반	2	1	1	-	-
-미표시 구성분 함유	13	3	3	1	6
-표시량(구성분 표기)보다 적은 함유량	2	-	-	-	2
항생물질 (예, Chloramphenicol, Histamine)	5	-	-	3	2
<input type="checkbox"/> 물리적 오염	6	-	-	-	-
나쁜 악취·맛·외형 등	1	-	-	-	1
포장 불량	1	1	-	-	-
이물질 함유	3	-	1	-	2
제품 파손	1	-	-	-	1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	2	-	-	-	-
FFDCA 위반	2	2	-	-	-

주: 기간은 2003년 1월 ~ 9월 17일까지임.

자료: FDA 홈페이지 자료, Enforcement Report.

(<http://www.fda.gov/po/enforceindex/2003enforce.html>).

제 3 절 독일 등 EU

유럽연합 설립초기에는 각 국가별 식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단일화하려는 원칙을 고수하였으나, 국가간의 경제적 수준차와 문화적 차이점 등으로 인하여 식품관련 분야에서의 단일화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향후 유럽연합의 현실적인 실현방안을 1985년 새로이 발표하였고, 식품관련 분야에서도 이에 따르는 새로운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식품품목별 단일화 작업을 배제하고 그 다양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반면, 식품안전에 주력하여 소비자들의 건강보호라는 승화된 최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7년 유럽연합의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건강보호를 관리하는 부처 내에 식품 및 수의학 사무국(The 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이 설치되었고, 2002년에는 수년간의 준비작업을 마치고 유럽연합 내 식품 및 가축사료의 안전에 책임지는 유럽식품안전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이라는 새로운 독립기관이 설립되었다.

식품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식품 및 관련품목 중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위해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는 관리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해평가와 위해관리를 담당하는 이원화(二元化) 체계가 유럽연합 및 유럽 각 국가들에서 차츰 형태를 갖추고 효율적인 실현방법모색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FVO 및 현재 그 체계적인 구조를 완성해가고 있는 EFSA의 식품검사제도와 독일의 경우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효율적인 식품검사제도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1. 유럽연합의 식품검사제도의 변화

유럽연합은 식품에 대한 검사제도를 기존의 식품 자체검사에서 탈피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완제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 중 수의약품의 잔류검사 및 잔류농약검사와 함께 원산지실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근원부터 처리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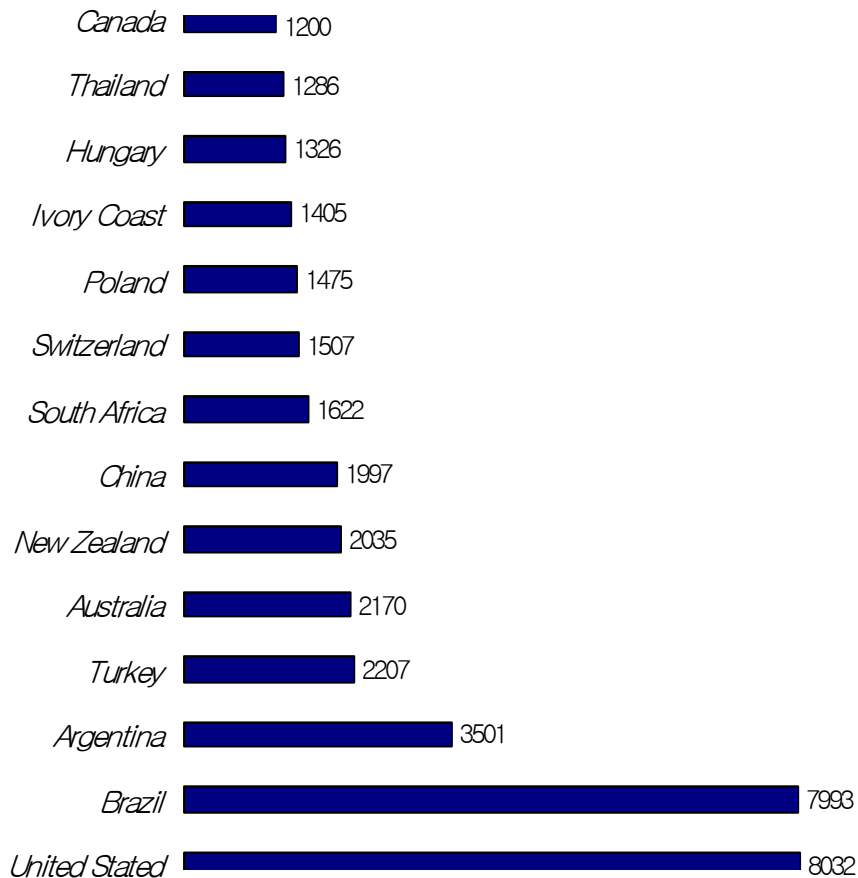
가. 실사를 통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검사제도

2001년도 세계 농산물수입량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리아 순이고, 특히 유럽연합은 제 3국가들인 아프리카의 농산물수출량의 85%와 남미 농산물수출량의 45%를 수입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은 세계의 주요 농산물수입국이자 주요 농산물수출국들 중의 하나로서, 매년 전체 농산물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주요국가들을 [그림 4-5] 에서 살펴보면, 미국, 브라질

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아르헨티나,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순이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태국으로부터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5] 2001년 유럽연합의 주요 농산물수입국
(Exporting country for EU, Agriculture)

(단위: Million 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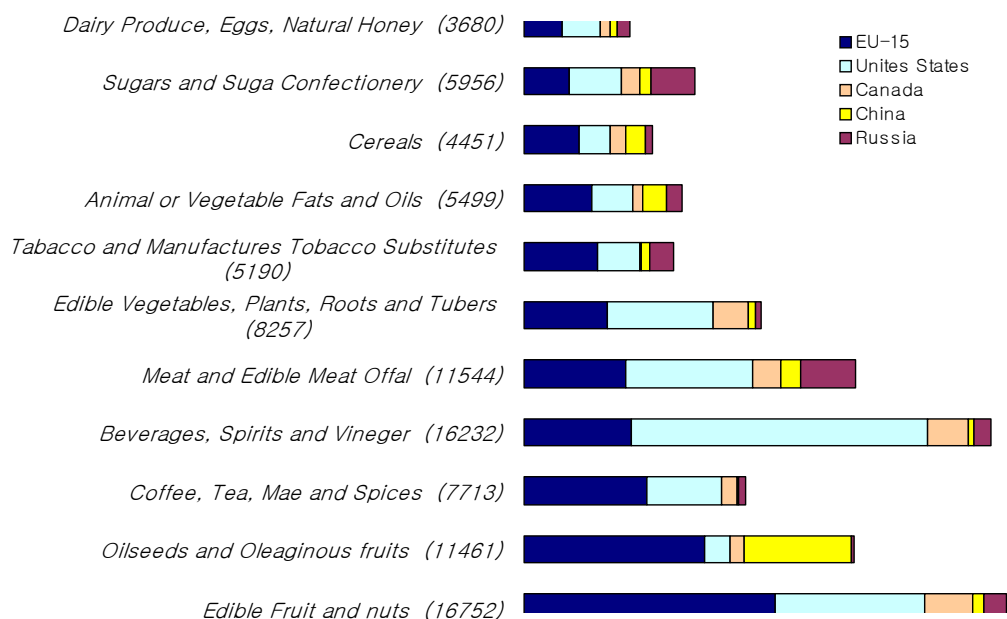


자료: Commission report on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EU

또한, 2001년도 수입농산물의 대표적인 품목들을 [그림 4-6] 에서 살펴보면, 유럽연합 15개국 내에서의 유통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중국, 러시아권에서 과일류와 견과류가 가장 많이 수입이 되었고, 주류, 육류, 채소류, 담배,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류, 설탕, 곡류, 알류, 꿀 등의 품목의 순으로 수입되었다.

[그림 4-6] 2001년 주요 수입농산물품목(Imported food category in EU)

(단위: Million EUR)



자료: Commission report on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EU

이렇듯 전 세계로부터 수입되어지는 농산물들은 유럽연합 내로 가축병 및 전염병을 유입시키는 운반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널리 알려진 식품에서 유래하는 전염병으로는 salmonella, staphylococci, listeria, escherichia coli, 기타 enterobacteria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유럽연합에서 허용하지 않는 항생제 등의 수의약품의 사용, 호르몬제 투여, GMO의 사용, 허용되지 않는 농약사용 등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 및 실사를 FVO에서 실시하고 있다.

Food and Veterinary Office(FVO)에서는 EU연합의 국가들과 EU연합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품의 품질이 EU연합의 규정에 상응하는지 실사를 통해 검토하고 권장사항을 Inspection Reports로서 발표한다. 1997년 50명의 인원으로 시작된 FVO에는 현재 70명의 실사담당자를 포함 약 160명이 종사하고 있다. 수입국들에 대한 FVO의 Inspection Programme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주요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Food of animal origin
- Food of plant origin
- Unauthorised substances and residues
- Animal health
- Animal welfare and zootechnics
- Plant health

유럽연합 국가들과 그 외의 국가들로 분리하여 모니터링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BSE과 동과 관련된 조사결과 및 수의약품에 의한 식품오염에 대한 조사결과 등은 이미 발표된 바가 있다. 또한, 과일 및 채소 중의 잔류농약에 대한 규격화된 모니터링조사방법 및 분석기관들의 수준단일화 등을 목적으로 유럽연합국들의 단일화된 규격제정에 힘쓰고 있다.

간단히 FVO의 Inspection Reports의 종류를 살펴보면

- Veterinary Inspections
- Plant Health Inspections
- Contamination of Food and Feed Materials Inspections
- Food Hygiene Inspections
- Food Irradiation Inspections
- Genetically Modified Food Inspections
- Pesticides Inspections
- Organic Farming Inspections
- Special Reports 등이 있다.

나. 신속경보통보체계의 도입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 RASFF)

유럽연합은 BSE, 구제역 등 식품관련 파동들로 전 유럽이 흔들렸던 경험을 통해 공동체 국가들간의 신속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방안모색에 집중하였다.

2003년 5월부터 매주 유럽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신속경보통보체계(RASFF)는 식품 및 가축사료에 의하여 유럽연합내의 소비자들의 건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유럽연합의 연결망을 통하여 각 구성원들에게 경보통보를 함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각 국가들로부터 최근의 위해요소를 수집하고 신속히 전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체계이다. RASFF는 하나의 정보교환체계로서 경보통보(Alert Notifications)와 정보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s)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는 연결망을 담당관리하고, 유럽연합내 각 국가들과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식품 및 수의학사무청(Food and Veterinary Office, FVO)으로 부터 경보통보되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매 주 한번씩 각 구성원들에게 전달한다.

<표 4-33> 에는 각 국가별 RASFF 담당관리기관들이 수록되어 있다.

1) 경보통보(Alert Notifications)

경보통보는 유럽시장 내에 식품이나 가축사료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됨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경보가 올리면 해당국가 외에 기타 유럽연합국가들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해당식품이나 가축사료는 폐기 또는 회수 등으로 적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때에 소비자들은 경보통보된 제품들이 폐기되었거나 회수되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으로 각 국가들에서는 소비자를 위한 적절한 정보전달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 정보통보(Information Notification)

위험요인은 이미 평가되어졌고 문제제품이 통보된 국가 외에 기타 유럽연합국가들의 시장에 아직 유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처리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정보통보함으로써 문제의 제품이 유입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거쳐 유럽연합 유통시장에서 제거시키는 등의 관리와 주의가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들은 정보통보 되어진 제품들이 시장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이미 필요한 모든 사전처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효율적인 정보전달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표 4-33> 유럽연합내 국가별 RASFF 담당관리기관
(RASFF managemental facilities by country in EU)

국 가 명	기 관 명
AUSTRIA	Osterreichische Agentur für Gesundheit und Ernährungssicherheit GmbH
BELGIUM	A.F.S.C.A.- Agence Federale pour la Securite de la Chaine Alimentaire
DENMARK	The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GERMANY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
GREECE	General Chemical State Laboratory - Food Division
FINLAND	National Food Agency Finland(Elintavikevirasto)
FRANCE	1) Ministere de l'Economie, des Finances et de l'Industrie 2) Ministere de l'Agriculture, de l'Alimentation, de la Peche et des Affaires Rurales
IRELAND	F.S.A.I. - Food Safety Authority of Ireland
ITALY	Ministero della Salute
LUXEMBOURG	Ministere de la Sante Division de l'Inspection Sanitaire
NETHERLANDS	Voedsel en Waren Autoriteit: Keuringsdienst van Waren(KvW) Rijksdienst voor de keuring van Vee en Vlees(RVV)
PORTUGAL	Ministry of Agriculture, Rural Development and Fisheries
SPAIN	Ministry of Health and Consumption(Ministerio de Sanidad y Consumo)
SWEDEN	National Food Administration(Livsmedelsverket)
UNITED KINGDOM	Food Standards Agency
ICELAND	Environment and Food Agency of Iceland (Umhverfisstofnun, UST)
LIECHTENSTEIN	Office for Food Inspection and Veterinary Affairs(Amt für Lebensmittelkontrolle/Landesveterinaeramt)
NORWAY	Norwegian Food Control Authority(Statens Næringsmiddeltilsyn)

이 때에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서는 개방적인 정보교류가 필요하나, 문제제품의 생산자명, 상품명 등과 같은 상업적 정보는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4-34> 에는 유럽위원회에서 발표한 몇 가지 경보통보와 정보통보의 예를 참고로 발췌하였다.

<표 4-34> 경보통보와 정보통보(Alert Notifications and Information Notifications)

WEEK 2003/41

TABLE 1: ALERT NOTIFICATIONS

Notifications in blue typeface concern feed, all other notifications concern food.

DATE:	NOTIFIED BY:	REF. :	REASON FOR NOTIFYING:	COUNTRY OF ORIGIN:
06-10-2003	NORWAY/ESA	2003.299	Listeria monocytogenes in cured meats	SPAIN
07-10-2003	AUSTRIA	2003.300	Listeria monocytogenes in Gorgonzola cheese	ITALY
07-10-2003	GREECE	2003.301	Listeria monocytogenes in frozen boneless beef	ITALY
08-10-2003	UNITED KINGDOM	2003.302	Fumonisin in maize meal	GERMANY
08-10-2003	UNITED KINGDOM	2003.303	Fumonisin in maize flour/meal	ITALY
08-10-2003	UNITED KINGDOM	2003.304	Fumonisin in fresh and wild organic corn flour	ITALY
08-10-2003	UNITED KINGDOM	2003.305	Fumonisin in organically grown corn/maize flour	NOT MENTIONED
08-10-2003	UNITED KINGDOM	2003.306	Fumonisin in organically grown and produced suma maize meal	ITALY
09-10-2003	UNITED KINGDOM	2003.307	Breaking of bottles containing alcoholic beverage	UNITED KINGDOM
09-10-2003	NORWAY/ESA	2003.308	Anilin in plastic kitchenware	SWEDEN
09-10-2003	DENMARK	2003.309	Salmonella typhimurium DT 104 in Pork belly (raw material for streaky bacon)	GERMANY
09-10-2003	DENMARK	2003.310	Salmonella typhimurium DT 104 in Pork belly (raw material for streaky bacon)	GERMANY
09-10-2003	FINLAND	2003.311	Salmonella typhimurium in Pork loin	GERMANY
10-10-2003	GERMANY	2003.312	colour Sudan 1 in Tandoori Masala barbecue ground spice and barbecue spices preparation	UNITED KINGDOM
10-10-2003	SPAIN	2003.313	glass particles in blue cheese	GERMANY

〈표 4-34〉 계속(Continued)

TABLE 2: INFORMATION NOTIFICATIONS

Notifications in blue typeface concern feed, all other notifications concern food.

DATE:	NOTIFIED BY:	REF. :	REASON FOR NOTIFYING:	COUNTRY OF ORIGIN:
06-10-2003	ITALY	2003.BXP	ochratoxin A in cocoa powder	THE NETHERLANDS
06-10-2003	ITALY	2003.BXQ	histamine in smoked herrings (<i>Clupea harengus</i>)	CANADA
06-10-2003	UNITED KINGDOM	2003.BXR	colour Sudan 1 in Lemon and Coriander Couscous	UNITED KINGDOM
06-10-2003	ITALY	2003.BXS	lead in refrigerated tuna fillets (<i>Thunnus albacares</i>)	INDONESIA
06-10-2003	FRANCE	2003.BXT	<i>Listeria monocytogenes</i> in Smoked Salmon trimmings	UNITED KINGDOM
06-10-2003	NORWAY/ESA	2003.BXU	<i>Salmonella</i> charity and <i>Salmonella</i> nchanga in chilli powder and cumin	TURKEY
06-10-2003	UNITED KINGDOM	2003.BXV	illegal import of Ting Tong Snails in jars - Jellyfish & dried Chillis	CHINA
06-10-2003	SPAIN	2003.BXW	<i>Listeria monocytogenes</i> in frozen boneless beef	BRAZIL
06-10-2003	SPAIN	2003.BXX	total Enterobacteriaceae and aerobic mesophiles in hake (<i>Merluccius hubbsi</i>)	ARGENTINA
06-10-2003	SPAIN	2003.BXY	<i>Listeria monocytogenes</i> in frozen boneless beef	BRAZIL
07-10-2003	SPAIN	2003.BXZ	<i>Salmonella</i> in frozen chicken	BRAZIL
07-10-2003	SPAIN	2003.BYA	<i>Salmonella</i> in frozen chicken	BRAZIL
07-10-2003	ITALY	2003.BYB	Hyphomycetes and yeast in organic herbs	EGYPT
07-10-2003	ITALY	2003.BYC	cadmium in frozen swordfish (<i>Xiphias gladius</i>)	SINGAPORE
08-10-2003	UNITED KINGDOM	2003.BYD	<i>Salmonella</i> Bareilly in curry powder	MALAYSIA

현재 네덜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태리 등 유럽연합의 국가들 뿐 아니라 이집트, 중국, 캐나다 등 그 외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식품 및 가축사료에서 발견되는 미생물로 인한 위험 또는 중금속 오염 등의 위해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위와 같이 신속하게 유럽연합 내에 전파될 수 있다.

이러한 신속정보통보체계는 위해요인들을 적시에 검출하여 시장유통이 되지 않도록 제거할 수 있고, 전 유럽연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위해요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법이다.

다. 표시기준 강화 및 인증검사

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은 제품의 구성 및 특성 등의 정보표시를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줄이거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적합한 제품표시는 소비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선택을 용이

하게 하기 때문에 식품검사항목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1)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표시사항

2003년 7월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2004년 4월부터 유럽연합 내에서 시행되어질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사항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생산 및 가공과정에서 Genetical Modified Organism(GMO)가 혼합된 경우에는 그 함량에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에는 0.9%라는 허용한계치를 지정하여 GMO식품소재의 함유량이 0.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표시를 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표시사항을 재확인 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원산지증명과 같은 유전자재조합식품소재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인식코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 중 GMO의 잔류량에 초점을 맞추어 규제하던 기존방법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원산지 검사 및 공정확인을 통한 사전유입방지를 목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 유기농 농작물에 대한 표시사항

Organic Farming 인증표시는 Council Regulation (EC) No 2092/91에 의거하는 전제조건에 부합하고 EU-Control system에 준하는 Organic Farm Products가 95%이상 함유되어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표시로서, 이 때에 GMO의 함유는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담당인증기관은 각 정부에서 허가하고 감독하는 공인담당기관으로서 Organic Farmer들은 이곳에 필히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검사 및 관리방법은 생산부터 저장, 가공 및 포장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최소 1년에 1회 실사가 실시되고 제품검사 또한 간헐적으로 진행된다.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허가가 취소되고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도 가능하다.

[그림 4-7] 유기농 농작물의 인증표시(Certification labelling for organic farm products)



Organic Farm Produ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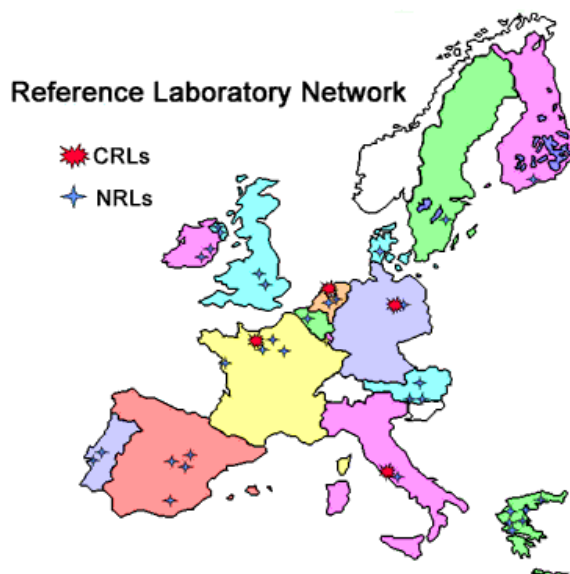
차츰 소비자들의 의식과 인식이 변화하여 이제는 일반식품에 비해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소비자들은 토양과 물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배제하고자 질과 안전에 따르는 가격을 수용하는 추세이다.

독일의 Freiburg에 위치하고 있는 유기농연구소에서는 2003년 9월 5일 농작물의 종자에 대한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비판적인 홍보문을 9월 22일 발표하였고, “유기농 농작의 경우 GMO농작물재배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유기농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종자 중 GMO의 함유량을 농작물에 따라 0.3%~0.7%까지는 GMO함유에 대한 특별한 표시사항 없이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제안에 반대하여 독일 유기농연구소에서는 최대 0.1%정도만 허용하여야 한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기농 농작물 자체에 GMO종자의 허용치를 높일 경우 향후 일반식품으로의 GMO전이가 빨라져 식품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0.9%라는 한계치를 쉽게 넘을 수 있다는 의견이며, GMO free를 선호하여 유기농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범위가 축소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측 입장이 수용될지 향후 유럽집행위원회의 결정이 주목된다.

라. 식품 및 가축사료의 잔류물검사

유럽 Concil Directive 1999/29/EC는 식품 및 가축사료에 함유되어서는 안될 성분들이나 제품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비소, 납, 수은,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들과 Dioxins, Aflatoxins, 지정된 Pesticides, 기타 식품 내 불순물 등에 대한 최대 허용한계치가 지정되어 있고, 유럽연합의 FVO에서는 모니터링조사를 통해 이들의 위해정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특히, FVO에서 발간되는 Annual EU-wide Pesticide Residues Monitoring Reports는 [그림 4-8]의 Reference Laboratory Network를 이용한 효율적인 검사제도라 하겠다.

[그림 4-8] European Reference Laboratory Network



주: CRLs: European; NRLs: National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입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그로 만들어진 동물성 식품으로부터 약물을 먹는 것과 같다. 따라서 대부분 약품은 식용가축에게 금지되었고, 수의약품 잔류물의 허용한 계치가 규정되어 있다. 이는 과도한 수의약품의 사용을 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따라서는 철저한 검사, 감독, 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각 국가별 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럽공인 검사기관들의 Network이 [그림 4-8]에 표시되어있다. 각 검사기관들은 유럽집행위원회 및 유럽연합 국가들과 밀착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재 독일은 수의약품검사에 대한 Coordination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사전에 약품이 투입된 동물에서 생산된 고기, 우유, 알 등의 동물성 식품들에서 질병치료제 외에도 진통제, 성장촉진제 등의 수의약품의 잔류량을 검사하고 있다.

1988년 이후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뿐 아니라 제 3국가의 수입국들에게도 가축에게 호르몬효과가 있는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로 성장호르몬인 Oestradiol 17 β , Testosterone, Progesterone, Zeranol, Trenbolone acetate, Melengestrol acetate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Scientific Committee on Veterinary Measures relating to Public Health(SCVPH)의 의견서를 근거로 2000년 유럽집행위원회는 Directive 96/22EC를 제안하였고 Directive 2003/74/EC로서 제정되었다.

마. 착향료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성검사

유럽공동체에서는 전통적으로 착향료를 천연과 합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며, 유럽이사회시행규칙 88/388/EEC 제1조에 의거하여 천연의 정의는 천연착향물질 또는 천연 flavouring preparation만을 성분으로 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Codex, 미국, 유럽연합은 착향료의 안전성평가에 있어서 JECFA(FAO/WHO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방식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물질의 안전성 평가가 국제적으로 한가지 방법으로 실시됨을 의미한다. JECFA에서는 FAO와 WHO의 후원을 받아 Codex와 기타 기관들을 위하여 안전성평가를 행하고 있다. 착향료의 안전성평가는 다른 식품첨가물의 평가와 구별되는데, 이는 착향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즉, 착향료로서 수많은 향기성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식품 중에 미량이 사용되고 사용농도에 '자제한계'(지나치게 강한 향기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각의 향기성분들에 다른 식품첨가물과 같은 대규모적인 독성평가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한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JECFA방식이라고 부르는 착향료를 위한 안전성 평가법이 개발된 것이다.

1965년부터 1995년까지 기존의 ADI를 이용한 안전성 평가방법에 의하여 약 50종의 착향물질만이 평가되었는데 반해, 캐나다의 몬로박사에 의해 제안된 안전성평가법(JECFA의 신방법)이 1996년 채택되자 5년간 742종 물질의 평가가 신속하게 완료되었다. JECFA의 신방법은 화학적으로 정의된 단일착향료를 단계별로 접근하고 향기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착향

료로서 그 물질의 섭취량에 따라 안전성을 판정하는 것이다. 간략히 설명하면, 섭취량, 화학 구조와 효과와의 관계, 인체의 신진대사, 독성, 추가적으로 순도와 화학적 특성을 평가한다. 화학구조에 의한 분류와 판단수를 사용하여 “안전 상 문제가 없는 물질” 또는 “추가 Data가 필요한 물질” 등으로 판정한다.

구조분류에서는,

- (1) 화학구조가 단순하여 신체대사가 잘 되며 경구독성이 적다고 추정되는 경우
- (2) 무해성은 떨어지나 독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로 반응성 관능기를 가지는 것이 있는 경우
- (3) 즉시 안전하다고 추정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경우 혹은 독성이 추정되는 경우 등 3가지로 분류한다. 독성검사의 결과가 없는 성분이나 그 연구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인체 축적량 평가, 독성학적 평가, 신체대사적인 평가 등에 있어 화학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성분끼리 그룹별로 연구 평가된다. SCF에 따르면 현재 약 2,800물질중 약 800종은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가 불필요하며 JECFA에서 평가되고 있는 물질이외에 1,000내지 1,250 가지 향기성분들이 앞으로 SCF에 의해 평가되어질 것이다.

가공식품에 없어서는 안 되는 착향료, 그 주성분인 착향물질의 국제적 조화는 현재 유럽 연합과 미국에 의해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2004년 착향료에 대한 유럽연합규제의 실시로 유럽연합의 규정목록과 미국 FEMA(미국착향료협회)의 착향료목록이 실질적으로 동일화될 전망이다. 현재 JECFA와 유럽연합의 SCF(식품과학부회)에서는 기존 목록상의 착향료들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의 착향료목록은 “Positive List(사용할 수 있는 품목리스트)”이며 취급하는 모든 물질들의 안전성이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방법적으로 유럽연합의 목록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그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물질들이나 FEMA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로 판정되지 않은 물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유럽연합의 착향료목록(표 4-35 참조)은 1999년에 처음 발표되었고, 2000년에 착향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법이 결정되었으며, 2003년까지는 안전성 평가를 종료하고 2004년부터 착향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유럽연합 착향료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물질은 현재 약 2,800종이며, 필요에 따라 점진적인 추가도 가능하다.

〈표 4-35〉 착향료목록 예시(Samples of additional food Collars)

Part 1: CAS-No 순서로 기록된 착향료

CAS	Name	FEMA	CoF	EINECS	Comments	Synonyms	Systematic name
63-68-3	1-Methionine	3301		200-562-9	(1)-(3)		

Part 2: CoE-No 순서로 기록된 착향료

CoE	Name	FEMA	EINECS	Comments	Synonyms	Systematic name
2221	Glycyrrhizic acid	2528		(3)	Glycyrrhizin	

Part 3: 알파벳 이름 순서로 기록된 착향료

No	Name	FEMA	EINECS	Comments	Synonyms	Systematic name
20	4-Butylthiazol					

Part 4: 지적소유권이 인정된 착향료 (5년간)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Commission
CN001	17.10.1998

바. 품질인증표시(Quality Mark)

국가별로 일정한 규격에 준하는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QS(Qualitaet und Sicherheit), 네덜란드 IKB, 덴마크 DS, 벨기에 Certas 등으로 식품에서도 이러한 인증표시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Council Regulation (EC) No 2081/92 of 14 July 1992 on the protection of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designations of origin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과 Council Regulation (EC) No 2082/92 of 14 July 1992 of on certificates of specific character for agricultural products and foodstuffs 규정에 의거하여 유럽연합 내의 특산물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그림 4-9]와 같은 원산지보호, 제조방법보호, 전통식품보호 등을 품질인증표시로 그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다.

유럽연합 내에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특별히 명망을 떨치는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과 식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이들 특산물들은 품질수준이 다른 복제품들과 혼용되어질 소지가 크다. 이러한 잘못된 경쟁은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유해하기 때문에 1992년 유럽 집행위원회에서는 특산물 및 전통적 방법으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식품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지정하여 소비자들의 안전한 선택을 용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PDO 해당식품의 경우는 생산, 가공방법이 지역적으로 특별하게 실시되는 경우이며. PGI

의 경우는 생산, 가공방법이 적어도 하나의 생산단계에서 지역적 특성을 가진 경우이거나, 특별히 명망높게 취급되는 제품의 경우를 말한다. 또한, TSG인증의 경우는 지역적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식품성분이나 전통적인 생산, 가공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표시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증제도의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이 품질에 대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신뢰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림 4-9] 유럽연합 내의 품질인증표시 및 그 예시
(Certification labelling of food Quality)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Traditional Speciality
Guaranteed (TSG)

[그림 4-9] 계속(Continued)

NAME OF THE PRODUCT	Fromage de Herve
CATEGORY	Cheeses
SUB-CATEGORY	Cheese
PROTECTION SYSTEM	PDO
NAME OF GROUP OF PRODUCERS	Association des négociants en fromage Herve origine
ADDRESS	Rue de Gorhez, 77 B-4880 Aubel
COUNTRY	Belgique
INSPECTION BODY	PROMAG asbl
ADDRESS	Rue du Carmel, 1 6900 Marloie
COUNTRY	Belgique



NAME OF THE PRODUCT	Kölsch
CATEGORY	Beer
SUB-CATEGORY	Beer
PROTECTION SYSTEM	PGI
NAME OF GROUP OF PRODUCERS	Kölner Brauerei-Verband e.V.
ADDRESS	Lungengasse, 48-50 50676 Köln
COUNTRY	Deutschland
INSPECTION BODY	Landesamt für Ernährungswirtschaft und Jagd Nordrhein-Westfalen
ADDRESS	Postfach 30 06 51 40406 Düsseldorf
COUNTRY	Deutschland



NAME OF THE PRODUCT	Sahti
PROTECTION SYSTEM	TSG



PRODUCT DESCRIPTION	Sahti is traditionally prepared from raw materials including, in addition to malted barley, other cereal malt and cereals (rye, barley, wheat and oats) and usually hops, fermented using baker's yeast or harvested yeast.
CONTACT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s Forêts Département de l'Agriculture - Unité chargée de la politique et des structures rurales PL (P.O. Box) 30 00023 Valtioneuvosto Suomi

2. 독일의 식품검사제도

가. 식품검사체계

독일의 식품 및 그 관련품들에 대한 검사업무는 독일연방에서 담당하지 않고, 16개의 주 정부 및 특별시(그림 4-10)에서 담당하고 있어 각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3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있다.

- 1) 최고기관으로서 주정부의 담당부처: Coordination, 감독
- 2) 시, 군별 담당부서: 개별검사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감독이행
- 3) 구, 읍별 담당부서: 실제 검사이행

또한, 소비자들은 식품 및 관련품에 의심이 가는 경우 직접 신고할 수 있다

[그림 4-10] 독일연방의 주정부 및 특별시(County and Metropolitan City in Germany)



식품 및 그 관련품으로서 식품과 접촉이 되는 담배, 화장품, 용기류, 섬유류, 장난감 또한 검사대상이며, 식품의 생산, 저장, 운반, 판매까지 관리한다. 이러한 검사는 최소한 일년에 2번 식품생산 및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의 신고로 또는 문제가 있는 업체로 알려지는 스캔들의 경우에는 업체의 검사체계 자체를 검사대상으로 철저히 검토하고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을 채취하여 국가공인분석기관의 전문가에게 분석의뢰한다.

주정부 내의 공인검사기관은 소비자건강보호를 위해

- 식품에 질병을 일으키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 잔류농약, 중금속, 기타 유해물질들의 허용한계치가 지켜졌는지?
- 제품의 혼합이나 표시사항이 식품법에 준하는지? 등을 주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검사방법을 실시한다.

- 1) 생산 및 가공업체에 대한 실사검사
- 2) 식품 및 그 관련품에 대한 품질검사
- 3) 표시사항검사

나. 공인 식품검사방법

독일은 식품법(LMBG) 제35조에 의거하여 식품 및 그 관련품에 대한 품질검사방법을 규격화하고 있다. 식품유형별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주요성분, 영양성분, 주요 지표성분 등에 대해 시험항목에 따른 화학적, 미생물학적, 물리적 방법들이 수재되어 있다. 검사방법으로 공인되기 위해서는 'Ringtest'라는 통계적인 분석법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는 각 주정부 공인분석기관들에서 동일한 샘플과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분석하고, BFR에서 그 결과를 수집하여 검사방법의 재현성과 정확성을 측정한 후 종합적인 타당성검토를 거쳐 공인 검사방법으로 제정한다.

□ 식품 및 관련품의 유형에 따른 공인검사방법 지정

1) 식품류

00.00 식품(일반)
00.90 관능검사(일반)
 00.00-1 수은검사
 ↓
 00.00-78(EG): Dioxin 및 PCBs
01.00 우유
02.00 유제품
03.00 치즈류
04.00 버터류
05.00 알류, 알가공품
06.00 온혈동물의 육류
07.00 육가공품
08.00 소시지류
10.00 생선류
 ↓ 식품유형별 분류
52.00 향신료
53.00 양념류
56.00 식품첨가물/식품으로 된 보충제
57.00 식품첨가물
59.00 식수, 식품생산업체의 용수
 59.00-1 Escherichia coli und coliform 미생물검사
 ↓
 59.00-6 농약잔류물검사

2) 관련품류

80.00 식품과 직접적인 접촉되는 관련품

80.00-1~3: 표면미생물검사

82.02 신체와 접촉되는 관련품

82.02-1: 섬유 의 Formaldehyde 용출량검사

↓

82.02-8: 가죽과 섬유에서의 Petachlorphenol검사

82.10 장난감

3) 화장품류

84.00 화장품류(일반)

84.00-1(EG): 샘플채취

↓

84.00-24(EG): 1-Phenoxypropan-2-ol, 2-Phenoxyethanol,

Benzyl-4-hydroxybenzoat, Butyl-4-hydroxybenzoat, Ethyl-4-hydroxybenzoat

Methyl-4-hydroxybenzoat, Propyl-4-hydroxybenzoat 검사

4) 담배류

60.00 담배제품류(일반)

60.00-1: 수분검사

↓

60.05-7: CO배출량검사 까지 유형별로 검사항목들과 방법들이 지정되어 있다.

□ 공인검사방법의 구조

- 1) 목적과 적용범위
- 2) 정의
- 3) 분석법의 기전
- 4) 필요한 화학물질
- 5) 필요한 기기 및 도구
- 6) 샘플채취
- 7) 실험방법
- 8) 결과 및 계산
- 9) 결과보고
- 10) 주의점 및 참고사항 등으로 상세하게 검사방법이 서술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단한 품질검사수준의 분석방법만이 식품공전에 수록되어 있고 그 방법들에 대한 재검토 및 새로운 방법의 수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식품유형별 상세한 분석방법을 정립한다면 분석방법에 따른 분석결과차이로 인한 이견이나 분쟁을 배제할 수 있고, 공인분석기관 및 업체들의 효율적인 식품검사가 가능할 것이다.

다. 식품 내 잔류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식품 내 잔류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사는 2002년 11월 1일 부터는 독일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국(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BVL)에서 Coordination을 담당하고, 유럽연합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실시하고 있다.

- 잔류물검사계획 수립
- 주정부의 검사진행 후 결과수집 및 평가
- 검사결과 총정리
- 유럽집행위원회로 결과보고 및 결과발표

각 주정부의 모니터링검체수는 매년 도살되어지는 가축의 수에 비례하고 그 이상의 경우는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채취된다. 검사범위는 1989~1994년에는 소, 돼지, 말, 양으로 국한하였던 것을 1995년 부터는 가금류가 추가되었고, 1998년 부터는 생선류, 1999년 부터는 토끼, 야생동물, 알, 우유, 꿀 등이 포함되어, 현재는 생존하는 가축, 도살된 가축, 그 가공품,

우유, 알, 꿀 등이 모두 포함된다. EU규정에 따르면 매년 250번째 도살되는 소, 2000번째 도살되는 돼지, 양 그리고 말은 상황에 따라 검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독일 육류위생법에 의하면 적어도 도살된 암소의 2%, 도살된 모든 다른 동물들의 경우 0.5%에 대해서 잔류물 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금류에 대해서는 일년 생산량 중 200톤마다, 생선류는 100톤마다, 토끼는 30톤마다, 꿀의 경우는 3000톤마다, 우유는 15,000톤마다, 알은 1,000톤 마다 검사되어야 한다.

검사대상은 위법으로 사용되는 금지된 물질이나 허가되지 않은 물질의 사용을 검사하고 허가된 수의약품의 경우 규정대로 사용하여 최대허용한계치(maximum residue levels, MRLs) 내에서 측정되는지 등의 검사가 실시되며, 이 외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요인도 필요에 따라 검사한다. 매년 사전에 지정되어 의무적으로 분석될 물질들이 발표되고, 시장상황에 따른 추가분석물질들은 주정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독일연방과 주정부의 협력 하에 진행되고 있는 식품모니터링은 하나의 측정 및 관찰프로그램이다. 잔류농약, 중금속 외에도 독일에서는 Mycotoxin, Allergen 등으로 확대된 대표샘플검사를 통해 위해요인의 섭취량 측정 및 위험조기진단을 실현하고 있다.

3. 향후 동향

유럽연합에서는 유전자재조합식품과 같이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으로 그 위해성 판단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 표시기준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GMO식품의 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국가들과의 무역마찰을 피하는 반면, 식품안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유럽연합의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러한 사전예방의 원칙은 유럽연합의 식품관리제도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좋은 예로서 신속경보통보체계가 구축되었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로서 수입국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 및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광범위한 의미의 식품안전을 보장하려는 유럽연합의 노력은 향후 유럽식품안전국(EFSA)의 완성과 함께 방법상으로 더욱 구체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4. 정책적 시사점

유럽연합 및 독일의 식품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 식품검사제도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는,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는, 일정한 품질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관리가 중요하다.

셋째는, 수의약품, 잔류농약, 환경오염물질 등에 대한 모니터링검사를 활성화하여 조기위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는, 위해요인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방안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식품첨가물의 유형별 섭취량의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위해평가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는, 식품공전 검사방법의 재평가 및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공인분석기관과 식품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 내 잔류농약 및 항생제함유 등의 위해물질에 대한 검사는 새로운 것이 아니나, 앞으로는 식품안전의 의미가 식품자체 뿐 아니라 식품원료를 생산하는 농가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광범위함을 인식하고, 이에 따르는 검사제도 역시 각각의 단계에서 규제 및 검사방법이 빠짐없이 서로 연관성 있게 이어질 때에 그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다.

즉, 건강한 가축 ↔ 안전한 식품 ↔ 건강한 소비자를 의미한다.

제 5장 결론 및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제 1절 결론

전 세계적인 생활 여건 및 환경 변화에 의해 식품안전수준의 제고는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각국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식품공학과 관련한 주변 학문의 높은 성취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수준 향상 등으로 인류의 먹거리는 풍요로워지고 있으나 식인성 질병의 다발 등은 새로운 식품안전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식품안전수준을 확보하자는 슬로건은 식품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관련 법령 및 조직이 다원화되어있는 국가에서는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소비자가 섭취하는 각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가 적절하게 취해져야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나 수입되는 식품 등 모든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바로 식품검사제도의 적정화이다.

식품의 검사제도가 효율화되어야만 효과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검사품목별로 검사주기를 선정하고, 검사대상 품목별로 우선 검사하여야 할 검사대상 항목을 관행보다는 과학적인 자료분석 결과에 의해 결정함으로써 해당 검사를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검사대상 품목과 검사 빈도 및 검사대상 항목의 선정은 몇 년 주기로 시의성있는 조정이 필요하다.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품목과 검사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런 필요성에 의해 지난 3년간 우리나라 모든 검사기관이 검사한 실적을 종합하여 부적합 처분 실적을 분석하여 검사대상 품목, 검사대상 항목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개진하였으며, 자연재해 및 테러에 의한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러 번 지적된 바와 같이 검사조직체계 및 법령이 다원화되어있어 나타나는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몇 가지 중복관련 법령의 관련 내용 삭제를 안으로 제시하였다.

제 2절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식품검사제도의 효율화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특별검사대상 품목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으로 조정하고, 검사항목도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난 항목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식품검사와 관련한 중복법령을 개선하고, 일본의 검사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안을 제시한다.

1. 특별검사대상품목 조정

현재 시도에서 1월에 1회 정도로 수거반복검사를 실시하는 특별검사대상품목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으로 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식품안전 수준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조정된 안을 보면 식용유지,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얼음, 주류의 순으로 검사빈도를 높이는 것이 요망된다.

〈표 5-1〉 특별검사대상 품목 조정(안)
(Food category of special inspection-alternative proposal)

현행		조정	
① 빵류	⑪ 건강보조식품	① 식용유지	⑪ 식육제품
② 건과류	⑫ 식용얼음	② 건강보조식품	⑫ 다류
③ 우유(시유)	⑬ 벌꿀	③ 특수영양식품	⑬ 과자류
④ 식육제품	⑭ 인삼제품류	④ 얼음	⑭ 김치절임식품
⑤ 어육제품	⑮ 김치절임식품	⑤ 주류	⑮ 당류
⑥ 두부류	⑯ 도시락류	⑥ 아이스크림류	⑯ 면류
⑦ 식용유지	⑰ 햄버거류	⑦ 인삼제품류	⑰ 유가공품
⑧ 면류	⑱ 냉동식품	⑧ 건포류	⑱ 어육제품
⑨ 다류	⑲ 건포류	⑨ 음료류	⑲ 두부류와 묵류
⑩ 특수영양식품	⑳ 콩나물류	⑩ 조미식품	⑳ 콩나물류

2. 품목별 검사대상 항목 조정

3년간의 검사실적에 근거하여 각 품목별 우선 검사대상 항목을 <표 5-2>에 제시하였다. 즉, 품목별로 부적합 처분을 많이 받은 검사항목을 우선적으로 검사하면 각 제품의 안전 수준을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식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표 5-2〉 품목별 우선 검사대상 항목(Former examination methods by food products)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과자류	산가	과산화물가	세균수	보존료	대장균군
당 류	산도	이산화황	내용량	성분함량미달	
아이스크림류	대장균군	세균수	성분함량미달	성상	표시량미달
유가공품	대장균군	세균수	성상	고형량	성분함량미달
식육제품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보존료	기준초과성분
어육제품	대장균군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성상
두부류	보존료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산가
식용유지	산가	요오드가	과산화물가	성상	굴절률
면 류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수분	타르색소
다 류	세균수	수분	대장균군	내용량	사용이외원료
청량음료	세균수	대장균군	성상	보존료	성분함량미달
특수영양식품	성분함량미달	대장균군	붕해시험	표시량미달	기준초과성분
건강보조식품	성분함량미달	대장균군	붕해시험	세균수	식중독균
조미식품	수분	대장균군	성분함량미달	보존료	타르색소
얼음	세균수	대장균군	pH	성상	산가
인삼제품류	세균수	내용량	성분함량미달	수분	대장균군
김치·절임식품	보존료	성분함량미달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대장균군
주 류	인공감미료	성분함량미달	기준초과성분	허용외첨가물	성상
건포류	대장균군	수분	대장균	성상	이산화황
기타식품류	대장균	세균수	식중독균	수분	대장균군
일반가공식품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표시량미달
농산물	농약	표백제	회분	이산화황	보존료
수산물	식중독균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수분
축산물	식중독균	기타	대장균		

전체적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검사항목은 대장균군, 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등이 우선 대상 품목으로 분석되었고, 일부 제품의 특성상 우선 검사대상 항목이 된 것은 성상, 수분, 보존료, 내용량, 성분함량 미달 여부 등으로 조정하여야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이 다소비하는 김치절임식품에는 타르색소에 관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통처리하는 제품이 다수 있는 과자류는 검사대상 항목 1순위가 산가, 과산화물가의 순으로 나타났고, 비교적 고가인 인삼제품류는 세균수, 내용량, 성분함량미달여부가 주요 검사대항 항목으로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3. 관련 법 개정

가. 중복법령 내용 삭제

앞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식품검사제도는 다원화된 조직체계와 법령체계를 갖고 있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최소한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에 제시한 법령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이 요망된다.

-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정의) 중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및 알가공품” 삭제가 필요함.
- 2) 법 제19조(출입·수거·검사) 제1항의 단서 규정 삭제, 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 기준) 제1항 중 3~8호 삭제, 법 제22조(영업의 허가) 제1항 중 축산물가공법, 축산물보관업, 법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전문 삭제, 기타 축산물 가공처리법 중 축산물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과 관련한 제반규정 삭제가 필요함.

나. 식품위생법 개정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및 관련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식품위생법 및 관련 하위법령의 개정에 관한 세부개정안은 요약하여 본문에서는 개정에 필요한 관련조항만 신구대조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식품위생법 개정(안)

<표 5-2>에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관한 신구대조문을 제시하였다.

식품위생법 제17조에 3항을 신설하여 일본의 검사명령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신설된 법 조문이 명시되어있다.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물, 대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식품위생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되고, 지자체의 민선장들의 온정주의에 의해 식품검사와 검사결과에 의한 행정처분이 미미한 실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이라 사료된다.

〈표 5-3〉 식품위생법 개정 신구대조문(안)(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개정전	개정후
<p>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p> <p>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p>	<p>제17조 (출입·검사·검사명령·수거등)</p> <p>① 종전유지</p> <p>② 종전유지</p> <p>③<u>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검사명령 또는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검사항목, 검사절차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u></p>

〈표 5-3〉 계속(Continued)

개정전	개정후
<p>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등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29></p> <p>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8.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관련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p>제18조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지정)</p> <p>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식품 등의 검사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한 식품 등의 검사와 <u>검사명령에 의해 수거된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을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u></p> <p>② 종전유지</p> <p>③ 종전유지</p>
<p>제20조 (식품위생감시원)</p> <p>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1995.12.29, 1998.2.28, 2002.8.26></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 (식품위생감시원)</p> <p>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와 <u>검사명령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u> 식품의약품안전청(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개정)</p> <p>② 종전유지</p>

2)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표 5-4>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신규대조문을 제시하였다.

<표 5-4>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신규대조문(안)(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개정전	개정후
제3조의2 (출입·검사·수거 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4.22] [중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3.4.22>]	제3조의2 (출입·검사·검사명령·수거 등) (조항 항목 개정) 중전유지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6.10.14, 2000.7.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2. 수입·판매 또는 사용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여부에 관한 단속 3. 표시기준 또는 과대광고 금지의 위반여부에 관한 단속 4. 출입·검사 및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5.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의 확인·검사 6.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7. 조리사·영양사의 법령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지도 8.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9. 식품 등의 압류·폐기등 10. 영업소의 폐쇄를 위한 간판제거등의 조치 11. 기타 영업자의 법령이행여부에 관한 확인·지도 	제6조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31, 1996.10.14, 2000.7.27>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전유지 2. 중전유지 3. 중전유지 4. 출입·검사 및 검사명령에 필요한 식품 등의 수거 (개정) 5~11. 중전유지

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표 5-5>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신규대조문을 제시하였다.

<표 5-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신규대조문(안)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개정전	개정후
<p>제12조 (출입·검사등)</p> <p>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개정 1996.12.20></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등은 그 처분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6.12.20></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 [전문개정 1993.7.3]</p>	<p>제12조 (출입·검사·검사명령등)</p> <p>①<u>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는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명령에 의해 한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u></p> <p>② 종전유지</p> <p>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u>출입·검사 및 검사명령을 실시한</u>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u>(일부개정)</u></p>

〈표 5-5〉 계속(Continued)

개정전	개정후
<p>제13조 (수거량 · 검사의뢰등)</p> <p>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식품 등의 대상과 그 수거량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89.11.30></p> <p>②관계공무원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p> <p>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을 수거한 관계공무원은 그 수거한 식품 등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합하고 관계공무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0></p> <p>④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식품 등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1995.8.31, 1996.12.20, 1998.10.19, 1999.12.29></p> <p>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수거 · 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1993.7.3, 1995.8.31, 1996.12.20, 1998.10.19></p> <p>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수거 · 검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89.11.30, 1993.7.3></p>	<p>제13조 (수거량 · 검사의뢰등)</p> <p>① 종전유지</p> <p>② 종전유지</p> <p>③ 종전유지</p> <p>④ 종전유지</p> <p><u>⑤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수거 · 검사 및 검사명령을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u></p> <p><u>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 · 수거 · 검사 및 검사명령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개정)</u></p>

〈표 5-5〉 계속(Continued)

개정 전	개정 후
<p>제17조의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3.8.18] [종전 제17조의4는 제17조의6으로 이동 <2003.8.18>]</p> <p>제17조의5 (검사업무정지 등)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7의3과 같다. [본조신설 2003.8.18]</p> <p>제17조의6 (보고 및 지도·감독 등) 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능력을 관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능력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9] [제17조의4에서 이동 <2003.8.18>]</p> <p>제18조 (검사대장의 비치)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9.11.30> ②검사대장은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제17조의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법 제1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표 7의2와 별표 7의4(신설)와 같다.(별표조항 신설)</p> <p>제17조의5 (검사업무정지 등) 종전유지</p> <p>제17조의6 (보고 및 지도·감독 등) <u>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거나 검사명령을 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매반기 종료후 1월 이내에 별지 제12호의5서식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u> ② 종전유지 ③ 종전유지</p> <p>제18조 (검사대장의 비치) ① 종전유지 ② 종전유지</p>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신규대조문(안)

〈표 5-6〉 식품 등의 수거대상 및 수거량[별표 7, 제13조관련]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개정전	개정후
<p>1. 무상수거대상 식품 등</p> <p>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할 때</p> <p>나. 유통중인 부정·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p> <p>다. 부정·불량식품 등을 압류 또는 수거·폐기하여야 할 때</p> <p>라. 수입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p>	<p>1. 무상수거대상 식품 등</p> <p>가. 종전유지</p> <p>나. 종전유지</p> <p>다. 종전유지</p> <p>라. 종전유지</p> <p><u>마.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검사명령받은 경우(신설)</u></p>
<p>2. 유상수거대상 식품 등</p> <p>가. 도·소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p> <p>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제정·개정을 위한 참고용으로 수거할 때</p> <p>다. 기타 무상수거대상이 아닌 식품 등을 수거할 때. 다만, 긴급을 요하는등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p>	<p>2. 유상수거대상 식품 등</p> <p>가. 종전유지</p> <p>나. 종전유지</p> <p>다. 종전유지</p>

〈표 5-7〉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별표7의2, 제17조의4관련]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개정전	개정후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내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내에서 검사하여야 한다(검사명령 포함).[개정]
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기구류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2. 종전유지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된 검사의 절차·방법 및 판정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시험일시, 검체사용량, 시험방법 및 표준시료·시약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것과 분석기기출력물 자료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종전유지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해당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종전유지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가공전에 적합한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에 신뢰성·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5. 종전유지
6.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업소명 및 소재지 나. 의뢰자 및 의뢰기관명 다. 의뢰 또는 접수번호 라. 제품명 및 식품(식품첨가물)유형 마.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바. 검사기준·규격 및 결과(검사수치 등), 적·부여부의 판정 사. 검사기관명	6. 종전유지
7.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항목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한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종전유지
8.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검사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종전유지
9.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 등의 시험·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표준용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행위 나. 의뢰받은 검사물체별로 검사하지 아니하고 검사물체를 혼합·조제하여 검사하는 행위 다. 다른 검사물체의 시험결과를 인용 라. 미생물시험시 배양시간을 단축하여 실험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판정하는 경우 마. 실험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한 확인시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바. 공시험(Blank test)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표준물질 및 시약을 사용한 경우 아. 판정이 모호한 측정치(Peak)에 대하여 확인을 위한 재실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자. 그 밖에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9. 종전유지

〈표 5-8〉 검사명령에 관한 공문[별표 7-4 신설, 제17조 4 관련]
(Proposed Act about food inspection)

개정전	개정후
[신설]	<div data-bbox="954 398 1359 593"> <p>식품의약품안전청 제____-____호 ____년 ____월 ____일 각 식약청, 각 시·군·구,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p> </div> <div data-bbox="801 667 1359 750"> <p>식품위생법 제 17조 제③항에 기인한 검사명령의 실시에 대해</p> </div> <div data-bbox="801 824 1359 907"> <p>제____-____호에 통지한 것과 같이 아래와 같이 검사명령을 실시하도록 한다.</p> </div> <div data-bbox="801 981 1359 1921">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검사의 대상식품 회사명: _____ 제품명: _____ 검사의 항목 검사항목: _____, _____, _____ 검사의 빈도 검사빈도: ____회/(월, 분기, 년 또는 1회) 시험품의 채취방법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함(식품공전) 검사의 방법 보건복지부령에 의함(식품공전) 검사 명령한 구체적이유 검사명령 이유: _____ </div>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2000.
- 봉성종 등, 『유통식품의 수거,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년도 식품 및 식품첨가물생산실적』, 2002.
- _____, 『식품공전』, 2003.
- 이의경·장선미·정기혜·정영호·이견직 외,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2.
- 정기혜, 「수입식품에 관한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인식 및 관리현황」, 『보건사회연구』, 제18권 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6.
- _____, 「식품 안전관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9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4.
- 정기혜, 강성호,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실태 및 운용방안 개선,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 정기혜, 김정근, 『수입식품의 안전성 시책 평가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2.
- _____, 『건강보조식품의 유통 및 가격체계 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12.
- 정기혜, 강성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현황과 활용방안」, 『보건복지포럼』, 제3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8.
- 정기혜, 백화중, 김정근, 김영래, 『식품안전관리의 효율화, 과학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12.
- 정기혜,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 정기혜, 광노성, 김영래, 윤시몬,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8.
- 천석조 등, 『식품의 제조 및 유통단계별 유해물질 동정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999.
- 천석조, 오원택, 『식품적정제조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연구소, 1992.
- 최성락, 『식품위생법의 이해』, 2002.

『관련 웹사이트』

<http://www.kfda.go.kr>

<http://www.aid.de>

<http://www.bfr.bund.de>

<http://www.bll.de>

<http://www.bmu.de>

<http://www.bvl.bund.de>

<http://www.efsa.eu.int>

<http://www.efsa.eu.int>

<http://www.europa.eu.int>

http://www.europa.eu.int/comm/agriculture/agrista/2002/table_en/en37.htm

<http://www.europa.eu.int/comm/dg24>

http://www.europa.eu.int/comm/food/index_en.html

http://www.europa.eu.int/comm/food/fs/inspections/index_en.html

<http://www.fda.gov>

<http://www.fibl.org>

<http://www.oeko.de>

<http://www.methodensammlung-lmbg.de/>

<http://www.nutriinfo.de>

<http://www.verbraucherministerium.de>

<http://www.waswiessen.de>

부록

[부록 1]	식품검사제도 관련 중복법령 현황	147
[부록 2]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156
[부록 3]	식품안전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173
[부록 4]	식품안전위원회의 업무개요 및 주요회의 내용	174

[부록 1] 식품검사제도 관련 중복법령 현황

<부표 1-1>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제22조(Overlapped laws of food inspection, Act)

제17조 (출입·검사·수거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17조의2, 제20조의2 및 제32조의2제8항에서 같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을 하는 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2.8.26>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개정 1991.12.14>

제17조의2 (식품 등의 재검사)

①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등을 검사한 결과 당해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적절한 검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영업자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검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④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식품 등에 대하여 재검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수수료 및 보세창고료등 재검사의 실시에는 따르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개정 1998.2.28> [본조신설 1995.12.29]

〈부표 1-1〉 계속(Continued)

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②삭제<1995.12.29>

③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88.12.31, 1991.12.14, 1995.12.29, 19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营业을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동향 후단의 중요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14, 1995.12.29, 1998.2.28, 2000.1.12>

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8.12.31, 1991.12.14, 2000.1.12, 2002.8.26>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1998.2.28>

〈부표 1-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

(Overlapped laws of lomeestic animal products inspection, Act)

제19조 (출입·검사·수거)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업자로 하여금 축산물의 검사결과 및 수출입실적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으로 하여금 영업장에 출입하여 축산물·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작업장·축산물운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을 제외한 그 이후의 판매·유통단계에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한다.<개정 1998.2.28, 1999.2.5, 2001.12.31>

②시·도지사는 미검사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출입하여 미검사품의 처리·가공·사용·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상황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축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를 하는 검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2조 (영업의 허가)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당해 시설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과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이 법에 위반하여 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제24조 (영업의 신고)

①제21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부표 1-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 및 제26조

(Overlapped laws of marine products inspection, Act)

제19조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조사·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표 1-4〉 인삼산업법 제12조 및 제15조

(Overlapped laws of Ginseng products inspection, Act)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제조의 신고 등<개정 2001.1.26>)

①인삼제조업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삼경작자가 자기가 생산한 수삼을 원료로 하여 자가제조한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수출 또는 도매의 목적으로 수집하는 자(이하 "수집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홍삼 또는 태극삼의 제조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인삼류제조업자"라 한다)는 그 신고사항중 시설의 임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 영업을 폐업·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④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1.26>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1.1.26>

⑥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전문개정 99.1.21 법5664]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개정 2001.1.26>)

①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홍삼·태극삼 또는 백삼을 연근별로 구분하여 제조하고, 당해제품이나 그 용기·포장등에 해당 연근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②인삼류를 제조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제조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26>

③농림부장관은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관계직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제조업소에 출입시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검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1]

〈부표 1-5〉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제27조

(Overlapped laws of rice products inspection, Act)

제19조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개정 1999.1.21>)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 2002.1.14>

②제1항이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6.8.8, 1999.1.21>

③삭제<1999.1.21>

제27조 (감독)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등 관계서류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표 1-6〉 먹는물관리법 제18조 및 제34조

(Overlapped laws of drinking water inspection, Act)

제18조 (영업의 허가등)

①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②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③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8.28>

④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검사를 받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1997.8.28>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1일취수량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1997.8.28>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营业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8.28, 2000.1.7>

제34조 (출입·검사·수거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먹는물관련영업으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관련영업자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사무소·창고·제조소·저장소·판매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원재료·제품·용기·포장 또는 제조·영업시설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용기·포장등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영업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8.28, 19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표 1-7〉 주세법 제6조 및 제51조

(Overlapped laws of Alcoholic beverage products inspection, Act)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주류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물료를 섞는 것은 이를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③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 및 용기주입제조장은 이를 각각 주류제조 및 주류제조장으로 본다.

④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 2인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전의 주류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영위하는 주류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표 1-8〉 염관리법 제3조 및 제10조

(Overlapped laws of salt products inspection, Act)

제3조 (염제조업등의 허가<개정 1999.2.5>)

①염전을 개발하거나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염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1. 염전에서 염의 제조
2. 천일식기제조법에 의한 결정체염의 제조

②삭제<1999.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요건 및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제10조 (품질검사등)

①염제조업자가 생산한 염과 수입한 염은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염의 사용목적상 품질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품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2.5, 2001.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하는 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지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③품질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염의 규격 및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2.5, 2001.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10조의2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은 품질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검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에 품질검사업무를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월 이상 품질검사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품질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때

[본조신설 2001.12.31]

[부록 2]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Basic Act's Food safety in Japan)

일본의 식품안전기본법

2003년 5월 23일 공포(법률 제48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화의 진전(進展), 기타 국민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적확(的確)하게 대응하는 것의 긴요성(緊要性)을 감안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식품관련사업자의 책무 및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시책(施策)의 책정(策定)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으로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총합적(總合的)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 있어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약사법(소화 35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함에 있어 기본적 인식)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국민의 건강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기본적 인식하에 강구되어 행하여져야 한다.

제4조(식품공급행정(行程)의 각 단계에 있어서의 적절한 조치) 농림 수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식품의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국내·외 식품공급 행정(이하 「식품공급행정」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식품공급행정의 각 단계에 있어 적절히 강구되어 행하여져야 한다.

제 5 조(국민건강에의 악영향의 미연 방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配慮)하면서 과학적 지견(知見)에 기초하여 강구되도록 함으로서 식품섭취로 인한 국민건강상의 악영향이 미연에 방지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제6조(국가의 책무(責務)) 국가는 3조에 정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이라고 한다)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종합적(總合的)으로 책정(策定)하고 실시하는 책무(責務)를 가진다.

제7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責務))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기초로 하여 해당 지방공공단체 구역의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모든 조건에 부합되는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하고 실시하는 책무(責務)를 가진다.

제8조(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責務)) 비료, 농약, 사료, 사료첨가물, 동물용의약품, 기타 식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농임어업의 생산자재, 식품(그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되는 농임수산물을 포함한다) 또는 첨가물(식품위생법(소화22년 법률 제233호) 제2조제2항에 규정하는 첨가물을 말한다) 또는 기구(동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기

구를 말한다) 또는 용기포장(동조 제 5 항에 규정하는 용기포장을 말한다)의 생산, 수입 또는 판매, 기타 사업활동을 하는 사업자(이하 「식품관련 사업자」라고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을 할 때에는 스스로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1차적 책임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식품공급 행정의 각 단계에서 적절하게 강구한다.

2. 제1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식품관련 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을 할 때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되는 식품, 기타의 것에 관한 정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식품관련사업자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責務)를 가진다.

제9조(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노력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한다.

제10조(법제(法制)상의 조치등)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시책(施策)의 책정(策定)에 관련한 기본방침

제11조(식품건강영향평가의 실시)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또는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서, 식품에 함

유되었거나 식품이 그러한 요인·상태에 있을 우려가 있는 해당식품을 섭취함에 따른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식품건강영향평가」라 한다)가 시책(施策)마다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1) 해당 시책(施策)의 내용으로 보아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필요하지 않을 때
- (2)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의 내용 및 정도가 명확할 때
- (3)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써 미리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겨를이 없을 때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 사후에 지체없이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식품건강영향평가는 현재 수준의 과학적 지견(知見)에 기초하여 객관적이고 중립·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국민의 식생활 상황 등을 고려하고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근거한 시책(施策)의 책정(策定))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식품섭취로 인한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식생활 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해당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아울러 그 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시책(施策)에 관한 정보의 제공, 해당 시책(施策)

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기회의 부여, 기타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사태 대처 등에 관한 체제의 정비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식품섭취에 따른 사람의 건강에 관련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 및 해당 사태의 발생방지에 관한 체제의 정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계(連携))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식품공급행정의 각 단계에 있어 적절히 강구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상호 밀접한 연계(連携)하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6조(시험 연구 체제의 정비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과학적 견지(知見)에서 충실히 노력하는 것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에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시험 연구 체제의 정비, 연구개발의 추진 및 그 성과의 보급, 연구자의 양성,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국내외의 정보 수집, 정리 및 활용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국민 식생활 환경의 변화에 신속대응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정리 및 활용,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표시제도의 적절한 운용 확보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식품표시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식품표시 제도의 적절한 운용 확보, 기타 식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학습 등)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교육 및 학습의 진흥과 함께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홍보 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配慮))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함에 있어 해당시책(施策)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고려(配慮)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21조(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사항 결정 및 공표) 정부는 제11조에서 전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관하여 그들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 사항(이하 「기본적 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2. 내각총리대신은 식품안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기본적 안을 작성하고 내각회의(閣議)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3.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 내각회의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본적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4. 전2항의 규정은 기본적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도 준용한다.

제3장 식품안전위원회

제22조(설치) 내각부에 식품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소관사무)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담당한다.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2) 제24조(條)의 규정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구하여야 할 시책(施策)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통해서 관계대신에게 권고하는 것.

(4)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강구된 시책(施策)의 실시 상황을 감시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을 통해서 관계대신에게 권고하는 것.

(5)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구해야 할 시책(施策)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기재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는 것.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 기재한 사무와 관련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의 교환을 기획하고 실시하는 것.

(8) 관계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에 관한 사무의 조정을 실시하는 것.

2. 위원회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기초한 식품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관계대신에게 식품건강영향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경우 또는 제1항 제 3 호 혹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통지와 관련되는 사항 또는 그 권고의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4. 관계 각 대신은 제1항 제 3 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근거하여 강구한 시책(施策)에 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의견청취) 관계 각 대신은 다음에 기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관계 각 대신이 동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동법 제29조 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고 하는 경우, 동법 제4조 2의 규정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동법 제 5 조 제1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개폐(改廢)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6조에 규정하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정하려고 하는 경우, 동법 제7조 제1항(동법 제29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혹은 동법 제10조 제1항(동법 제29 제3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기준 혹은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19조의 1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

(2) 농약취체법(取締法)(소화23년 법률 제82호) 제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정농약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3조 제2항(동법 제15조의 2 제6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기준(동법 제3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에 기재한 경우는 해당하는지 여부의 기준을 제외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3) 비료취체법(取締法)(소화25년 법률 제127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규격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4) 가축전염병예방법(소화26년 법률 제166호) 제2조 제1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4조 제1항의 신고 전염병을 정하는 농림수산성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62조의 정령의 제정 혹은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5)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소화28년 법률 제35호)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료첨가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준 혹은 규격을 설정, 개정 혹은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의 6의 규정에 의한 판매금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6) 도축장법(소화28년 법률 제114호) 제9조 제1항 제 3 호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 혹은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10조 제 5 항의 정령의 제정 혹은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7) 수도법(소화32년 법률 제177호) 제4조 제2항(동조 제1항 제1호내지 제 3 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8) 약사법 제14조 제1항(동법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의약품, 의약부외품 혹은 의료용구(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4조의 4 제1항(동법 제19조의 4 및 제 23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준용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4조의 5 제1항(동법 제19조의 4 및 제23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동법 제19조의 2 제1항 혹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승

인을 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동법 제83조의2 제1항의 농림수산물성령을 제정 또는은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9) 농업용지의 토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법률(소화45년 법률 제139호) 제2조 제3항의 정령(농업용지의 토양에 잔류된 물질에 기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이 생산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정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정령(농업용지 이용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축산물이 생산된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그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요건을 정하는 것에 한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10) 식용조류(食鳥) 처리 사업의 규제 및 식용조류검사에 관한 법률(평성2년 법률 제70호) 제11조, 제15조 제 5 항 또는 제19조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11) 다이옥신류대책특별조치법 (평성 11년 법률 제105호) 제6조 제1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12) 우해면상뇌증대책특별조치법 (평성 14년 법률 제70호)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후생노동성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경우.

(13) 전(前) 각호로 정하는 것 이외에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관계 각대신은 전항 단서의 경우(관계 각대신이 제11조 제1항 제 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해당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후 정해진 기간 안에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제1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관계 각대신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시책(施策)을 책정(策定)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설명, 기타 필요한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위탁) 위원회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립행정법인, 민법(명치29년 법률 제89호) 제34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사업자, 기타 민간단체, 도도부현의 시험연구기관 또는 학식과 경험을 가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긴급시의 요청 등) 위원회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관계행정기관의 시험연구기관에 식품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조사, 분석 또는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가 관계행정기관의 시험연구기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요청에 대하여 조사, 분석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긴급사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각대신에게 독립행정법인 국립건강·영양연구소법(평성11년 법률 제180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 또는 독립행정법인 농림수산소비기술센터법(평성 11년 법률 제183호) 제12조 제1항, 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법(평성 11년 법률 제192호) 제12조 제1항, 독립행정법인 농업환경기술연구소법(평성 11년 법률 제194호) 제12조 제1항, 독립행정법인 식품종합연구소법(평성 11년 법률 제196호) 제12조 제1항 또는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터법(평성 11년 법률 제199호)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조직) 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조직한다.

2. 위원 가운데 3인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29조(위원의 임명) 위원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하여 우수한 식견(識見)을 가진 자 중에서 양의원(兩議院)의 동의를 얻어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2.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으로 양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 임명 후, 최초 국회에 양의원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양의원의 사후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은 즉시 그 위원을 파면하여야 한다.

제3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補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은 재임될 수 있다.

3.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 해당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파면) 내각총리대신은 위원이 심신의 사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직무상의 의무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비행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이를 파면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복무) 위원은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그 직책을 사임한 후에도 동일하다.

2. 위원은 재임중 정당, 기타 정치적 단체의 임원이 되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3. 상근위원은 재임중 내각총리대신의 허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를 받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기타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

제33조(위원의 급여) 위원의 급여는 별도 법률로 정한다.

제34조(위원장)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고 위원의 호선에 의해 상근위원 중에서 정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3.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경우 미리 지명하는 상근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출석에 없으면 회의를 개최, 의결할 수 없다.

3.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출석자의 과반수로 이를 결정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위원장 결정에 의한다.

4.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는 경우의 제2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전(前)조 제3항에 규정하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간주한다.

제36조(전문위원) 위원회에 전문사항을 조사·심의시키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해당 전문사항에 관한 조사·심의가 종료한 경우 해임하는 것으로 한다.
4. 전문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37조(사무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시키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 사무국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업무를 관리한다.

제38조(정령으로 위임) 본 장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가운데 양의원의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위원의 임명) 이 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회위원의 임명에 관하여 국회의 폐회 또는 중의원의 해산(解散)으로 양의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소화24년 법률 제252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가운데 제13호2의 2를 제13호2의 3으로 하고, 제13호2를 제13호2의 2로 하고, 제13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13의2 식품안전위원회의 상근위원

제1중 가운데 제19호2의 2를 제19호2의 3으로 하고, 제19호2를 제19호2의 2로 하고, 제19호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19의2 식품안전위원회의 비상근위원

별표 제1 관직명 가운데 「지방재정심의회위원」을 「지방재정심의회위원 식품안전위원회의 상근위원」으로 개정한다.

제4조(약사법 및 채혈 및 혈액공급알선 취체법(取締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약사법 및 채혈 및 혈액공급알선 취체법(取締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96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5조의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제25조의 2 식품안전기본법(평성15년 법률 제4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 제8호 가운데 「(동법 제23조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삭제하고 「의료용구」를 「의료기기」로, 「제14조의 4 제1항」을 「제14조의 3 제1항(동법 제210조 제1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혹은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하여(讀み替える) 적용되는 동법 제1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승인을 하려는 경우, 동법 제14조의 4 제1항」으로 개정하고, 「및 제23조」를 삭제하고, 「제14조의 5 제1항」을 「제14조의 6 제1항」으로 개정한다.

제 5 조(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12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6조 다음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식품 안전 기본법의 일부 개정)

제16조의2 식품안전기본법(평성 15년 법률 제4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3항 가운데 「독립행정법인 농업기술연구기구법(평성 11년 법률 제192호) 제12조 제1항」을 「독립행정법인 농업·생물계 특정산업 기술 연구 기구법(평성 11년 법률 제192호) 제19조 제1항」으로 개정한다.

제6조(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개정) 독립행정법인 수산종합연구센터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평성 14년 법률 제131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다음 1조를 추가한다.

(식품안전기본법의 일부 개정)

제17조 식품안전기본법(평성 15년 법률 제48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가운데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으로 개정한다.

제7조(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내각부 설치법(평성 11년 법률 제89호)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16.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환경의 총합적(總合的)인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 제3항 제27호의 다음에 다음 1호를 추가한다.

27의2 식품안전기본법(평성 15년 법률 제48호) 제21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본적 사항의 책정(策定), 동법 제 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식품건

강영향평가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사무조정제에 관한 것.

제37조 제3항의 표 민간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위원회의 항 다음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제8조(검토) 정부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시책
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 기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를 감안하여 본 법
률의 시행 상황에 관한 검토를 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에 기초한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부록 3] 식품안전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식품안전위원회에 관한 보고서

I. 식품안전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위원 7명: 상근 4명, 비상근 3명)

- 독성학 등의 전문가
- 미생물학 등의 전문가
- 유기화학(화학물질) 등의 전문가
- 공중위생학 등의 전문가
- 식품의 생산, 유통시스템 등의 전문가
- 소비자 의식, 소비행동 등의 전문가
- 정보교류의 전문가

2. 전문조사회 구성(전문위원: 약 200명 정도)

☐ 식품안전위원회

- 기획
- risk communication
- 위기관리(식품사고 등)

☐ 평가 팀

- 화학물질계 평가 팀
(식품첨가물, 농약, 동물용 의약품, 기구, 용기포장, 화학물질, 오염물질 등)
- 생물계 평가 팀
(미생물, 바이러스, 곰팡이·자연 독 등, BSE 등)
- 신 식품 등 평가 팀
(유전자 식품, 신개발 식품, 사료·비료 등)

3. 사무국 구성 (사무국원: 54명, 기술참여<비상근>: 25명)

☐ 사무국(사무국장, 차장, 4과 1관)

- 총무과
- 평가 지원과
- 광고홍보 과
- 위기관리·정보과
- risk communication 관리

[부록 4] 식품안전 위원회의 업무 개요 및 주요 회의 내용

식품안전 위원회의 업무 개요 및 주요 회의 내용

1. 식품안전 위원회의 업무 개요

식품안전 위원회의 업무 개요는 아래와 같다.

- 가. 최신의 과학적 지식에 기인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 공정한 risk평가를 실시하고 이것에 기인하여 risk관리기관(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등)에 권고, risk 관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 나. 식품사고 등에 있어서의 긴급 시 대응
- 다. 내외의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일원적 수집, 정리 및 식품안전에 관한 폭넓은 risk communication 실시

2. 식품안전 위원회의 회의 기간 및 회의 내용

7월 1일부터 8월 30일 현재까지 주 1회씩 8회 회의를 실시하였고, 주요 회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

- 제1회 회의: 식품안전 위원회 운영규칙 및 식품안전 위원회 공개에 관해서
- 제2회 회의: 전문 조사회 운영규정 및 식품안전 모니터 제도에 관해서
- 제3회 회의: 전문 조사회의 역할 및 구성, 식품안전 위원회 홈 페이지 운영
- 제4회 회의: 식의 안전 전화 설치에 관해서
- 제5회 회의: 약사·식품위생 심의회 회의 보고 및 위원회의 의견 청취
- 제6회 회의: 유전자 식품의 안전성 조사 및 risk communication에 관해서
- 제7회 회의: 식품안전 기준법 제 11조 1항 1호의 식품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명확히 필요 없을 때에 관해서 및 특정보건용 식품에 관해서
- 제8회 회의: 식품안전 기준법 제 11조 1항 1호의 식품건강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명확히 필요 없을 때에 관해서 및 식품건강 영향평가를 의뢰한 사항

연구과제(세부과제) 요약서

세부과제 고유번호			공개가능여부	㉔, 부
연구과제명	식품검사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부과제명				
연구책임자	성 명	정기혜	주민등록번호	550321-XXXXXXX
	소속 기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자우편	khchung@kihasa.re.kr	전화번호	02-353-4701

○ 연구목표

<p>이 연구의 목적은 날로 확대되는 여러 종류의 식품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예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식품안전 검사제도를 효율화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이 연구목적이며, 지난 3년간 부적합 처분 결과를 분석하여 검사품목과 검사항목을 조정함이 이 연구의 세부목적이다.</p> <p>첫째, 검사제도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p> <p>둘째, 선진 외국의 검사제도 실시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p> <p>셋째, 현행 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업체, 전문가들의 의견 조사</p> <p>넷째, 검사결과 분석 및 부적합 내용 분석</p> <p>다섯째,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p>

○ 연구내용

1. 식품검사제도의 실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첫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수출입식품의 검사제도 현황 파악
- 둘째, 검사제도 관련 규정 검토
- 셋째, 현행 검사제도의 문제점 파악

2. 선진 외국의 식품검사제도 실시 현황 파악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첫째, 일본, 미국, EU 등의 식품검사제도 현황 파악
- 둘째, 국내 식품검사제도 개정에 적용할 제도검토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부적합 처분 품목 및 위해중심 검사항목으로의 개정

- 첫째, 최근 3년간 식품검사결과 분석 및 부적합 항목, 식품 등 분석
- 둘째, 식품검사제도 항목, 품목 개정안 도출

4. 검사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

- 첫째, 검사관련 항목, 품목 조정
- 둘째, 외국의 제도 중 도입가능 제도 검토
- 셋째, 항목조정 등에 필요한 관련 법 제개정 방안 모색

○ 연구성과(응용분야 및 활용범위포함)

1. 연구결과는 국제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식품검사제도를 효율화하여 식품업계의 발전과 식품위생정책분야의 발전을 추구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기본자료로 충분히 활용될 것임.
2. 인력과 예산 등의 집중 투입이 요구되는 식품검사부분의 중앙정부간, 중앙부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업무 재편을 통한 적정 기능 배분을 실현하여 식품안전수준을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식품검사제도 효율화를 위한 Negative system 도입을 검토함.
3. 이를 통한 우리나라 식품위생안전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에 기여할 것임.

Keywords (5개 내외)	한글	식품검사, 검사제도, 효율화, 제도개선
	영문	<i>Food Inspection, Effectiveness, System Improvement</i>

주 의

1. 이 보고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사업의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한 용역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